

2024년도 제28차 정기총회

**2024년도
제28차(통합 제30회)
정기총회 자료집**

일 시 : 2024년 2월 6일(화) 18:30-21: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 제27차 정기 총회 회의록	
■ 임시총회(통합 제29차) 회의록	
■ 2023년 감사 보고	
■ 2023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사업 총평	
II. 사업보고 및 평가	
【1】 조직 사업	
【2】 평화·통일 사업	
【3】 정보·홍보 사업	
【4】 회원 사업	
【5】 연대 및 협력 사업	
【6】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2023년 결산보고	
■ 2023년 평화회원상	
■ 임원 선출 및 승인(안)	
■ 2024년 사업계획(안)	
사업기조와 방향	
부설기구 갈등해결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2024년 예산안	
■ 특별 안건	
■ 부록	
평화여성회 정관	
평화여성회 조직도	
2024년 총선젠더정책(여성과 평화) 자료 등	
2023년 성명서 목록	
회원가입서	

2024년 정기총회 순서(안)

- 일시: 2024년 2월 6일(화) 오후 6시 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소통방(지하)

※ 회원등록 및 인사 나누기 (오후 6:00~6:30)

I부. 정책토론회(오후 6:30~7:30)_사회 여혜숙 회원

- 주제 : 2024년 총선과 한반도 전쟁 위기, 여성평화운동을 위한 제안
- 발제 : 안김정애 회원

II부. 정기총회 (오후 7:30~9:00)

1. 개회 선언
2. 서기 임명
3. 성수 보고
4. 회순 채택
5. 전차 회의록 낭독
6. 2023년 감사보고
7. 2023년 사업보고와 승인
8. 2023년 결산보고와 승인
9. 평화회원상 시상
10. 임원 선출 및 승인
11. 2024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2. 2024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4. 특별 안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신청의 건
15. 회의록 받음
16. 폐회

2023년도 제27차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통합 제29차) 회의록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3년도 제27차 정기총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9:15~21: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서기 : 김지선, 이덕경

□ 주요 내용

사전행사: 1. 2023년 정전협정 70년 평화만들기 “여성들, 길 없는 길을 만든다.”
김귀옥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의 발제 후 여혜숙 갈등해결센터 소장의
브레인스토밍과 자유토크 진행

1. 개회선언

- 김정수 의장이 19:15에 개회를 선언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 한정숙 이사장의 인사말: 여성들의 참여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자.
- 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 대표의 축하 인사: 반평화의 시기, 평화여성회와 함께 평화를 만들자.

2. 서기임명

- 김지선, 이덕경 회원을 추천하여 모두가 박수로 가하여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3. 성수보고

- 손빛나리 활동가가 재적회원 42명 중 총 22명의 참석(위임 포함)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정수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김정수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다.
- 정관개정 및 승인과 임원선출 및 승인 순서를 바꾸기를 여혜숙 회원이 제안하고 정현백 회원이 동의, 김성은 회원의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5. 전차 회의록 낭독

- 이덕경 회원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 한정숙 회원이 전차 회의록 5쪽 5번 김정은 회원을 '김성은'으로 바꾸기를 요청하였고, 5쪽 6번 감사보고에 안수경 '회원'을 안수경 '감사'로 바꾸기를 요청, 이를 수정하기로 하다. 한정숙 회원이 동의, 김귀옥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회

의록을 받다.

6. 2022년 감사보고

- 박유희 감사가 작성한 사업 감사 보고서를 안수경 감사가 대독하다.
안수경 감사가 회계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다.

7. 2022년 사업보고와 승인

- 김정수 의장이 2022년 사업 총평을 보고하다.
- 여혜숙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을 보고하다.
- 김귀옥 원장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을 보고하다.
- 김성은 회원이 2015년 WCD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Crossings) 상영한 것 모두를 국내연대(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활동 부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다. 김정수 의장이 보관용 총회자료집에 보충하겠다고 답하다.
- 이애덕 회원이 총회 자료집 85쪽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명단에 나와 있는 본인의 소속을 '동작초'에서 '흑석초'로 수정할 것을 요청 하다.
- 이권명희 회원이 동의하고, 한정숙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다.

8. 2022년 결산 보고와 승인

- 김정수 상임대표가 평화여성회 결산을 보고 하다.
- 한정숙 회원과 정현백 회원이 93쪽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결산 중 지출부 일반회계 총계 금액과 합계 금액 13,324,483을 13,245,483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여, 이 부분이 단순한 오타임을 확인한 후, 김정옥 회원이 동의하고 이애덕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가 가하여 이를 받다.

9. 2023년 평화회원상 시상

- 김지호, 이덕경, 윤여령 회원에게 2022년 평화회원상을 시상하다.

10. 2023년 임원선출 및 승인

- 김정아 인선위원장이 2023년 연임 및 신임 임원 선출안을 설명하다.
기존 이사인 김성은 , 여혜숙, 김정수, 김귀옥, 한정숙의 임기가 2023년 2월 9일로 만료하여 후임 이사로 김성은 , 여혜숙, 김정수, 김귀옥, 한정숙이 중임하는 것으로 하고, 신임이사로 김형규, 이권명희, 이애덕 회원이 감사는 안수경이 연임하고 상임대표는 김정수가 연임하기로 하다. 이중 신임이사인 김형규, 이권명희, 이애덕 회원은 미등기 이사로 하는 것으로 하다.
- 김성은 회원이 동의하고, 김정옥 회원이 재청하고 참석자 모두가 임원선출안에 찬성하다.

11. 정관개정 및 승인

- 김정수 의장이 정관개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설명하다.
- 김귀옥 회원이 111쪽 정관개정안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법적 용어인 비영리임의단체로 바꿀 것을 제안, 추후 법적 자문을 받아 용어를 통일하기로 답하다.
- 한정숙 회원이 108쪽 '회원의 제명'이 아니라 '회원의 징계'로 바꿀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 고유경 회원이 107쪽 19조 2항 추가개정안인 '인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다'를 '이사회에서 구성한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1항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약칭('평화여성회')을 삭제하자고 김성은 회원이 제안하여 이 안을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 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되다.
- 조영미 회원이 제5장 이사회 24조 3항의 '이사 중 연장자'표기를 '호선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다.
- (김민문정 여성연합 상임대표) 106쪽 14조 7항의 개정안은 15조 4항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여 옮기기로 하다.
- 조영미 회원이 107쪽 19조 2항을 '인선위원회는 5인 내외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로 수정 제안하고 모두 이를 받아들이다.
- 정관개정에 대해 거수로 투표하여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승인하다.

12. 2023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정수가 본회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김귀옥 원장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여혜숙 소장이 부설 갈등해결센터의 사업계획안을 보고하고 자료집에 2022년 것이 들어가 있어서 2023년 내용으로 수정하여 재수룩하기로 하다.
- 김성은 회원이 동의하고, 김정옥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가 가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13. 2023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 김정수 상임대표가 평화여성회, 부설기관의 예산안을 보고하다.
- 조영미 회원이 자료집 6쪽 2023년 예산안 지출부 '미지급금 연대회의비'를 '연대사업비'로 변경 요청하고 한정숙 회원이 결산안 91쪽 수정도 같이 할 것을 요청하여 자료집을 수정하기로 하다.
- 2022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이 동의 재청받기로 김정수 의장이 제안해서 회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이다.
- 김정아 회원이 동의하고, 손희정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가 가하여 이를 받다.

14. 기타 토의

- 이애덕 회원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 확대를 위한 평화여성회 홍보 방법을 알기쉽게 만들 것을 제안하다. 김귀옥 회원은 한 쪽짜리 간단하고 알기쉬운 리플렛 제작을 제안하다. 아울러 평화여성회 홈페이지 일원화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다.
- 한정숙 회원이 요청하여 98페이지 2022 후원금 현황보고 현황 7번 신낙균 회원 후원금의 컴마 위치를 수정하기로 하다.

15. 회의록 받음

- 이덕경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다. 정현백 회원이 받기로 동의하고 손희정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회의록 문장의 윤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16. 폐회

- 21:00에 김정수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의장 상임대표 김정수 (법인)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23년도 임시총회(통합총회 제29차) 회의록

- 일시 : 2023년 8월 30일(수) 19:30~20:05
- 장소 : 온라인 ZOOM 방식
- 서기 : 김지선, 김은희
- 주요 내용

1. 개회선언

- 김정수 의장이 19:30에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총회를 시작하다.
- 한정숙 이사장이 간단하게 인사말 하다. 정관 일부 개정과 신임임원 선출
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2. 서기임명

- 임시총회 서기로 김지선, 김은희 회원을 추천하여 이명희 회원 동의, 김성은 회원 재청, 모두가 박수로 가하여 임시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3. 성수보고

- 김은희 활동가가 재적 회원 100명 중 참석 18명, 위임 33명으로 총 51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김정수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4. 회순채택

- 김정수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고, 모두 가하여 회순으로 채택하다.

5. 안건 의결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은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원격수단으로 할 수 있다.

(1)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김정수 의장이 정관 일부 개정의 사유와 신규조문 비교표를 개정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다.

정관개정 신규조문 비교표		
개정 전	개정 내용	개정 후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비영리민간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변동 없음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혹은(삭제) 비영리 민간(삭제)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가 국세청으로부터 기부금지정단체 재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함.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할 수 없다고 영등포세무소 직원(기부금지정단체 재지정 업무 담당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삭제함 - 비영리민간법인 ==>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민간) 삭제함 : 국세청에서 샘플로 보내 준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개정안에 반영함 - 샘플 문구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여혜숙 회원 동의와 안수경 회원 재청, 참석자 18명 모두 가하여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의결하다.

(2) 신임 임원 선출의 건

- 김정아 인선위원장이 신임 임원 선출안(안김정애 회원을 신임이사로

- 추천하는 건)을 설명하다.
- 김성은 회원의 동의와 김귀옥 회원의 재청, 참석자 모두의 박수로 신임 임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다.

6. 회의록 받음

- 김지선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다. 안김정애 회원의 동의, 박인혜 회원의 재청,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7. 폐회

- 20:05에 김정수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의장 상임대표 김정수 (법인)

2023년 감사 보고

2023 사업 감사 보고

2023년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 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감사 일시 : 2024. 1. 23.

감사 장소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감 사 : 안 수 경

2023년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계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본 감사는 본회를 비롯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포함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의 회계 기간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감사개요

제출한 결산보고서,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통장 등의 대조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감사의견

- 1) 감사 결과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을 잘 비치하고 있었고, 계산도 정확하였으며, 통장과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 김은희 회계담당자의 성실하고 꼼꼼한 회계 집행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23일

감사 안 수 경



2023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23년 사업 총평

II. 2023년 사업 보고 및 평가

I. 2023년 사업 총평(안)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단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종전과 평화 원하는 대부분 시민들의 기대와 반대로 남북관계는 9.19 군사분야 합의 폐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정책 강화와 “주적”으로 명명하기, 일상화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한다는 한미 핵억지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과 군사훈련 정례화 구축, 이에 따른 한·미·일 준군사 동맹화, 북·중·러 삼각연대의 발전 등으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우발적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되었다.

남북이 서로를 주적으로 명명하는 적대(대적) 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합의했던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 특수관계”라는 개념·특수성을 폐기하고 전쟁하는 국가 대(對)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2024년 1월 본회의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현재, 북한헌법에 명시된 7.4 공동성명의 원칙(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폐기되고, 대신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하는 영토조항을 포함하는 헌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해외의 민간교류 연대체였던 6.15 북측위, 범민련 북측위 등도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남북 민간교류와 소통의 창구였던 6.15 공동선언실천 공동위원회의 존립 기반 자체가 와해된 것이다. 이는 남북민간교류에도 커다란 충격이고, 더욱이 남북여성교류를 주요 사업의 하나로 진행해 왔던 평화여성회의 향후 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북한여성과의 관계 형성과 교류협력의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데 이어 2023년 8월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이 지속되면서, 세계는 2개의 전쟁이 동시에 계속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과 군사협력의 강화는 북중러가 협력할 명분을 제공하였고, 중국-대만 관계의 긴장고조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높아지는 군사적 위기로 인해 제3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모두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외교,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 무시, 이로 인한 일본 정부와 전법 기업에 면죄부 주기,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적대,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에 대한 빨갱이 몰이와 역사왜곡,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감세정책 강화, 후쿠시마 핵오염수 홍보에 세금 사용,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상황,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실망이 계속되면서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

통령과 정부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고조되고, 시민들은 매 주말 용산 대통령실 앞, 시청광장·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반민주적 통치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외쳤다. 이러한 비판과 저항은 2023년에 이어 2024년 1-2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평화 우선의 접근(Peace First Approach)”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by Force)” 중심의 군사주의를 비판했다.

2020년 7월 27일 출범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Korea Peace Appeal)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고 시민들에게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2023년 9월 유엔총회에 지난 3년 동안 모은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평화여성회는 2023년 1월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 가족부나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반성평등 정부인 동시에 통일부에서 ‘평화’를 금기어로 하고 화해와 공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파트너인 북한을 적대화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외치며 남북관계와 외교 영역에서도 대결과 군사주의적 문제해결을 지향한 ‘반평화적 정부’라 평가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전체 국민·시민과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정부부처의 보조금 사업을 매우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평화여성회는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 보다는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2023년, 한국 전쟁을 종식하고, 전쟁을 예방하며,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평화여성회는 2023년 한해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과 전쟁을 예방하며, 동시에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평화운동에 집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전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강화,” 그리고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2023년 평화여성회에서 전개한 주요 활동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과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전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2020년 7월 27일 시작되어 2023년 9월 말까지 3년 동안 진행되었다. 7대 종단을 포함하

여 약 700여 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는데, 여성단체들의 참여는 처음부터 그리고 3년 내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여성단체들의 참여가 적은 상황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2021년에는 기독교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여성·청년이 만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했다. 2023년 올해는 주로 서명운동에 매진했다. 평화여성회 회원 중 이 캠페인에 집중할 팀을 구성하여 ‘왜’ 여성들이 종전평화 캠페인에 참여해야 하는지, 논리를 발굴하고 캠페인을 소개하는 작은 팸플릿을 제작했다. 올해 진행한 주요 서명 활동은 1월 여성연합 총회, 3.8 세계여성의날 행사(시청 앞 광장), 5월 경기여성평화걷기(파주 임진각 일대), 6월 여성의전화 창립기념행사(한강 둔치), 그리고 매주 토요일 진행된 시민사회 캠페인(일제하 강제 동원,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이슈 대응)에서 서명 활동 참여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2.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은 정전 70년을 맞이한 2023년 그 어느때 보다 활발했다. 평화여성회는 시민평화포럼, 6.15 남측위, 민화협 등 기존의 연대활동에 더하여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Korea Peace Appeal),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일제 하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요구,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폐기에 대한 규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비판하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등 이슈와 아젠다 중심으로 구성된 연대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2023년 국내연대 활동에서 평화여성회가 가장 기여한 부분은 2023년 제주여성평화활동가 워크숍을 기획·조직·진행한 일이다. 평택, 군산, 성주(소성리), 제주 등 군사기지에서 활동하는 여성평화활동가들, 그리고 서울과 경기의 여성평화활동가들 33명이 제주 강정의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에 모여 1박 2일 워크숍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전국단위의 여성평화활동가 모임은 거의 최초로 기록되는 워크숍이다. 이렇게 평화여성회는 반군사주의·평화주의 여성활동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국제연대활동 차원에서는 2023년 GPPAC 동북아 연례회의(울란바타르 프로세스) 참석, 군사주의 반대 여성 국제회의 참석(필리핀), 그리고 유럽 EU본부와 EU의회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 어드보커시에 참여한 일이다. 여성의 경험과 젠더 관점에서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종식과 평화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노력을 통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에서 전쟁예방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한 한해였다.

3.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강화,”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상·하반기 개최된 교육활동 배우기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자신의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배움과 나눔을 통해 평화적 갈등해결 역량강화를 하였다.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맞춤형 평화교육으로 학생, 교사교육을 기획, 실행하였고 문제해결 대화모임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4.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성인지적 여성평화 담론 형성과 확산활동 전개하였다. <여성과 평화 포럼>을 2차례 개최하고, 『여성과 평화』 제8호(2024년 1월)를 발간했다. 연구원의 내부 의사소통과 여성과 평화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위원 워크숍>(2회)은 북토크와 토론회를 결합시켜 진행시켰다. 또한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의 공동 주최로 “전쟁의 허스토리와 경계의 여성들”(2023. 11. 3) 학술심포지엄과 강원도 화천군 평화기행(20인 내외 참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원 이사(13인)와 17인의 연구위원들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어렵고 바쁜 환경에서도 여성평화운동에 일조할 수 있었다.

5. “여성평화운동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기초 작업 진행”

평화여성회는 창립 26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디지털 자료로 전환, 아카이브를 구축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2023년은 서고와 사무실에 여러 자료들, 그리고 물건들을 정리하는 작업 중심으로 진행했다. 갈등해결센터 회원들은 센터 자료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등 함께 참여했다. 향후 회계자료, 회의자료, 문서자료를 더 정리하고 본회 출판물 목록작업, 그리고 통일과 평화 관련 외부 자료 목록화 등 작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은 2차례의 법인정관 변경과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을 위한 법인행정업무가 과도할 정도로 집중된 한해였다. 윤석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검찰통치를 지속하여, 통일부와 국제청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었다.

평화여성회는 2023년에도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지지 그리고 후원으로 종전평화캠페인과 한일 역사정의를 위한 연대,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현실 이해, 특히 2023년 정전 7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의 관점과 경험에서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성찰하는 활동,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축적된 운동과 교육, 그리고 연구의 성과는 2024년 보다 내실을 갖추고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우 어두운 시기,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한 한반도를 살아가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 2023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3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 2024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 승인, 신임 임원 선출 등

4)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2월 2일(목) 18:30~21:00,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 성원 보고 : 재적회원 42명 중 총 22명의 참석(위임 포함)으로 성원
- 주요 안건 : 2022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변경, 정관개정(안) 의결 등
- 1부 프로그램으로 정책토론회(주제: 2023년 정전협정 70년 평화만들기)를 김귀옥 회원 발제와 여혜숙 회원 사회 및 브레인스토밍으로 진행함

(2) 2023년도 임시총회(통합 제29차)

- 일시와 방식 : 2023년 8월 30일(수) 19:30~20:05, 온라인 ZOOM 회의
- 성원 보고 : 재적회원 100명 중 참석 18명, 위임 33명, 총 51명으로 성원
- 주요 안건 : 정관개정(안) 의결(2023년 2차 정관개정안으로, 상반기 승인받은 정관 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기부금 단체 지정 신청 시 문제가 될 조항이 확인되어, 통일부에 (재)개정 승인 신청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됨), 신임이사(안김정애 이사) 의결 등

(3) 2024년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 한정숙 이사장, 김정수(위원장/본회 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안김정애 이사, 김은희 활동가

①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12월 4일(월) 오후 2시,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안김정애, 김은희
- 안건 : 2023년 사업과 결산안 보고와 검토, 신임 상임대표 추천의 건, 임원(이사, 감사 등) 임기 확인, 2024년 사업방향 브레인스토밍, 총회 순서 검토와 사전 프로그램, 총회 방식(대면으로 진행),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의 건 등

②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4 1월 19일(금) 오후 1시,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한정숙, 김정수, 김귀옥, 여혜숙, 안김정애, 김은희
- 안건 : 2023년 사업 총평(안) 검토, 2024년 사업계획(본회와 부설기관)과 예산(안) 예산안 논의, 인선위원 추천, 평화회원상(차승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의 건 등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이사장 : 한정숙
- 이 사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김형규, 배현주, 안김정애, 여혜숙, 윤은주, 이명희, 이애덕 (존칭 생략, 가나다순)

3) 회의

(1) 2023년 제1차 이사회(통합 제61차)

- 일시와 장소 : 2023년 1월 27일(금) 12:00, 신촌 동강참치
- 참석 : 한정숙,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영, 배현주
- 안건 : 2023년 정기총회(2월 2일) 순서, 2022년 사업총평(안) 및 결산(안) 검토와 승인의 건, 평화회원상 후보, 평화여성회 신임임원 선출의 건,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와 승인의 건, 평화여성회 정관 개정안 검토의 건 등

(2) 2023년 제2차 이사회(통합 제62차)

- 일시 : 2023년 7월 21일(금) 17:00-19:0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참석 : 한정숙,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형규, 여혜숙, 이명희

- 안건 : 2023년 제1차 이사회회의록 확인, 2023년 정기총회 이사회회의록 확인, 개정정관 확인, 2023년 상반기 사업 및 결산(안) 검토,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와 승인, 2023년 하반기 사업계획 공유, 평화여성회 2023년 임시총회 개최의 건(안건 : 정관 개정, 신임임원 선출, 기타 안건 등) 등

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

- 위원장 : 김정수 (상임대표)

- 위 원 : 한정숙(이사장), 김정수(상임대표), 여혜숙(공동대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귀옥(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김은희 활동가(배석)

- 3) 회의

- (1) 1차 운영위원회

- 일시와 방식 : 2023년 3월 31일(금) 17:00~.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귀옥, 김은희
- 안건 : 2023년 총회 회의록 검토, 2023년 1~3월 본회와 부설기관 사업/활동과 회계 보고, 2023년 4~5월 사업계획 공유, 여성평화운동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기초작업 진행 안건 논의. 그 외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3기 국가행동계획” 진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성가족부 등에 문의 등 문제제기의 필요성 제기와 『여성과 평화』 8호 출판의 건 논의 등

- (2) 1차 운영위 연장회의

- 일시와 장소 : 2023년 4월 25일(화) 16:00~,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은희
- 안건 : 사무실 자료 정리, 2023년 이후 운영방안, 여성평화연구원 & 여성평화포럼 비용 분담 기준 마련, 4.27 시민평화회의 준비와 참여의 건 등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주 1회 혹은 격주 1회 시행. 일정 및 업무 공유. 주간 사업 논의.

4) 비고 : 2023년은 사무국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대표와 실무자의 소통으로 진행

2-2. 법인, 세무, 행정 업무

○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1) 법인등기변경 업무

- 일시 : 2023년 2월 중
- 내용 : 평화여성회 법인등기임원 임기 종료에 따른 중임 신고로 인한 법인등기 변경내용 발생하여 총회회의록 회원날인과 인감증명서, 등기임원 인감과 인감증명서 외 필요서류 구비하여, 법무법인 다름(오영나 법무사)에서 등기변경업무 대행하여 진행함

2) 통일부 2023년 법인보고 업무

- 일시 : 2023년 2월 27일
- 내용 : 평화여성회가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으로서 2022년도 연례보고 제출요청 공문에 따라, 양식과 첨부서류 등 구비하여 제출함

3) 정관개정 업무

(1) 1차 개정

- 일시 : 2023년 1~4월 / 5월3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발송 → 승인(6월12일)
- 내용 : 평화여성회 정관개정을 위하여, 총회 전 개정내용 검토와 개정 조항 문안 준비, 총회준비위원회, 이사회, 총회(의결)을 거쳐 법적 자문을 구함. 2023년 4월 중 통일부 법인변경 허가신청과 승인 후 평화여성회 홈페이지에 재개

(2) 2차 개정

- 일시 : 9월4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발송 → 승인(9월13일)
- 내용 : 영등포세무서 지정기부금단체 접수서류 검토 시 정관 규정 오류에 대한 수정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개정내용 검토, 8월 30일 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회의록과 참석(위임)확인서 작성하여 통일부에 서류 접수, 승인받은 정관 평화여성회 홈페이지에 수정 재개

4) 비영리민간단체 자체점검표 제출

- 일시 : 2023년 4월 24일

- 내용 : 통일부 요청으로 자체점검표(서식)와 회원명부(100명/생년월일, 주소, 가입일, 연락처) 제출

5) 통일부 “법인허가증” 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재발급

- 일시 : 2023년 8월 7일 → 재발급(8월16일)
- 내용 : 법인대표(이사장) 변경에 따른 수정 요청

구분	성명	임기	비고
변경 전	김성은	2011.01.21. ~ 2022.02.08.	
변경 후	한정숙	2022.02.09. ~ 현재	

- 제출서류

- ① 법인허가증 재발급 : 법인허가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재발급 : 변경신청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원본, 정관사본, 회의록사본, 대표자 기본인적사항과 경력

6) 기부금 지정단체 재지정 업무

(1) 1차 신청

- 일시 : 3분기(7월 10일 홈텍스신청/ 7월 12일 보완서류 제출(영등포세무서))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등→국세청)	추천기한 (국세청→기재부)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10	12.31

- 제출서류

- ① 7월 7일 : 법인설립허가증, 최근 3년 결산서와 공익활동보고서, 정관, 사업계획서(2023년~2027년/ 5년)
 - ② 7월 10일(보완)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선거운동확인서(대표자서명), 공익활동보고서(2017년~2022년까지 연도별), 공익법인 지정추천 검토양식 체크와 작성
- 홈페이지 업로드 통일부승인 개정정관, 단체소개 걸어온 길 (2017~2022년), 국세청과 통일부 링크 추가 (2021년 추가된 내용 감독기관 링크)

(2) 2차 신청

- 일시 : 4분기(9월 21일 국세청 홈텍스 신청)
- 제출 서류 : 1차와 동일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명세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홈페이지에 업로드

- 2023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23-48호)를 통해 재지정받음
- 공익법인 재지정 기간 : 2023.1.1.~2028.12.31. (6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 제38조제6항에 따른 한국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제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132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 2028.12.31. (6년간)

- (사)국가원로회의
- (사)한국색채학회
- (사)미래전략연구원
- (사)한국여성바둑연맹
- (사)한국인명구조견협회
- (재)우리교육연구소
- (재)신구도서관재단
- (사)세계교화갱보협회
- (사)한국독립피디협회
- (사)생화학분자생물학회
- (사)꿈에꿈에
- (사)한국 베트남 우호협의회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사)한반도평화포럼
- (사)월드머시코리아

7) 기타 법인/행정 업무

(1) 증명서 발급

발급번호	증명서	발급일	성명	용도	내용(요약)
제2023-1호	경력	2023년 1월 2일	이인선	기관 제출용	2021.2.15~2021.6.15 활동가
제2023-2호	경력	2023년 3월 27일	예혜숙	기관 제출용	2023.6~현재
제2023-3호	경력	2023년 3월 29일	박수선	기관 제출용	2021~2012 갈등해결센터 팀장.소장.전문위원

제2023-4호	경력	2023년 5월 2일	강인화	기관 제출용	2007.1.1~현재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제2023-5호	경력	2023년 7월 4일	이덕경	기관 제출용	2005~현재 갈등해경센터 강사.팀장.부소장.운영위원. 전문위원
제2023-6호	경력	2023년 10월 4일	강인화	기관 제출용	2007.1.1~현재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 사무국 실무자 업무계약

- ①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8일 (1년)
- ② 업무 : 회계, 행정 (전임 이월업무)

8) 세무신고 업무

(1) 공익법인

- 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2월27일
- ②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간편 신고 포함) : 4월6일
- ③ 영등포세무서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 6월14일

(2) 원천세

- ①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손빛나리/ 7월 3일)
- ② 기타소득: 2022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14명/ 2월 1일)
- ③ 사업소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매월) - (2023년) 4월 6일, 5월 8일, 6월 8일, 7월 6일, 8월 7일, 9월 6일, 10월 6일, 11월 6일, 12월 6일, (2024년) 1월 10일
- ④ 상반기(반기) 신고 납부 (7월 3일)-근로(1명), 퇴직(1명), 기타 소득(5명), 사업 소득(1명)
- ⑤ 하반기(반기) 신고 납부 : 2024년 1월 10일-기타소득(17명) 사업소득(1명)
- ⑥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간(2023년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2월 2일

(3) 부가세

- ① 1기 확정신고 : 7월 18일
- 제출서류 : 상반기(1월~6월)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 ② 2기 확정신고 : 2024년 1월 18일
- 제출서류 : 하반기(7월~12월)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4) 4대보험

- ① 2022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2월 14일
- ②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고용보험 이직 신고 : 3월 7일

[2] 평화·통일 사업

[2023년 사업계획]

1.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어드보커시와 여성들이 만드는 적극적 평화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 대응 성명서, 논평 발표
- 군사주의와 전쟁반대 및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시민사회와 연대 및 협력 강화
- ‘여성, 평화, 안보’(WPS) 의제 기반 네트워크 활동 전개

2.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전개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의 기반을 놓기 위한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을 본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공동체, 여성시민사회 등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캠페인팀 구성하기
- 상반기 평화여성회 회원, 지역과 공동체, 여성시민사회에서 캠페인전개하기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3월 4일 예정) 계기 집중 행동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
- 7.27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평화주간 중 여성평화 행동 기획 및 진행 등

3. 여성평화운동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기초 작업 진행

평화여성회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평화여성회 활동 자료, 도서 등을 정리하여 여성평화운동 자료로 정리하여 목록화하여 향후 여성평화운동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 여성평화운동 자료정리팀 구성하기
- 평화여성회 활동자료, 회의자료 정리 및 목록화 작업하기
- 여성평화운동 도서 목록화 작업하기 등

2-1.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 1) 현안 대응 및 성명서/기자회견문 발표(연명포함)
 -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선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자”
 - 2월 21일 [공동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 2월 23일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기자회견
-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 3월 7일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 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 3월 7일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 3월 7일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피해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긴급 시국선언'
- 3월 22일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 3월 24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총회 선언문]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의 입장'
- 3월 31일 [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 4월 21일 [공동성명]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 4월 24일 [기자회견문]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 5월 4일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 5월 8일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던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둘러리에, 한일안보협력을 빙자한 일본 재무장만 키웠다
- 5월 9일 집권 1년,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 5월 10일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5월 16일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 5월 19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 선언
- 6월 1일 [기자회견문] 대일역사정의 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7월 22일 [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 7월 2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 7월 27일 [727 여성평화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7월 27일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 8월 9일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6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9월 3일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터 서울시 기습철거에 대한 성명서]-성추행 가해자 임옥상을 핑계 삼아 여성폭력을 한일관계에 이용하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까지 통째로 지우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 철거를 당장 중단하라!
- 9월 5일 [성명서]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철거 강행 규탄 성명서-기어이 기억의 터를 철거해 일본군'위안부', 반성폭력 운동 역사 통째로 지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 10월 22일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 11월 4일 성명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 11월 21일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 11월 22일 박민 KBS 사장 규탄·방송법 공포 촉구 공동성명
- 12월 1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선언문]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 12월 1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

2) 군사주의와 전쟁반대 및 여성평화군축운동 전개를 위한 국내외 여성평화시민사회와 연대 및 협력 강화

▣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평화네트워크(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10차 회의**

- 일시와 장소 : 2023년 5월 25~29, 필리핀 올롱가포, 마닐라
- 주제 : 진정한 안보의 페미니스트 비전과 살림의 문화 (Feminist Vision of Genuine Security and Culture of Life)
- 참석 : 안김정애(평화여성회/기지촌여성인권연대)
- 비고 : 이 회의는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2025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 개최를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샵

(1) 개요: 제주 강정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소장 김성환 신부)가 본회에 여성평화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여성평화워크샵’ 기획 및 운영을 요청하고 재정지원 의사를 밝혀, 현재 평화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강정평화네트워크 활동가들과 8차에 걸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준비함. 평택, 군산, 성주(소성리), 강정 등 군사기지의 여성활동가들, 서울과 경기의 여성평화운동가들 33명이 모여 각자의 활동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찾아보는 1박 2일 여성평화활동가 워크샵을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일대에서 진행함. 향후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등 공동행동을 진행하기로 함

(2) 워크샵 행사

- 일시 : 2023년 10월 3~4일(금-토)
- 장소 : 강정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강정 해군기지, 강정천 일대
- 공동주관 : 평화여성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여성연대, 여성병역거부자모임
- 후원 :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480만원
- 준비 : 온라인준비회의 8회_김정수, 김은희, 고유경, 이정아, 최성희, 보말
- 전체 참가자 : 경기(4명), 군산(1명), 평택(2명), 성주소성리(2명), 서울(6명), 제주(17명)
- 평화여성회 참가자 : 한정숙, 김정수, 여혜숙, 김은희
- 프로그램

	2023년 10월 13일(금)	2023년 10월 14일(토)
	여성평화워크샵	연대와 실천
오전	~~>> 제주 강정마을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아침식사 8시~ o 생명평화백배(선택) 07:00~ o 여성평화워크샵 9:30~11:30 앞으로 할 일, 무엇을 & 어떻게? 진행_이정아
오	o 접수 (13:00~13:30)	o 12:00~13:30 해군기지 앞 인간띠 잇기

후	<p>프란치스코 평화센터 1층 카페</p> <p>○ 여는 행사(14:00~14:30) 진행_최성희 인사와 감사의 말씀 나누기</p> <p>○ 여성평화워크샵 : 경험 나누기, 배우기, 힘주기 진행_고유경</p> <p>14:30~16:00 각 지역 활동경험 나누기_경기(이정아)·평택(연꽃)·군산(오이)·성주(박형선-손소희)·강정(최혜영)</p> <p>16:00~16:30 휴식</p> <p>16:30~18:00 Q&A & 공동의 과제 찾기</p>	<p>참여 및 점심 식사(삼거리 식당) 인간띠 잇기 진행_카레</p> <p>○ 13:30~14:30 평가 & 마무리 진행_김정수</p> <p>○ 15:00~17:00 강정탐방투어(선택) 안내자_강정천_엄문희 강정포구_정선녀</p>
저녁	<p>저녁식사와 휴식(18:00~19:30)</p> <p>○ 깔깔 프로그램(19:30~21:00) 진행_보말</p>	



3)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기반 네트워크 활동 전개

▣ Supporting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 Northeast Asia

- 일시와 장소 : 2023년 6월 13~14일, 몽골 외무성(울란바타르)
- 주최: UNDP(A/UN Department of Political & Peacebuilding Affairs), 몽골 외교부, GPPAC
- 한국참가: 김정수(평화여성회), 신혜수(유엔여성인권정책센터), 이예정(우리민족서로돕기),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미미(세계YWCA)
- 프로그램 세션1 Setting the Scene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Efforts in the Current Regional Context

- 세션2 Japan and ROK's 1325 NAPs_Lessons Learned and Challenges



2-2.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전개

1) 회의 및 캠페인팀 구성 활동

(1) 1차 회의 : 1월 6일(금) 오전 10:30~

- 참석: 고유경, 김정수

- 내용: 여성연합 총준위(3차)에 제안할, ‘여성종전평화캠페인’ 주요 내용 및 카드 뉴스(안) 검토 등

(2) 여성이 참여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 TF 1차 회의(이하 TF 회의)

- 일시와 장소 : 2월 10일(금) 오후 3시 30분~, 온라인 ZOOM

- 참석 : 고유경, 김정수, 여혜숙, 이권명희

- 안건 : 2023년 평화여성회 사업 계획 중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부분 공유, 1~2월 진행내용 공유, 상반기 활동방향 논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3월 4일) 서울광장에 부스 설치와 서명운동 진행 방식 등 논의

(3) TF 2차 회의 - 3월 9일(목) 오전 9시~, 온라인 ZOOM

- 참석 : 고유경, 김정수, 이권명희

- 안건 : 3월 4일 12:00~17:0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한국여성대회)에서 진행한 ‘정전 70년, 여성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행동’ 평화여성회 부스(서명운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등 논의

2) 홍보물 제작 및 홍보

(1) 1월 7~9일까지 제작(주요내용 정리 & 디자인, 인쇄 등)

<p>여성들이 참여하는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p> <p>2023©WomenMakingPeace</p>	<p>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선언" 캠페인 Q</p> <h3>WHAT?</h3> <p>한국전쟁을 끝내는 한반도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p> <p>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서명 운동과 지지선언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모어진 서명은 2023년 유엔총회 기간에 남,북,미,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p> <p>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은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내는 선언입니다. 선언은 아래의 선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니다. · 재래와 양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니다. <p>적대국 불만이 지배하는 시대로 도들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주민들과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십시오!</p> <p>한반도 종전에서 평화를 End the Korean War</p> <p>2023©WomenMakingPeace</p>
<p>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선언" 캠페인 Q</p> <h3>WHY WOMEN?</h3> <p>전쟁과 무력분쟁에서 성폭력과 성노예의 참혹함을 겪어온 여성들, 전쟁과 무력분쟁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강화시키고 성차별을 강화시킵니다.</p> <p>70년 이어진 한반도 정전체제, 여성들은 국가주의, 군사주의와 결합된 가부장적 성차별주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분단과 정전 체제에서 여성들이 겪는 겹겹의 폭력은 기저준에서 점점지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재생산되고 확산되어 갑니다. 군대와 무기에 의존하는 평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주의 문화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p> <p>여성들이 만드는 한반도종전평화는 성차별, 성폭력, 젠더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실천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 토론하며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일은 누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p> <p>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차별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이 나서서 한반도종전과 평화를 만들어갑시다.</p> <p>2023©WomenMakingPeace</p>	<p>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평화선언" 캠페인 Q</p> <h3>HOW?</h3> <p>서명하고 인증샷 찰라 !!</p> <p>1 온라인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https://endthekoreanwar.net/) "Korea Peace Appeal 지금 서명하기" 클릭 <p>2 서명 인증샷 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시태그 #한반도종전평화 #한반도평화 #KoreaPeaceAppeal <p>a + 오프라인 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용 서명용지 : https://endthekoreanwar.net/posts/4 ○ 참여 및 서명 보내는 곳 : endthekoreanwarow@gmail.com <p>2023©WomenMakingPeace</p>

3) 캠페인 전개

(1) 한국여성단체연합 2023년 총회, 서명활동

- 일시와 장소 : 1월 10-11일, 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
- 내용 : 서명대 설치, 서명받음, 종전과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 질문판에 스티커 붙이기, 전체 사진찍기. 페이스북에 업로드 등
- 참석 : 김정수
- 비고 : ① 2022년 12월 23일(금) 여성연합 2차 총준위에서 서명운동 제안 -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 요청, ② 2023년 1월 6일(금) 3차 총준위에 기획안 제출 및 총회에서 서명활동 진행하기로 결정

<p>여성들의 종전평화에 대한 의견 모으기(포스트잇) 2022년 1월 10~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참가자들의 답변</p>
<p>질문 (1) 여성들이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p>

- 전쟁은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기 때문에
-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남성' 권력이지만, 전쟁의 피해는 여성, 약자에게 집중되기 때문
- 평화와 안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여성이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젠더 불평등의 잘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적은 '군사주의'이다.
- 전쟁은 남성의 언어로 쓰여졌고, 우리는 연결과 공동체를 우리의 언어로 쓸 것이다.
"평화 파이팅!
- 불평등주의 표본이 '군대'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 '전쟁'입니다. 여성은 '생명'과 '평등'을 사랑합니다.
- 정전 70주년, 이젠 종전이어야~
- '평화'라는 감각, 종전으로 느낄 때
- 평화가 일상이 되어야 하니까
- There is no road to peace. Peace is the ROAD!

질문 (2) 한반도 종전평화를 통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 군사주의
- 온 나라에 만연한 군대문화, 적대적인 국가보안법, 아직도 남아있는 반공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에 근거한 이분법
- "전쟁 반대" 여성의 착취, 종식되어야 한다.
- 군무세 퇴치 - 군 인권 개선! 군대 개혁! 여군 지우지마!
- 불안 조성하는 정치는 그만. 평화를 일상으로!
- 기후정의 실현하는 한반도
- 국방예산을 복지예산으로!
- 국방예산을 성평등 예산으로!
- 걸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북한 가기!
- 걸어서 평양가기! 할머니 고향 가보기! 국방예산을 평등예산으로!
- 한반도 전체 여성 노동자의 단결! 투쟁!
- 우리가 해야 할 일 : 한반도 종전 평화에 관심 가지기,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심 가지기





(2)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부스 설치 및 서명활동

- 일시와 장소: 3월 4일(토) 12:00~17:00, 서울시청 광장
- 서명활동 : 고유경, 김귀옥, 김정수, 김형규, 여혜숙, 이권명희, 한정숙 (참여연대, 이태호, 황수영 등)
- 서명 : 1,100명 이상(QR코드 서명자 포함)
- 비고 : ① 2월 3일, 3.8 여성대회(3월 4일) 부스 신청함, ② 2월 7일(화) 여성 연합 대표자회의에서 부스 설치 소개 및 참여 요청, ③ 2월 20일(월)부스 사용 비용 20만원 송금, ④ 부스안내 웹자보 제작 및 홍보(평화여성회 회원, 홈페이지, 페이스북, SNS 커뮤니티 등), ⑤ 2월 22일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집행 책임자 회의(6.15 남측위 사무실)에서 평여 3.8 여성대회 홍보 웹자보 공유 및 홍보 요청, ⑥ 3월 3일(금) 캠페인 물품 제작(김정수, 이권명희, 김은희 등), ⑦ 3월 4일, 서명활동 주요내용 평화여성회 회원들에게 보고(오스메일러) 및 페이스북 사진 등 업로드, ⑧ 3월 9일(목) 평가회의(온라인) 진행 등



(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서명활동 참여

- 일시와 장소 : 3월 25일(토) 15:30~18:00 서울시청 광장
- 내용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차원에서 '3.25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굴욕외교 규탄 제4차 범국민행동" 행사 현장에서 서명 활동 진행, 평화여성회 회원들 참여하여 함께 서명 활동 진행함
- 참석 : 고유경,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 서명 : 850명 이상



(4) '4.27 시민평화회의'(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 일시와 장소 : 4월 27일(목) 저녁, 기독교민회 사무실+ZOOM
- 참석 : 평화여성회와 기독교민회 회원 함께 참여
(한정숙, 여혜숙, 김정수, 이권명희,)



(5) 2023 경기여성DMZ평화걷기,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활동

- 일시와 장소 : 5월 20일(토) 10:00~12:00, 임진각 일대
- 참석 : 김정은, 여혜숙, 김정수, 고유경
- 서명 : 107명



(6)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 기념 “페스티벌 킷”-한반도 평화행동 부스운영 및 서명 활동

- 일시와 장소 : 6월 10일(토) 14:00~16:30, 반포한강공원
- 참석 : 한정숙, 여혜숙, 김정수, 이권명희, 고유경 + 한반도평화행동 활동가들
- 서명 : 200여명



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집행위원회 참여
 ▶ 국내 사안별 연대활동 보고 부분 참조

2-3. 여성평화운동 자료 정리 및 아카이브 기초 작업 진행

1) 정리팀 구성

- (1) 회원들에게 알림 메일 발송 & 자원자 모집 등
 - 일시 : 2023년 5월 11일 오즈메일러로 발송
 - 자원자 : 2명 자료정리 자원

(2) 1차 운영위+추가회의에서 논의

2) 정리작업

- 갈등해결센터 회원들 자료 정리
- 본회 자료 정리 : 서고, 책장, 캐비닛 등 책, 자료, 물건 등 정리

3) 정리 경과

- 2024년 1월 현재, 서고, 책장, 캐비닛 자료 중 서류와 주요 문서 보관하고, 평화여성회(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포함) 발간 자료와 평화·통일운동,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와 활동 자료 중심으로 보관함
-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 중 가장 필요한 정리를 진행한 것으로 평가함

【3】 정보·홍보 사업

3-1. 홈페이지, 페이스북, 여성평화안보(WPS) 유튜브 채널 등 SNS 평화활동

- 1) 홈페이지 <http://www.peacewomen.or.kr/>
- 2) 여성평화안보(WPS) 유튜브 채널 등 SNS 평화활동
- 3) 페이스북

3-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3-3. 메일을 통해 본회 소식 전달

- 1월 2일 2023년 평화의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1월 4일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1월 13일 2023년 정전협정 70년, 여성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캠페인 웹카드 소개
- 1월 17일 2023년 제27차 정기총회 위임장 제출 안내
- 1월 30일 2023년 정기총회(2월2일, 저녁) 안내
- 2월 13일 2023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 2월 13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여성평화 대화모임 안내
- 2월 21일 3.8 세계여성의날, 한반도 평화캠페인 부스 안내
- 2월 24일 여성과 평화 8호 원고모집 공고
-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 2월 28일 3월 4일(토)오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안내
- 3월 6일 3.8 세계여성의 날-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
- 1월 19일 2023년 제27차 정기총회 위임장 제출 안내
- 3월 9일 3월 11일(토) 오후 2시, 평화대행진 안내
- 3월13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3.11 평화행진 보고
- 4월 3일 제10회 여성과 평화포럼 안내드립니다.
- 4월 5일 여성과 평화 8호 원고모집 공고
- 4월 11일 4.27 평화회의에 모두 신청해 주세요!
-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 시민단체 입장문
- 5월 9일 5월 20일(토) 경기여성평화걷기 & 평화여성회의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 안내
- 5월 9일 5월 24일(수)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기념 토론회 안내
- 5월 11일 여성평화운동자료 정리 작업에 참여해 주세요!
- 5월 22일 2023년 5월 활동소식 알립니다.
- 6월 7일 6월 10일(토) 페스티벌 킷, '한반도 평화행동' 서명활동 안내
- 6월 27일 7월 22일(토) 오후, 정전7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참여 안내
- 7월 12일 정전 70년, 727명의 평화선언에 참여해주세요!
- 7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2023년 8월 30일)

- 9월 8일 8월 30일 임시총회 잘 마쳤습니다.
- 9월 13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성명 읽기 강좌 안내 (1강)
- 9월 22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성명 읽기 강좌 안내 (2강)
- 9월 27일 평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 12월 20일 2023년 하반기 활동자료_필요하신 분 알려주세요!
- 12월 29일 2023년 감사드립니다~

3-4. 회원 사업

- 1) 여성평화 온라인 대화모임
 - 일시와 장소 : 2023년 2월 23일(목) 19:00~21:00, ZOOM
 - 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 진행(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 패널 대화
 1. 국제관계의 아이러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정숙: 평화여성회 이사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역사 전공)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들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러시아 현대사 전공)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친 영향
(고유경: 평화와자유를위한국제여성연맹 Korea Peace Now 컨설턴트)
 - Q&A와 전체 대화
 - 참석 : 20명

- 2) 여성평화운동 연속강좌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읽기			
- '공존을 통한 평화구축' 어떻게 가능한가?			
일시	2023년 10월 4일(수), 11일(수) 저녁 8~10시		
방식	온라인 ZOOM 방식		
10.4.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으로 본 미국-일본-한국의 입장과 실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조성렬 전 오사카 영사	각 25명
10.11.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으로 본 중국의 입장과 실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참석

여성평화 온라인 대화모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쟁은 1년이나 지나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에 더해 수많은 난민들은 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독일의 전차 부대 지원으로 전쟁의 규모는 더 크고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평화여성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것,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는 온라인 대화모임을 열고자 합니다.

일 시 2023년 2월 23일(목) 저녁 7~9시 **방 식** 온라인 중
참가신청 <https://bit.ly/대화모임2023> **원 가 비** 없음
문의 02-929-4847(평화통안드레여성회)

1부 패널 대화 **사회:** 김정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1. 국제관계의 마이러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정숙 평화여성회 이사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역사 전공)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들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러시아 현대사 전공)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미친 영향 (고유영: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Korea Peace Now 컨설턴트)

2부 Q&A와 전체 대화
* 대화모임은 배낭들의 각 10분 대화 이후 Q&A, 전체 대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존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 어떻게 가능한가?

2023.10. 4(수), 11(수) 저녁 8~10시
진행: 온라인 ZOOM 방식 (신청시 별도 안내)
신청: BIT.LY/한미일성명읽기

'캠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읽기

10. 4 (수요일)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으로 본 미국-일본-한국의 입장과 실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조성렬 | 전 오사카 총영사**

10.11 (수요일)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으로 본 중국의 입장과 실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남주 |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문의 02-929-4846, 02-929-4847

3-5. 회원·재정 사업

1) CMS 현황 : 월별 입금현황

월	청구		미수		출금		수수료			입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출금	미수	계	
1	210	2,495,060	69	798,000	141	1,697,060	38,775	3,025	41,800	1,655,260
2	166	1,970,030	25	304,000	141	1,666,030	38,775	990	39,765	1,626,265
3	170	2,050,030	34	435,030	136	1,615,000	37,400	1,375	38,775	1,576,225
4	170	2,050,030	37	470,030	133	1,580,000	36,575	1,430	38,005	1,541,995
5	171	2,060,030	36	459,000	135	1,601,030	37,125	1,375	38,500	1,562,530
6	170	2,050,030	36	464,000	134	1,586,030	36,850	1,375	38,225	1,547,805
7	159	1,840,030	26	264,000	133	1,576,030	36,575	1,265	37,840	1,538,190
8	159	1,840,030	29	314,000	130	1,526,030	35,750	1,430	37,180	1,488,850
9	156	1,790,030	23	239,000	133	1,551,030	36,575	1,100	37,675	1,513,355
10	154	1,750,030	25	234,000	129	1,516,030	35,475	1,320	36,795	1,479,235
11	154	1,750,030	25	239,000	129	1,511,030	35,475	1,320	36,795	1,474,235
계	1,839	21,645,360	365	4,220,060	1,474	17,425,300	405,350	16,005	421,355	17,003,945

【4】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대표자회의,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등

- 1) 여성연합 회원단체 전체대표자회의
 - 일시 : 1차(2023.2.7.), 2차(2.17), 3차(5.25), 4차(8.23) 참석(김정수 상임대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지하)

- 2) 여성연합 2023년 총회 준비위원회
 - 2차(2022.12.23.), 3차(2023.1.6.) 참석(김정수 상임대표)
 - 안건 : 23년 총회 준비 전반 논의 및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심사 등

- 3) 여성연합 2023년 총회(제37차)
 - 일시와 장소 : 2023년 1월 10~11일(화-수), 하이유스호텔 대회의실
 - 참석 : 김정수 상임대표
 - 안건 : 정책토의, 22년도 사업/결산 보고와 승인, 신임공동대표단 선출(김민문 정, 양이현경, 김윤자), 23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등
 - 비고 : 제37차 여성연합 정기총회 정책토의(주제: 새 정부 시대 여성운동을 둘러싼 분야별 정세와 전망)에서 김정수 대표 발제(평화-국제평화정세와 정전협정 70년의 의미) 토론 및 평화여성회에서 '정전 70년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진행함

-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활동
 - ROK NGO Report - 평화분야(작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정수)
 - 작성(2023년 1월 6일) 및 NGO보고서 제출(2023년 1월 31일)
 - 내용: ▶부록 자료 참조

- 5)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3월 4일(토) 12:00~17:00, 서울시청광장
 - 참석 : 약 1만명(주최 측 추산)
 - 평화여성회 참석 : 한정숙, 김귀옥, 김엘리, 김정수, 김형규, 고유경, 박수선, 여혜숙, 이권명희 외
 - 활동 : 평화여성회 '정전 70년, 여성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행동' 부스 설치와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작업 진행 (서명: 1,100명 이상)
 - 비고 : 평화여성회 회원들 본 행사에 후원(김지영 이사 500만원 외 김정수, 여혜숙 등)

- 6)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3월 23일(목) 16:00~, ZOOM
 - 참석 :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 정현백, 이찬진, 김정수, 김민문정, 김미란
 - 안건 : 여성미래센터 22~23년 현황(입주단체, 재정 등) 보고, 신임운영위원 추천

등

7) 윤석열 정권 1년 평가 및 제언토론회

- 주제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
- 일시와 장소 : 2023년 5월 8일(월) 오후, 이룸센터(여의도) 지하 회의실
- 참석 및 패널토론 : 김정수 (제목 : 정전70년, 윤석열 정부 1년, 우리에게 평화는 가능한가?) ▶부록 자료 참조
- 비고 : 『여성신문』 기고(2023년 5월 24일), 김정수 “[윤 정부 1년 젠더정책 평가] 정전협정 70년, 여성의 삶, 그리고 평화와 안보에 대해 질문하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447>

8)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 시미니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 일시와 장소 : 2023년 5월 16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902단체 (평화여성회도 참가하고 있음)
- 참석 : 김정수

9) 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작업

- (1) 제1차 기획회의 : 2023년 4월 21일(금) 오후 2시 / 온라인(Zoom)
- (2) 여성과 평화 부문 집필 & 제출(김정수) ▶부록 자료 참조
- (3) 젠더정책과제 발표 라운드테이블 : 9/7(목) 오후 2시(여의도 이룸센터)
- (4)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자료집』 발간 및 국회(정당) 발송(2023년 12월 20일)

10)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해동 ‘어퍼’ 캠페인 진행 중 (평화여성회 참여 중)

- 출범 기자회견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평화여성회 참석 : 김정수, 안김정애

11) 이슈 리포트 잇:다 기고 : 11호(2023년 11월 30일 SNS 발간)

- 제목: “20023년 정전협정 70년, 여성평화운동을 통해 만난 여성들”(김정수)

1-2.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 네트워크 활동)

- ※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집행위원장: 조영미)에는 현재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1) 운영위원회 회의(제25차)

- 일시와 장소 : 2023년 2월 27일(월) 17:30~, 서울여성플라자 근처 카페
- 참석 : 김정수, 조영미, 김민문정, 최수산나
- 내용 : 2023년 각 단체 평화관련 사업내용 공유, 2023년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사업계획,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의 건 등

2) Women's Lives under the State of the Korean Armistice(정전과 여성의 삶 영문 보고서)

- 기간 : 2024년 상반기(예정)
- 참석 : 한국측 집필자-고유경, 신나리, 김정수, 조영미
- 집필 : 김정수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
- 비고 : 현재 영문번역 및 편집작업 중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평화여성회는 2023~2024년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음(김정수 대표)

1) 활동일지

- 3/7 6.15여성본부 대표자회의-한교여연 사무실
- 3/24 6.15남측위 여성본부 총회-6.15남측위 회의실
- 3/30 6.15여성본부 집행위 인수인계-한교여연 사무실
6.15남측위 집행위회의-6.15남측위 사무실
- 4/13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방조 규탄 기자회견-정부종합청사앞
- 4/21 6.15여성본부 대표단회의-온라인 줌
- 5/3 6.15남측위 집행위회의-6.15남측위 사무실
- 5/10 “윤석열 정권 1년-여성시국선언” 참석_여성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용산대통령실 앞
- 5/16 한미일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선언발표 기자회견 참석-용산대통령실앞
6.15여성본부 2차대표단회의-정동프란치스코교육회관 314호
- 5/24 [토론회]정전 70년& 윤석열 정권 1년 2023년 여성평화통일운동을 말한다_정동프란치스코교육회관 403호
- 6/1 6.15남측위 상임집행위회의-6.15남측위사무실
- 6/15 6.15평화통일 시국대회-백범김구 기념관
- 6/28 제1602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평화로
6.15여성본부 3차 대표단회의-평화로인근 카페
- 7/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촉구 릴레이 1인시위(한미경대표)-국회 앞
- 7/7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촉구 릴레이 1인시위(이은정 집행위원

장)-국회앞

- 7/21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국회
6.15남측위 10기2차 운영위원회-6.15남측위사무실
- 7/22 7.27 한반도평화대회-서울광장,광화문
- 7/24 6.15여성본부 4차 대표단회의-온라인 줌
- 8/1 6.15남측위 집행위회의-온라인 줌
- 8/3 8.15범국민대회 대표자회의-프란치스코교육관
8.15범국민대회 기자회견-프란치스코교육관
- 8/12 8.15여성평화통일대회-광화문 시민열린광장 북측
광복 78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평화 실현! 8.15범국민대회
- 경북공역앞
- 10/5 6.15남측위 집행위회의-온라인 줌
- 11/1 6.15남측위 후원의 밤-연세대 동문회관
- 12/13 6.15남측위 상집회의-6.15남측위 사무실
- 12/20 6.15남측위 상임대표단회의-6.15남측위 사무실

2) 사업별 보고

(1) 6.15여성본부 총회

- 일시 : 2023년 3월 24일 14:00
- 장소 : 6.15남측위원회 회의실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상임대표단체-전국여성연대
- 공동대표단-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로지타 공동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정수 공동대표

(2) [토론회]정전 70년& 윤석열 정권 1년 2023년 여성평화통일운동을 말하다

-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5:00~17:00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관 430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9)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 진행 : 한미경(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발제 :
 - 1)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이예정(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업국장)
 - 2) 한일역사정의와 한반도평화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3)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반도평화 - 이은정(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 4) 정전 70년,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의 삶을 통해 본 평화와 안보 - 김정수 (6.15여성본부 공동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 평화여성회 참석 : 김정수, 여혜숙

(3) 6/28 제1602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12:00
- 장소 : 평화로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 사회 : 이은정(6.15여성본부 집행위원장)
- 순서 : 주관단체인사말(한미경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주간보고(이나영 정의 기억연대 이사장)/ 공연(아리랑변주곡-경기자주여성연대 양은미, 노랑)/ 연대 발언(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장, 김병혁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상황실장, 방학,감자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성명서낭독(경기광주여성회 양은미 회장)

(4) 정전 70년, 여성평화헌선언 - 신문광고 활동

- 7월 27일(목) 경향신문 사회면 5단 광고
- 성명서 내용 : ▶ **부록 성명서 목록 참조**
- 평화여성회 회원 참여자 : 고유경, 김귀옥, 김다미, 김명환, 김정수, 김정아, 김지선, 김지영, 김태경, 김형규, 김화숙, 박인혜, 배현주, 손희정, 안김정애, 안수경, 여혜숙, 윤보영, 윤은주, 이명희, 이덕경, 이예정, 정경란, 정경훈, 정혜진, 조영미, 한정숙

정전70년 여성평화행동 캠페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727 여성
평화헌선언
신문광고
참여요청**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
한반도의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을 위해 727명의 여성 평화헌언을 제안합니다.
개인파 단체연명 여성평화헌선언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봅시다!

참여방법 :
개인 3천원이상, 단체 5만원 이상
신청 : bit.ly/727여성평화헌선언
기간 : ~7/23일까지
광고일정 : 7월27일 경향신문 하단광고예정
선언비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3-741938 전국여성연대


온라인 신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담당 : 전국여성연대 / 문의 : 010-9445-8740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들의 날' 기념 토론회

정전 70년 & 윤석열 정권 1년,
2023년 여성평화통일운동을 말하다.

-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5:00~17:00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관 430호 (서울시 중구 경동길9)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문의 : 010-9445-8740
- 신청 : <https://url.kr/wlb9eq>


토론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진행 : 한미경(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발제 :

- 1)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이예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업국장)
- 2) 한일역사정의와 한반도평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3)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반도평화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
- 4) 정전 70년,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의 삶을 통해 본 평화와 안보 (김정수 6.15여성본부 공동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참가 및 연대발언: 김정수

1-6. 시민평화포럼(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공동대표 단체로 참가하고 있음)

- 1) 2023년 총회
 - 일시와 장소 :
 - 주요내용
 - 비고 : 여혜숙 갈등해결센터소장이 시민평화포럼 감사를 맡고 있음
- 2) 2023년 2차 운영위원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5월 18일(목) 오후 5시
 - 참석 : 김정수

1-7. 통일교육협의회

2. 국내 사안별 연대

2-1.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

- ※ 2023년 2월 14일 출범식 당일 현재 국내단체 736개, 국외연대단체 76개
-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집행위원 단체로 참가하고 있음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6대 요구사항

-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합시다.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 제재와 군사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한반도·아시아 평화공존 실현합시다.
-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주요활동 - 서명운동(100만 명 목표, 9월 19일까지), 주요인사 서명과 지지선언 모으기, 국회협력활동, 정전 70년 평화행동주단(7월 22일, 27일), 전세계 300곳 평화행동(국내200곳),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활동, 8.15 평화대회, 현안 대응과 공론화 활동, 서명과 평화행동 결과 전달(2023년 하반기 유엔총회 시기)

- 1) 집행위원회 회의 - 장소 : 6.15 남측위원회 회의실(안국동 & ZOOM)
 - ① 2023년 1월 19일
 - ② 2023년 2월 22일
 - ③ 2023년 3월 23일

④ 2023년 7월 12일

2)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단체 대표자회의

- 일시와 장소 : 2023년 2월 14일(화) 10: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 : 김정수, 여혜숙
- 내용 : 2023년 활동계획, 2023년 예산안, 조직구성, 출범선언문 검토 등

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식

- 일시와 장소 : 2023년 2월 14일(화)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참석 : 고유경, 김정수, 여혜숙, 조영미
- 내용 : 소개, 각계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등

4) 한미연합군사훈련(자유의 방패훈련 등) 중단을 요구하는 3.11 평화행진

- 일시와 장소 : 2023년 3월 11일(토) 15:00~,
- 참석 : 고유경, 김정수, 한정숙
- 내용 : 발언(한충목, 김정수)과 행진(용산 대통령실 앞-시청 광장까지)

5) 3.25 한일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 시 한반도평화선언 서명운동 참석

- 일시와 장소 : 2023년 3월 25일(토) 15:30~18:00
- 참석 : 고유경, 김귀옥, 김정수, 김정아

6)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서울대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서울광장 ~ 광화문 앞
- 주요행사 : 오후 4시 행진(서울광장 동편-광화문 앞), 5시 대회(광화문 앞): 공연, 발언, 해외참가자 연대발언, 시민대합창 등
- 평화여성회 참가자 : 고유경, 김정수, 안수경, 여혜숙, 이권명희
- 평화여성회는 집행위원 단체 특별분담금 20만원 납부함, 평화여성회 회원들도 개별 추진위원으로 참가
- 비고 : 평화여성회 참가자 중 김정수, 여혜숙, 이권명희, 안김정애 시민합창단으로 참가 예정 (사전연습 2회 및 리허설 등)

7)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국내외 시민사회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 일시와 장소 : 2023년 7월 23일 (목) 오전 10시, 임진각 통일대교 앞
- 참석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수

8)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촛불: 전쟁위기 부르

- 는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 일시와 장소 : 2023년 8월 18일(금) 오후 7시, 동화면세점 앞
- 참석 및 발언 : 김정수

- 9)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전체회의
- 일시와 장소 : 2023년 12월 12일(화) 오후 4시, 온라인 ZOOM
- 참석 : 김정수

2-2.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 갈등해결센터 보고자료 참조

2-3.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

- ※ 본회는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에 성명서/기자회견문 연명과 주요 집회 참석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

- 1)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 일시와 장소 : 2023년 3월 7일(화) 13:00,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 참석 : 김성은, 김정수, 안김정애

- 2) 한일 굴욕외교 규탄 3차 범국민대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3월 18일(토) 17:00, 서울시청 광장
- 참석 및 발언 : 김귀옥

- 3) 한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3월 25일(토) 17:30, 서울시청 광장
- 참석 : 김귀옥

- 4)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10:30
- 장소 : 트윈빌딩A동(일본대사관 입주건물) 앞
- 참석 & 발언 : 김정수
- 비고 : [항의서한] 일본은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 5) 강제동원 피해자의 용기있는 투쟁과 함께하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참여 등

2-4.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 본회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성명서/기자회견문 연명과 주요 집회 참석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

1) 1차 긴급행동(2023년 11월 17일(금) 저녁 7시, 종각 앞 광장 집회)

- 참석 : 한정숙, 안김정애

2) 2차 긴급행동(2023년 11월 26일(일)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

- 참석 : 한정숙

3) 3차 긴급행동(2023년 12월 10일(일)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

- 참석 : 한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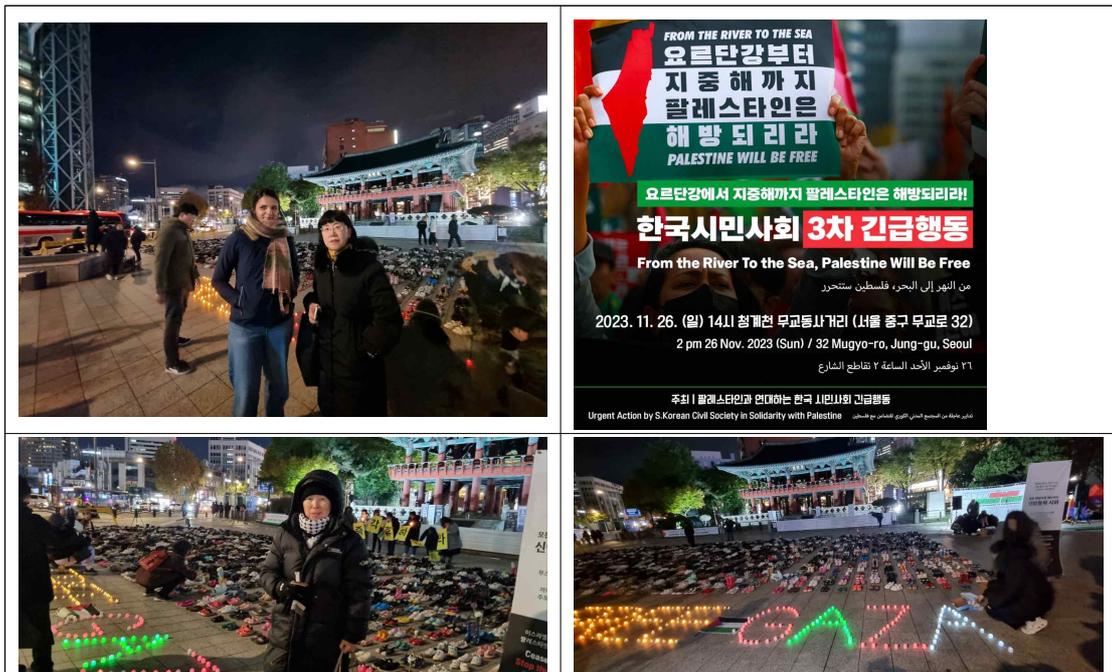
4) 한국성공회 팔레스타인 평화기원 성탄미사

- 일시와 장소 : 2023년 12월 25일(월)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

- 참석 : 한정숙

5) 4차 긴급행동(2023년 12월 25일(월)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

- 참석 : 한정숙



3. 국제 연대

3-1.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시아지역협의회(일명 울란바타르 프로세스)

GPPAC NORTHEAST ASIA REGIONAL MEETING : ULAANBAATAR PROCESS IX

장소 : Ulaanbaatar, Mongolia 일시 : 17-19 June, 2023

평화여성회 참석자 : 한정숙 이사장, 김정수 상임대표

Agenda

Day 1: June 17, 2023 (Sat)

SESSION I – Opening Session (open to press)

SESSION II - First Closed Substantial Session: Current State of Play in Northeast Asia

Part 1 Updates from GPPAC Global and Regional Secretariats

The View from Washington DC: Presentation by Frank Aum regarding perspectives on Northeast Asia as viewed from the United States; prospects for dialogue, and the potential role of multilateral efforts in easing tensions and building peace.

Part 2 Prospects for a NEA Nuclear-Weapon-Free Zone:

Day 2: June 18, 2023 (Sun)

SESSION III - Peace Games Simulation

SESSION IV – Field Visit

Day 3: June 19, 2023 (Mon)

SESSION V – Civil Society Strategies for Peace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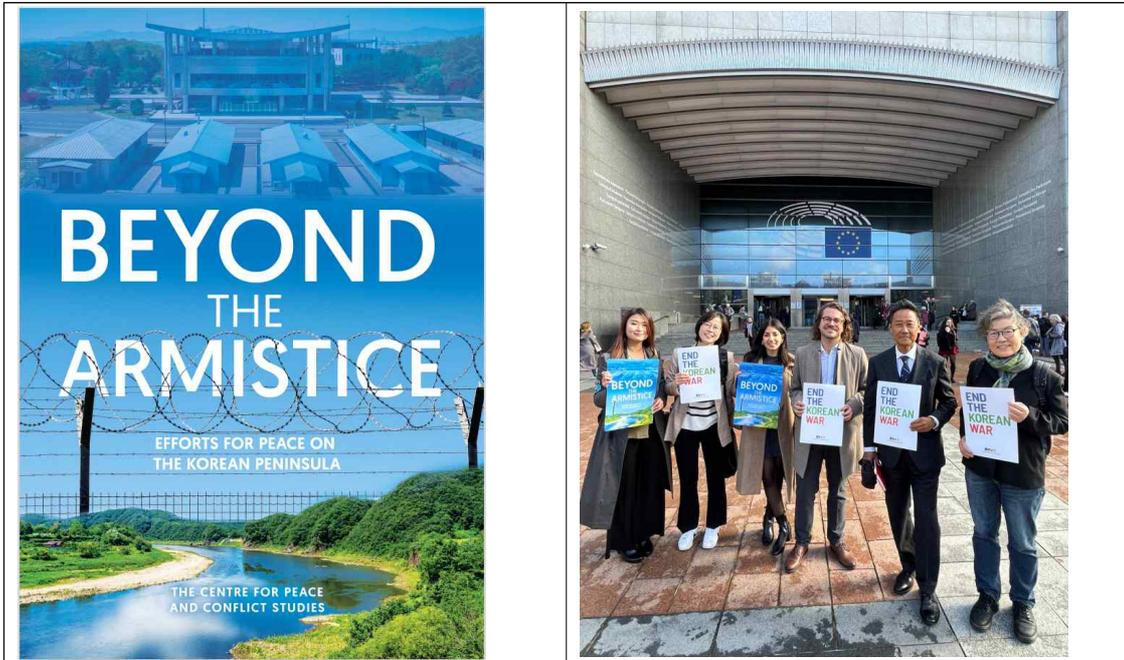
Session VI – Policy Engagement



3-4. CPCS Book Launch & Brussels visit 22-26 October

- 제목: *Beyond the Armistice_Effor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기간 : 2023년 10월 22~26일
- 주최: 캄보디아 Center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 Track2Asia
- 참가: 김정수(평화여성회), 이영아(참여연대), Kee Park(Harvard Medical School, Mery Joyce(GPPAC NEA), Alison Lee(CPCS) 등
- 주요일정
 - 1) Meeting with DG ECHO(Civil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id operation)
 - 2) Event at Eias : Key Speaker_Kee Park

- 3) Meeting with EEAS(유럽 외교부) DPRK, Asia Pacific Division, Policy Officers
- 4) Book Launch Event
- 5) Meeting with MEP Cesar Luena(Vice Chair of the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 6) Meeting with MEP Michiel Hoogeveen (Substitute member in the Delegation for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 7) Meeting with MEP
- 8) Round Table at Polint Office
- 9) The Hague_Meeting with professors, Event at Humanity Hub, interview at GPPAC office



【5】부설 갈등해결센터

【2023년 사업계획】

1. 조직

- 센터장 : 여혜숙
- 운영위원회 : 여혜숙, 김다미,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전문위원 : 김정아, 이덕경
- 갈등해결센터 소통방 :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이권명희, 이덕경, 이현숙,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신난희, 이하영
- 교육매뉴얼 연구팀 : 박인혜(팀장) 팀원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 구성

2. 사업방향과 목표

-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연구, 발전시키며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센터 회원들 간의 소속감 강화와 내실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소통 및 회원모임을 활성화 한다.
- 회원들이 일상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연구, 개발한다.

3. 세부사업

- 서로 배우고 나누는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실행.
- 사안별 대화모임
- ‘평화적 공감대화’ 실천, 연습

1) 조직 구성

- 소장 : 여혜숙
- 운영위원 : 김지선, 김다미, 박인혜, 여혜숙, 손희정 (5명)
- 전문위원 : 이덕경, 김정아
- 카톡 소통방: 김다미, 김희은, 김지선, 박인혜, 서민순, 손서정, 손희정, 신난희, 이권명희, 이덕경, 이향림, 여혜숙, 최영애, 이하영 (총14명)
- 교육매뉴얼 연구팀: 박인혜 (팀장)

2) 회의

(1) 운영위원회

① 1차 : 2023년 3월 28일(목) 10:00~11:0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다미,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논의내용: 상반기 사업계획, 한반도종전캠페인 아이디어모으기, 사무실 정리 및 일정 논의

② 2차 : 2023년 10월 6일(금) 13:30~14:1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박인혜, 손희정, 김다미

- 논의내용: 2차 활동배우기 일정 논의, 2024년 갈등해결센터 조직 논의

③ 3차 : 2023년 11월 28일(화) 20:00~21:00 (온라인)

- 참석: 여혜숙, 김지선,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 논의 내용: 2023년 사업평가, 2024년 계획

3) 서로 배우고 나누는 “교육활동 배우기”: 교육매뉴얼 연구팀 주관

(1) 1차(2월 21일(화) 13:00-18:00,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참석: 김다미,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이덕경, 여혜숙

- 순서: 지금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은? 오늘 기대나누기 /여혜숙

색깔놀이, 차별과 편견 / 손희정

갈등거리재기 / 박인혜

삶을 살리는 평화교육 / 손서정

신뢰서클 / 이덕경

(2) 2차(10월 30일(월) 10:00-13:00,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참석: 김다미, 문경아, 박인혜, 여혜숙

- 순서: 내면과의 대화를 위한 내면가족 치료 및 내면카드 이해 / 문경아

사실, 감정, 욕구 공감하기-네 개의 의자 / 여혜숙

분노 다루기 / 박인혜

박수 놀이 / 김다미

4) 외부교육

(1) 덕신고등학교 ‘ 정서회복과 관계향상으로 평화로운 교실공동체 만들기’

- 일시: 3월 13일(월)~4월 17일(월) 1·4교시, 3월17일(금)~4월21일(금)1~4교시

- 대상: 1학년 세 반, 2학년 세 반 각각 50분씩, 6회차

- 진행: 박인혜, 이덕경

- 교육

회차	주제	목표	활동 제목
1	일상속 친구 갈등과 만나기	갈등에 대한 긍정적 이 해와 다양한 해결 방법 이해	- 인사 및 교육 소개 - 마음열기 - 갈등 이해 - 갈등 해결의 다양한 방법이해
2	갈등해결의 실마 리 찾기	갈등분석을 통한 대응방 안 및 평화적 해결방법	- 갈등해결 분석기법 - 양파 분석 익히기

		찾기.	. 삼각형 분석 이해
3	감정과 분노 이해	분노조절을 통한 감정 조절과 행동 조절하기	-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이해 - 분노 감정과 신체 반응 그래프 이해 - 분노의 원인과 자극 분리하기 - 효과적 분노 조절하기
4	평화적 의사소통 이해1	경청과 공감의 소통기법 이해	- 의사소통의 필터이해 - 경청적 듣기, 확인하기 - 관심을 통한 소통, 질문하기
5	평화적 의사소통 이해2	평화적 표현기법 익히기	- 평화적 소통 : '나'를 중심으로 한 표현법 익히기 - 함께 해결하는 대화, 조정적 말하기
6	나와 너 함께 살아가기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 참된 '나' 그리기: 나의 인생나무 - 평화 공동체 만들기: 차이와 편견, 차별 이해 - 자기 상상 만들기 - 소감 나누기

(2)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모임 진행

- 조정자: 여혜숙, 박인혜
- 예비조정: 2월13일 16:00-18:00, 2월19일 15:00-17:30
- 1차 대화모임: 3월5일(일) 17:00-22:00,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2차 예비조정: 3월14일(화) 9:00-14:00, 기관 회의실
- 2차 대화모임: 3월14일(화) 14:20-16:00, 기관 회의실

(3)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 교사 교육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18일(화), 25일(화) 16:30-18:00
- 대상: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 원장, 교사 20여명
- 주제: 갈등해결을 위한 대화, 민주적 소통
- 진행: 여혜숙, 박인혜

(4) 2023년 평화통일사회적대화

- 국민참여 사회적대화 퍼실리테이터 : 여혜숙, 이덕경
- 서울지역 평화통일 활동가 사회적대화 참여: 여혜숙, 이덕경, 김정아

5) 기타 활동

- (1)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평화여성회 부스 참여
- 일시: 3월 4일(토) 12:00-17:00, 서울시청광장
- 참석: 김다미, 김지선, 여혜숙, 이권명희, 조윤희, 한옥화

(2) 사무실 자료 정리

- 4/12 (수) 11:00-16:00 김지선, 박인혜, 여혜숙
- 5/26 (금) 13:00-16:00 박인혜, 여혜숙
- 6/16 (금) 13:00-16:00 김지선, 여혜숙

6) 평가

- 덕신고, 동구어린이집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맞춤형 평화 교육을 기획, 실행하였고 문제해결 대화모임에 평화적 대화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 상·하반기 개최된 교육활동 배우기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자신의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진 점은 평화교육에 대한 역량강화 및 일상의 평화 실현 연구, 개발의 한 부분으로 의미가 있었다.
- 온라인 소통방 적극 활용을 통한 정보와 소식 공유로 회원간 교류 및 활동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연구, 발전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자체 기획 및 실천이 부재하였으나 일부 회원들이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꾸준한 참여를 통하여 그 실천의 맥을 이을 수 있었던 점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 회원들 대부분이 센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 적극적 실천 활동이 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으며 이로 인해 2024년에는 조직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기로 하다.

【6】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 2023년 연구원 총평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2023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높여 일정 수준 자치가 이루어짐. 2020년 개최해온 연구위원 위주의 ‘연구원 워크숍’을 2021년부터 본회 사업으로 ‘여성과 평화 포럼’을 구축한 이래로 연구원 주도로 2023년까지 11회 개최했음. 또한 <여성과 평화> 8호 제작을 어려운 여건에도 진행을 했고,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의 공동 주최로 학술심포지엄, <전쟁의 허스토리 와 경계의 여성들>(11.3) 를 개최하여 정전 70년이 되는 해에 여성평화의식과 평화운동의 필요성을 되새김. 연구원 전임 간사제를 폐지하여 원장이 허드레 일을 좀 더 해야 했던 해이며, 회원들의 친교성이 높아진 나름 멋진 한 해였음.

1. 연구원 성원

- 연구원 이사회: 한정숙 이사장, 강명숙(배재대 교수), 김귀옥(연구원 원장, 한성대 교수), 김동환(한성대 교수), 김명환(서울대 교수), 김성경(연구원 부원장,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김성보(연세대 교수), 박명림(연세대 교수), 원재연(연세대 교수), 정경훈(아주대 교수), 정진아(건국대 교수),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정아(통일연구원 부원장), 홍승희(대영고 교수) (14인)
- 연구원 연구위원: 김귀옥 원장,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 교수), 강인화(서울대 연구교수), 김수지(렛거스 대학 부교수), 김정아(‘기억과 기록’ 대표), 김태경(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도지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손서정(가톨릭대 대학원 박사), 윤보영(동국대 강사), 윤여령(충북대 강사), 이애덕(동작초 교사), 이은정(KBS뉴스 전문위원, 의학박사), 이지연(연세대), 전수미(변호사, 송실대), 정용숙(춘천교대 교수), 정은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승주(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연구원) (17인)
- 신입 연구위원-이지연(연세대); 탈퇴-이현희(일신 상의 이유)

2. 연구원 운영위원회와 회의

- : 운영위원회-원장, 부원장,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 학술위원장과 부위원장, 실행위원장과 부위원장, 코디네이터
- : 편집위원회-김귀옥(편집위원장); 부위원장-윤보영
- : 학술위원회-김성경(학술위원장); 부위원장-윤여령, 정은미
- : 연구위원회-윤보영(연구위원장); 부위원장-차승주
- : 코디네이터-김정아 * 참고-본회, 갈등해결센터와 이어주는 역할

- 1) 연구원 운영위원회 회의
 - 2023. 1. 27(금) 저녁 8시. 줌 회의
 - 안건: 2022년 평가와 2023년 계획 논의 및 확정
- 2) 2023. 12. 16(토) 오후 3-5:50. 대면 회의
 - 안건 : 주요 사항 보고 및 2024년 계획 논의
- 3) 2024. 1. 17(수) 오후 9-10시 줌 회의
 - 안건: 2023년 평가와 2024년 계획 구상
- 4) 2024. 1. 30(화) 오후 9-10시 줌 회의
 - 안건: 차기 연구원장 선임과 2024년 계획 확정

3. 연구원 워크숍 및 모임

- 담당: 윤보영(실행위원장); 차승주(부위원장)
- 취지: 2023년에는 최근 신입 연구위원 발표와 연구원의 교류 모임을 연 2회 정도 개최 예정
- 연구원 상반기 워크숍
 - ; 때와 곳: 2023. 2. 21, 10am, 줌 회의
 - ; 사회: 차승주(강원대)
 - ; 발제: 윤보영(동국대)
 - ; 내용: 김재용·이상경 『혁명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소명출판, 2022) 중 2부(고난의 행군 이후의 여성 문학)
 - ; 참석자: 정현백, 김귀옥, 윤보영, 차승주, 이현희, 윤여령, 정은미

여성평화 워크숍

일시: 2월 21일 오전 10시 • 이후 연구위원 회의
 사회: 차승주(강원대)
 발제: 윤보영(동국대)
 내용: 책 김재용, 이상경 <혁명 속의 여성, 여성 속의 혁명> 2부, 고난의 행군 이후의 여성 문학
 김자경의 2017년 <사람을 다 바쳐>를 중심으로 토론

지금껏 서정관의 '인생열차'는 '움행'은 아니었어도 탈선되거나 연착되는 일이 없이 바라는 대로 승조롭게 내달려 왔다. 그런데... 송림숙의 출현으로 하여 기쁨 좋게 내달리던 그의 '인생열차'는 드디어 정지된 것이었다.

<사람을 다 바쳐> 중에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함께 책 읽기>

10월 워크숍

그리고 맥주가 있는 밤

일정: 10월 21일(토) 15시
 장소: 여성미래센터
 도서: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사 회: 차승주

발제1: 윤여령
 1부 한국전쟁과 경계인의 삶 中
 1장 "사라진 김사량과 남겨진 종군기"

발제2: 윤보영
 2부 한국전쟁의 기억과 망각 中
 6장 "일본의 평화와 망각의 구조
 -노로 구니노부의 「혁명」을 중심으로"

토론: 모두 함께

- 연구원 하반기 워크샵

; 때와 곳: 2023. 12. 16(토), 연구원 원장 집

; 사회: 차승주(강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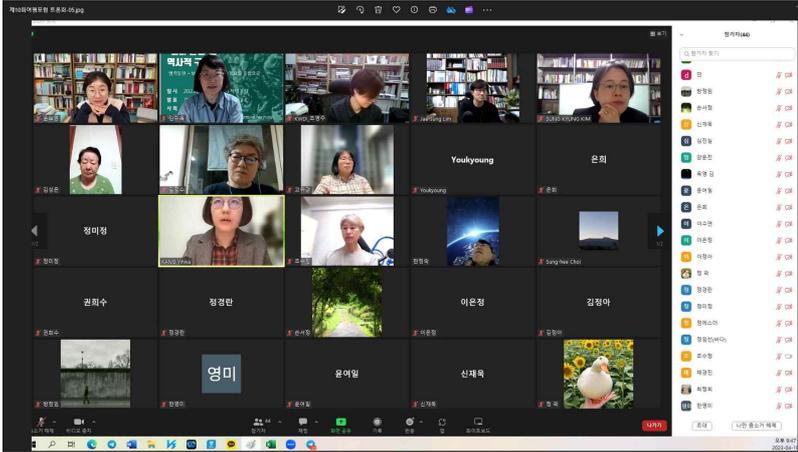
; 발제: 윤여령, 윤보영

; 내용: 김려실 외.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경험, 기억, 포스트기억 사이에서』(소명출판, 2023)

; 참석자-김귀옥 김정아 윤여령 이애덕 차승주 정용숙 이지연 윤보영

4. 여성과 평화 포럼 개최. 2023년 3회 예정, 2회 진행

- 담당: 김성경(부원장 겸 학술위원장): 윤여령, 정은미(부위원장)

<p><제10회 여성과 평화 포럼> 일시 2023년 4월 19일(수) 저녁 8시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제목 군가산점제도와 '젠더 갈등'의 역사적 구성: 병력동원-보상체제의 형성과 동요를 중심으로 발표 강인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사회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 고유경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F) 컨설턴트 임재성 /해마루 변호사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참석자: 50명 내외</p>

제11회 여성과 평화 포럼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제목 한국 평화교육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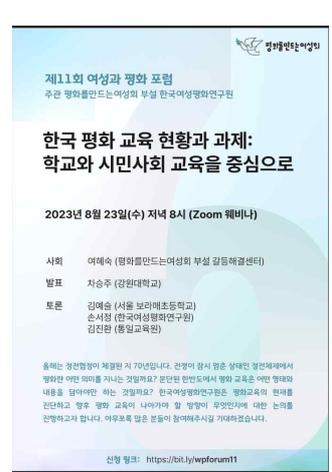
발표 차승주/강원대학교

사회 여혜숙 /평화를만드년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토론

강혜승 /서울 보라매초등학교

손서정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김진환 /통일교육원



참석자: 40명 내외

5. 『여성과 평화』 8호 (2024년 1월 25일 발간됨)

발간사 (한정숙)

머리말 (김귀옥)

[특집] 분단, 전쟁, 정전, 여성의 삶과 평화

- 01 김귀옥(한성대학교) 여성들, 분단과 냉전을 살며 넘어서기를 꿈꾸다
- 02 윤정란(숭실대학교) 한국 전쟁과 장사에 나선 피난민 여성들의 삶
- 03 박미현(강원도민일보) 춘천여성이 겪은 ‘결 다른’ 한국전쟁
- 04 박정미(충북대학교)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여성들이 역사를 만들다: 미군 ‘위안부’ 국가 배상 소송의 의미와 계보

[여성평화운동]

- 05 정현백(성균관대학교) 멀고 먼 평화운동의 길, 절망이라는 게으름을 넘어서는 발걸음으로
- 06 김정수(평여) 2023년 정전협정 70년, 여성평화운동을 통해 만난 여성들
- 07 이정아(경기여연) 여성평화의제 (경기)지역화-‘고단함’에 얹어지는 위로의 말(들)

[회원논단]

08 이덕경(평여)... 진짜 평화? 가짜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책 읽고 말하기]

09 유임하(한국체육대학교) 여성의 관점, 여성의 서사_조선희의 장편 『세 여자』와 김성경의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 읽기

[번역] 성평등 가족과 사회

10 오카노 야요(岡野八代) 평등과 패밀리를 요구하며: 돌봄의 윤리로부터 동성혼을 둘러싼 논의를 되돌아보다. (번역: 장수희)



6. 학술심포지엄

- 기획과 준비: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의 공동 주최 제안에 따라 2022년 12월 기획 착수, 발표자 섭외 완료, 2023년 10월경, 진행 및 토론자 섭외 완료
- 행사 진행
 - 제1일(2023.11.3.금) 학술심포지엄 “전쟁의 허스토리과 경계의 여성들”
 - 제2일(2023.11.4.토)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20명 내외
- 행사비 총 부담: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평화여성회 여성평화연구원-전체 기획

과 평화기행 점심값 부담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

장 소 |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정강홀

11월 3일(금)		전해진행 윤보영 (동국대학교)
10:30 ~ 10:40	개회사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연구소)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세션 1 여성의 전쟁 경험과 전후 체제		사회 김도민 (강원대학교)
10:40 ~ 13:00	발표 1 "태평양전쟁하의 조선 여성들의 삶; 분열과 대립" 송연옥 (문화센터 아리랑, 도쿄)	
	발표 2 "분단과 전쟁으로 한쪽 날개 꺾인 한국여성운동" 김귀옥 (한성대학교)	
	토론 심아정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발표 3 "2차대전기 중·동부 유럽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 참전, 성폭력, 가부장제" 한정숙 (서울대학교)	
	토론 정용숙 (춘천교육대학교)	
13:00 ~ 14:30	Lunch	
세션 2 경계선에 선 여성들		사회 이선향 (강원대학교)
14:30 ~ 16:10	발표 4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본 분단: 여성'들의' 전복적 위치성 탐색"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 5 "남북 국경지대 강원 여성 경험 고찰"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토론 권혁희 (강원대학교)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16:10 ~ 16:20	Break time	
16:20 ~ 18:00	발표 6 "경기도 민통선마을 군사주의와 여성의 삶" 안태윤 (서울여대)	
	발표 7 "지역에서 지역의 전쟁을 기억하는 한 방법 - 한국전쟁, 인천여성, 구술사"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토론 차승주 (강원대학교) 안강진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 전쟁과 평화 학술심포지엄

전쟁의 히스토리야 경계의 여성들

전후는 자주 전언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페레스타이-이스라엘 폭력 갈등이 중폭되고 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둔 한반도도 평화 부재의 깊은 어둠에 빠졌다. 전쟁 위기와 적대 확산의 급박성을 함께 여성과 젠더 관망의 역사 이해와 현실 분석은 거듭 뒤로 물러나. 이 학술회의는 전쟁과 평화의 히스토리(History)를 다룬다. 이 학술회의는 20세기 전쟁들에서 여성들이 겪은 특별한 경험과 고유한 기억을 살펴보고 동시에 남북한 합경 지역 여성들의 삶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학술 회의는 그것을 통해 전후 분단의 실감이 전언의 일시의 고요가 아니라 평화 행로를 위한 같은 성찰이 되는 또 다른 길을 열도록 돕는다.

일 시 2023.11.3.(금) 10:30~18:00
장 소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정강홀

11월 3일(금) 전해진행 윤보영 (동국대학교)

10:30 ~ 10:40 **개회사**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연구소)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세션 1 여성의 전쟁 경험과 전후 체제 사회 김도민 (강원대학교)

발표 1 "태평양전쟁하의 조선 여성들의 삶; 분열과 대립" 송연옥 (문화센터 아리랑, 도쿄)

발표 2 "분단과 전쟁으로 한쪽 날개 꺾인 한국여성운동" 김귀옥 (한성대학교)

토론 심아정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발표 3 "2차대전기 중·동부 유럽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 참전, 성폭력, 가부장제" 한정숙 (서울대학교)

토론 정용숙 (춘천교육대학교)

13:00 ~ 14:30 Lunch

세션 2 경계선에 선 여성들 사회 이선향 (강원대학교)

발표 4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본 분단: 여성'들의' 전복적 위치성 탐색"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 5 "남북 국경지대 강원 여성 경험 고찰" 박미현 (강원도민일보)

토론 권혁희 (강원대학교)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16:10 ~ 16:20 Break time

발표 6 "경기도 민통선마을 군사주의와 여성의 삶" 안태윤 (서울여대)

발표 7 "지역에서 지역의 전쟁을 기억하는 한 방법 - 한국전쟁, 인천여성, 구술사" 김영선 (성공회대학교)

토론 차승주 (강원대학교) 안강진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최: KNU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 후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문의: 강평협(평화시대) | 춘천시 강원대학교 | 통일도서관 1층 | 033-250-8031-8032
홈페이지: http://knu.kangwon.ac.kr | E-mail: knu@kangwon.ac.kr



2023.11.3(금) 강원도 통일강원연구원과 평여 한 국여성평화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심포지엄 기념 사진 촬영



2023.11.4(토) 평화기행 화천 평화의 댐 에서

2023년 결산보고

2023년도 결산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추경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회비수입	2,500,000	2,262,060	90.48%		2,262,060	사업비	24,300,000	17,037,968	70.12%	4,980,000	22,017,968
회원	2,500,000	2,262,060	90.48%		2,262,060	회익비	1,600,000	1,308,350	81.77%		1,308,350
후원금	54,700,000	48,238,270	88.19%	180,000	48,418,270	평화통일사업	10,000,000	4,474,618	44.75%	4,980,000	9,454,618
개인	36,300,000	30,044,270	82.77%	180,000	30,224,270	재정사업	3,000,000	2,955,000	98.50%		2,955,000
이사	12,000,000	12,500,000	104.17%		12,500,000	연대사업비	3,300,000	2,200,000	66.67%		2,200,000
재정모금	4,000,000	3,294,000	82.35%		3,294,000	출판지원금	3,000,000	3,000,000	100.00%		3,000,000
부설기관후원	2,400,000	2,400,000	100.00%		2,400,000	부설기구 교부금	3,400,000	3,100,000	91.18%		3,100,000
사업수입	-	0		4,800,000	4,800,000	갈등해결센터	1,200,000	1,200,000	100.00%		1,200,000
참가수입	-	0			0	여성평화연구원	2,200,000	1,900,000	86.36%		1,900,000
자료제공	-	0			0	인건비	19,000,000	18,921,160	99.59%		18,921,160
기타수입	262,375	9,771	3.72%		9,771	업무추진비	4,800,000	4,800,000	100.00%		4,800,000
차입금	-	0			0	인건비	14,200,000	14,121,160	99.44%		14,121,160
						운영비	16,000,000	13,924,273	87.03%		13,924,273
						관리비	8,000,000	7,784,257	97.30%		7,784,257
						복리후생비	3,500,000	3,007,240	85.92%		3,007,240
						사무비	3,000,000	2,372,256	79.08%		2,372,256
						통신비	800,000	614,120	76.77%		614,120
						기타지출	700,000	146,400	20.91%		146,400
						미지급금	-	-			-
						차입금	-	-			-
						연대사업비	-	-			-
						적립금	2,100,000	900,000	42.86%		900,000
						퇴직적립금	2,100,000	900,000	42.86%		900,000
						예비비	800,000	-	0.00%		-
소계	57,462,375	50,510,101	87.90%	4,980,000	55,490,101	소계	62,200,000	50,783,401	81.65%	4,980,000	55,763,401
전년이월금	4,737,625	4,737,625			4,737,625	차년이월금		4,464,325			4,464,325
총계	62,200,000	55,247,726	88.82%	4,980,000	60,227,726	총계	62,200,000	55,247,726	88.82%	4,980,000	60,227,726

2. 갈등해결센터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전입금	1,200,000	1,200,000	100.00%		1,200,000	사업비	1,000,000	5,345,300	534.53%		5,345,300
후원금	1,000,000	460,000	46.00%		460,000	회의비	500,000	245,300	49.06%		245,300
참가수입	50,000	4,900,000	9800.00%		4,900,000	강사비	500,000	5,100,000	1020.00%		5,100,000
자료제공	0	0			0	프로젝트사업비	0	0			0
기타수입	1,239	2,011	162.31%		2,011	운영비	2,400,000	1,261,500	52.56%		1,261,500
						인건비	2,000,000	1,200,000	60.00%		1,200,000
						사무관리비	50,000	0	0.00%		0
						복리후생비	300,000	60,000	20.00%		60,000
						기타지출	50,000	1,500	3.00%		1,500
						예비비	300,000	0	0.00%		
소계	2,251,239	6,562,011	291.48%		6,562,011	소계	3,700,000	6,606,800	178.56%		6,606,800
전년이월금	1,802,761	1,802,761			1,802,761	차년이월금	354,000	1,757,972	496.60%		1,757,972
총계	4,054,000	8,364,772	206.33%		8,364,772	총계	4,054,000	8,364,772	206.33%		8,364,772

3. 한국여성평화연구원 결산

계정과목	수입부					지출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계정과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예산	결산	달성율				예산	결산	달성율		
본회교부금	1,200,000	1,900,000	158.33%		1,900,000	사업비	5,800,000	1,100,000	18.97%		1,100,000
이사회비	5,000,000	3,000,000	60.00%		3,000,000	회의비	300,000	0	0.00%		0
참가수입	150,000	0	0.00%		0	강사비	1,000,000	1,100,000	110.00%		1,100,000
자료제공	0	0			0	<여성과 평화> 출판비	4,000,000	0	0.00%		0
기타수입	578,017	5,657	0.98%		5,657	프로젝트 사업비	500,000	0	0.00%		0
후원금	1,000,000	0	0.00%		0	운영비	4,000,000	1,235,000	30.88%		1,235,000
출판지원금	3,000,000	3,000,000	100.00%		3,000,000	인건비	3,600,000	1,200,000	33.33%		1,200,000
						사무비	100,000	30,000	30.00%		30,000
						복리후생비	200,000	0	0.00%		0
						기타지출	100,000	5,000	5.00%		5,000
						예비비	4,200,000	0	0.00%		0
소계	10,928,017	7,905,657	72.34	0	7,905,657	소계	14,000,000	2,335,000	16.68%		2,335,000
전년이월금	3,071,983	3,071,983	100.00%		3,071,983	차년이월금		8,642,640			8,642,640
총계	14,000,000	10,977,640	78.41%	0	10,977,640	총계	14,000,000	10,977,640	78.41%		10,977,640

비고 : [여성과 평화] 제8호 2024년 1월 출판으로 2023년에 책정한 예산 집행이 2024년으로 이월됨

2023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기관 포함)의 재정 현황

1. 일반회계

1-1. 일반회계

수 입		지 출	
전년이월	9,612,369		
본 회	4,737,625		
갈등해결센터	1,802,761		
한국여성평화연구원	3,071,983		
2023년 수입	69,957,769	2023년 지출	64,705,201
본 회	55,490,101	본 회	55,763,401
갈등해결센터	6,562,011	갈등해결센터	6,606,80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7,905,65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335,000
		차년이월	14,864,937
		본 회	4,464,325
		갈등해결센터	1,757,97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8,642,640
합 계	79,570,138	합 계	79,570,138

수 입		지 출	
2023년 수입	79,570,138	2023년 지출	79,570,138
본 회	60,227,726	본 회	60,227,726
갈등해결센터	8,364,772	갈등해결센터	8,364,77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977,64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0,977,640
합 계	79,570,138	합 계	79,570,138

1-2. 특별회계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2023 제주여성평화워크숍 “공감과 연대”	4,980,000	4,980,000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4,500,000) 예수회(300,000) 강정정선녀(180,000)
1건	4,980,000	4,980,000	

2. 기금

2-1. 남북교류기금

내역	수입	지출	잔액	내역
전년이월	77,969		77,969	
2023년 이자	76		76	
합계	78,045	0	78,045	

2-2. 퇴직적립금

내역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전기이월금(2022)	3,213,222		3,213,222	
적립금	900,000		4,113,222	
퇴직금지급		3,951,156	162,066	
예금이자	850		162,916	
합계	4,114,072	3,951,156	162,916	잔액 차기이월금(2024)

3. 자산 및 부채

3-1. 부동산자산 : 여성미래센터 전세금 55,711,000원

3-2. 출자금(법인등기) : 50,180,396

2023년 회원회비 현황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번호	이름	금액
1	강경란	60,000	41	민정숙	100,000
2	강미연	120,000	42	박경로	240,000
3	강인화	120,000	43	박난희	110,000
4	강지윤	240,000	44	박명림	120,000
5	고유경	120,000	45	박배균	120,000
6	권희수	110,000	46	박병인	120,000
7	김경미	120,000	47	박선옥	120,000
8	김경민	120,000	48	박은미	120,000
9	김귀옥	120,000	49	박인숙	120,000
10	김귀희	120,000	50	박인아	120,000
11	김다미	120,000	51	박인혜	50,000
12	김동환	360,000	52	박정렬	55,000
13	김미경	60,000	53	박진경	60,000
14	김민화	240,000	54	박현선	240,000
15	김선일	120,000	55	박현숙	360,000
16	김선혜	120,000	56	박남희	120,000
17	김성경	360,000	57	백미순	10,000
18	김수길	300,000	58	백영민	120,000
19	김숙임	120,000	59	서명숙	240,000
20	김아름	20,000	60	서미숙	60,000
21	김연수	110,000	61	서민순	120,000
22	김영리	50,000	62	서영주	240,000
23	김은진	120,000	63	손빛나리	120,000
24	김정수	120,000	64	손서정	120,000
25	김정아	120,000	65	손은정	120,000
26	김정옥	120,000	66	손희정	120,000
27	김지선	100,000	67	송소희	60,000
28	김지호	80,000	68	송혜련	100,000
29	김진환	120,000	69	신난희	70,000
30	김태경	180,000	70	신정완	120,000
31	김현미	120,000	71	신혜진	120,000
32	김현희	120,000	72	안경호	120,000
33	김혜경	120,000	73	안김정애	240,000
34	김화숙	240,000	74	안수경	120,000
35	김희은	120,000	75	안영미	120,000
36	노귀남	120,000	76	양덕열	120,000
37	노향란	120,000	77	여혜숙	270,000
38	도지인	60,000	78	오순애	60,000
39	문명녀	90,000	79	오종열	120,000
40	문영금	120,000	80	오채림	60,000

81	유시대	60,000	115	정경훈	120,000
82	유은주	240,000	116	정경희	240,000
83	유임하	120,000	117	정범진	60,000
84	유지연	66,330	118	정용숙	120,000
85	윤경원	240,000	119	정원진	120,000
86	윤보영	120,000	120	정은미	240,000
87	윤여령	110,000	121	정은아	30,000
88	윤은주	330,000	122	정현기	120,000
89	윤희란	100,000	123	정혜진	120,000
90	이경순	120,000	124	조영미	120,000
91	이명희	120,000	125	조영숙	360,000
92	이금순	30,000	126	조영순	60,000
93	이덕경	120,000	127	조영주	120,000
94	이명화	120,000	128	조영희	110,000
95	이상임	120,000	129	지혜경	70,000
96	이상화	70,000	130	차승주	120,000
97	이소윤	60,000	131	최민정	60,000
98	이애덕	240,000	132	최선희	110,000
99	이예정	120,000	133	최안진경	20,000
100	이윤아	120,000	134	최영숙	60,000
101	이은정	360,000	135	최영애	120,000
102	이정은	120,000	136	최윤태	120,000
103	이충진	120,000	137	최은영	120,000
104	이하영	120,000	138	한모니까	240,000
105	이향림	60,000	139	한산석	110,000
106	이현숙	120,000	140	한옥화	110,000
107	이현주	20,000	141	한정숙	120,000
108	이현주	60,000	142	함경숙	20,000
109	이현희	120,000	143	함영미	120,000
110	이화진	120,000	144	허영란	120,000
111	전상희	240,000	145	허옥	120,000
112	전수미	120,000	146	홍승희	120,000
113	전희정	120,000	147	황영주	120,000
114	정경란	120,000			
CMS 회원 소계					18,951,330
148	김은희	120,000	152	이유란_노현필	120,000
149	박수선	300,000	153	이현희	240,000
150	양미강	120,000	154	조윤희	120,000
151	오채림	35,000			
자동이체 회원 소계					1,055,000
합계					20,006,330

2023년 이사회비 현황_본회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1,000,000
2	김성은	1,000,000
3	김정수	1,000,000
4	김정아	1,000,000
5	김지영	1,000,000
6	김형규	1,000,000
7	배현주	1,000,000
8	안김정애	1,000,000
7	여혜숙	1,000,000
8	윤은주	1,000,000
9	이명희	500,000
10	이애덕	1,000,000
11	한정숙	1,000,000
합 계		12,500,000

2023년 후원 현황_본회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숙임	200,000
2	여혜숙	500,000
3	익명	5,000,000
4	김지영	4,000,000
5	김정아	100,000
9	한정숙	1,500,000
10	이은주	100,000
11	김귀옥	200,000
12	정현백	700,000
합 계		12,300,000

2023 후원 현황_갈등해결센터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이덕경	150,000
2	박인혜	310,000
합 계		460,000

2023년 이사회비 현황
_한국여성평화연구원

(단위 : 원)

번호	이름	금액
1	김귀옥	500,000
2	김성경	500,000
3	원재연	500,000
4	정경훈	500,000
5	한정숙	500,000
6	홍승희	500,000
합 계		3,000,000

2023년 평화회원상

차승주 회원

단단한 눈

언제나 선한 목소리
단정하고 사려 깊은 눈은 다정하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의 입은 차돌처럼 단단하다.

평화를 연구하고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어둠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강한 마음,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평화를 앗아가는 부조리 너머
파괴되는 일상까지 바라보는 것.
적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글: 윤보영 회원)

2024년 임원 인선

2024년 신임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연임 및 신임 임원안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인선위원회 숫자는 이사 2인 포함 5인 내외로 한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임원 선출 (안)

공동대표(상임) 신임 : 안김정애(2024~2025)

이사 연임 : 김정아, 윤은주(2024~2026년)

감사(사업) 신임 : 이권명희(2024~2026)

○ 인선위원회 운영 과정

- 2024년 1월 19일 2차 총준위에서 인선위원 추천, 1월 26일 이사회에 보고함

■ 인선위원 : 여혜숙(위원장), 김귀옥, 김성은, 윤보영, 이애덕

- 2023년 1월 26일(금) 2023년 1차 이사회에서 임원선출(안) 승인
- 2023년 2월 6일(화) 2024년 제28차 정기총회에 임원 선출(안) 제출

○ 2024년 임원 임기(안)

구분	명 단	임기	비 고	인선(안)
이사회	한정숙(이사장)	2022~2024	신임	
	김성은	2022~2024	연임	
	김귀옥	2023~2025	연임	
	김정수	2023~2025	연임	
	김정아	2024~2026	연임	
	여혜숙	2023~2025	연임	
	윤은주	2024~2026	연임	
	이애덕	2023~2025	신임	
	김형규	2023~2025	신임	
	안김정애	2023~2025	신임	
상임대표	안김정애	2024~2025	신임	잔여임기
공동대표				
감 사	안수경	2023~2025	연임	
	이권명희	2024~2026	신임	2024.2~2027.1
부설기구				
	원장 김귀옥	2022~2024	연임	

※ 임원 임기는 회계 연도(1.1.~12.31.)에 준한다.

2024년 사업계획안

1. 2024 사업기조와 방향(안)

2024년은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이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79주기, 한국전쟁 74주기, 정전협정 71주기를 맞는 해이다. 국내외적으로 보건대 어느 해보다도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가까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2개의 대형전쟁, 즉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2년 차에 들어가며,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납치살인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전쟁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양전쟁의 민간인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로 집계되고 있다. 2023년 세계 군비지출은 2조 2천억 달러(한화 약 2860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로, 냉전 뒤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개의 전쟁에 힘입어 세계 9대 방산대국이 되었다. 21세기 서방에 신속히 대량으로 가성비 뛰어난 무기를 공급할 나라는 사실상 한국 뿐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비극은 서방의 무기고가 되는 역설을 낳았고, 보호주의 진영화는 방위산업에서 급진전 중이다. 윤석열 정권은 무기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공표하고 있으며, 실제 무기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취임 3년 차인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한 전쟁위험 증가이다. 윤 정권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사시 ‘즉·강·끝(즉각·강력·끝까지 응징)’ 전술을 전 군에 지시한 상태이다. 윤 정권은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가치외교’ 기조 하에 자유주의 국가와의 연대강화에 다걸기를 하여 조·중·러 적대시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미·일·한 군사안보협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대만 문제 간섭 등 어리석은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기를 1년간 18조 어치를 수입하고 미국의 초대형 전략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초대형 핵동력항공모함 등 각종 핵전략 수단들을 한반도에 투입되도록 하며, 각종 규모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역대 최고의 기록이라며 확대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은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며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2023.12.31./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문)라고 밝히고 있다. 남북이 이미 말을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선다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평화여성회는 죽음과 갈등이 아닌 살림과 돌봄의 여성주의적 평화 패러다임을 전제로, 폭력적인 군사주의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등 성평등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는 2024년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활동해 나갈 것이다.

1.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UNSCR 1325(WPS 의제)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의 남성의 동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활동과 여성들이 만드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평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쟁의 위협을 정확히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2023년 12월 12일에 출범한 여성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와 연대 활동을 벌이고, 국내외 여성시민 평화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현안 대응 연대 활동
- 한반도 전쟁 반대 성명서와 논평 발표
-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활동
- 미국과 북한에 평화협정 체결 촉구
- 대한민국 국회에 9·19 군사합의 비준 촉구
- 국내 군사주의 현장 답사 및 지역활동가/단체들과의 연대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활동
- 국내외 평화여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

2.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 남북여성교류 기반 마련 및 판문점 여성평화걷기 진행
- 여성주의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 모색
- UNSCR 1325(WPS 의제) 기반, 한반도 평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외교·안보 정책분야(국방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각 위원회 등)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요구
- 전쟁이 기후 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3.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회원 역량 강화(부설 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문화 확산 기여, 회원들 간의 소속감 강화를 위한 온라인 소통 및 회원모임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실행과 주제가 있는 회원모임 개최를 해 나가기로 한다.

4. 여성평화 연구역량 강화와 내실화(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역량 증대, 내실화에 토대를 둔 활동 방안 모색, 연구원 구성원들의 참여 증진과 연구역량 함양을 목표로 워크숍 진행, 여성과 평화 포럼 진행, 『여성과 평화』 9호 출간 준비 등을 해 나가기로 한다.

【1】 조직사업

1. 회의

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24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장 : 한정숙
 - 이 사 : 김귀옥,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형규, 안김정애, 여혜숙, 윤은주, 이애덕 (가나다순, 존칭 생략)

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

3) 내용 : 매주

2. 위원회

2-1. 정책위원회

1) 역할 :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제안한다.

2) 구성(위원 : 구성 중)

【2】 평화통일 사업

1.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조성을 위한 국내외 연대활동

성평등한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UNSCR 1325(WPS 의제)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의 남성의 동등 참여,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군사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쟁 예방을 위한 활동과 여성들이 만드는 구체적인 적극적인 평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올해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쟁의 위협을 정확히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2023년 12월 12일에 출범한 여성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와 연대 활동을 벌이고, 국내외 여성시민 평화단체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현안 대응 연대 활동
- 한반도 전쟁 반대 성명서와 논평 발표
-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활동
- 미국과 북한에 평화협정 체결 촉구
- 대한민국 국회에 9·19 군사합의 비준 촉구
- 국내 군사주의 현장 답사 및 지역활동가/단체들과의 연대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활동
- 국내외 평화여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

2.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 남북여성교류 기반 마련 및 판문점 여성평화걷기 진행
- 여성주의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 모색
- UNSCR 1325(WPS 의제) 기반, 한반도 평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외교·안보 정책분야(국방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각 위원회 등)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요구

- 전쟁이 기후 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차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개최

【3】 정보·홍보, 회원, 재정 사업

1. 정보·홍보 사업

- 1) 홈페이지, 페이스북, 여성평화안보(WPS) 유튜브 채널 등 SNS 평화활동
-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 소식지 발송
- 3) 메일을 통해 본회 소식 전달

2.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양성과 역량을 확대 강화한다.

3. 재정 사업

- 1) 평화여성회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
- 2) 연말연시 기금 마련 활동 (굿감 판매 등)

【4】 연대 및 협력 사업

1. 국내 상설 연대

-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대표자회의, 사무국장 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등
- 1-2.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의 국내 네트워크 활동)
- 1-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여성본부
- 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네트워크 총회, 수요시위 주관
- 1-6. 시민평화포럼
- 1-7. 통일교육협의회

2. 국내 사안별 연대

- 2-1. 한반도 평화행동(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2-2.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
- 2-3.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2-4.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3. 국제 연대

- 3-1. GPPAC(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3-2. 기타

【5】 부설 갈등해결센터 2024년 사업계획안

1. 조직 :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

- 센터장 :
- 운영위원회:박인혜(운영위원장), 김정아, 김지선, 손서정, 손희정, 여혜숙
- 갈등해결센터 소통방 :김다미, 김정아, 김지선, 김희은, 문경아, 박인혜, 손서정, 손희정, 서민순, 신난희, 여혜숙, 이권명희, 이덕경, 이하영, 이향림, 최영애 (16명)

2. 사업방향과 목표

- 평화·통일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갈등해결적 관점에서의 평화·통일교육을 개발, 실천하며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 센터 회원들 간의 소속감 강화와 내실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소통 및 회원모임을 활성화 한다.

3. 세부사업

- 서로 배우고 나누는 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실행
- 주제가 있는 회원모임 개최

【6】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24년 계획

1. 연구원 활동 전망과 계획

- 1) 연구원 차기 원장(임기: 2025총회 인준-2027) 선임
 - 윤보영 차기 원장 선출
 - 2024년에는 부원장으로서 일하기로함.
 - 전년도까지 부원장이었던 김성경 선생님은 연구위원과 연구원 이사를 계속하시기로 함.

2) 연구원 워크숍

(1) 목표

- 연구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위원을 참여도를 높일 필요
- 진행 방식을 온라인/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화, 다각화하여 격월제로 진행

하기로 함.

- 워크숍을 통한 여성평화 담론의 구상과 토론

(2) 프로그램 : 2024년 연구원 워크숍 계획

여성평화연구원은 2024년 여성, 평화, 분단극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본으로 소속원이 각자 집중하고 있는 연구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세 번의 워크숍과 하반기 세 번의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삶을 살리는' 청소년 평화교육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 (확정)

- 발표 : 손서정
- 사회 : 김성경
- 일시와 장소 : 2월 27일(화) 오전 8시, 온라인(ZOOM)

2. 전지구화 시대 북한여성들의 초국적 노동과 행위성(안)

- 발표 : 이지연
- 사회 : 김태경
- 일시와 장소 : 4월 저녁, 온라인(ZOOM)

3.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낙인과 저항(안)

- 발표 : 강인화
- 사회 : 정용숙
- 일시와 장소 : 6월 저녁, 온라인(ZOOM)

4. 『혁명과 일상』

『Among Women Across Worlds: North Korea in the Global Cold War』
(안)

- 발표 : 김수지(수지킴)
- 사회 : 김귀옥
- 일시와 장소 : 8월, 여성미래센터

5. 평화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안)

- 발표 : 차승주
- 사회 : 김정아
- 일시와 장소 : 10월 저녁, 온라인(ZOOM)

6. 여성, 평화, 분단 등의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전시 감상과 나눔(안)

- 일시: 12월

3) 학술심포지엄

- 결정 사항: 2024년에는 안식년을 갖고, 차년도에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함.
- 단행권 기획을 목표로 학술행사와 병행하도록 함.

4) 『여성과 평화』 9호

- 결정 사항: 여성과평화 8호가 2024년 1월말에 출간되는 상황에, 부정기간행물로서의 위상은 유지하되, 2025년에 출간할 수 있도록 함.

2024년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회 예산(안)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목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관	항 목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일 반 회 계	전년이월	4,737,625	4,464,325	일 반 회 계	사업비	17,037,968	12,500,000
	회비	2,262,060	3,000,000		회의비	1,308,350	1,300,000
	회원	2,262,060	3,000,000		평화통일사업	4,474,618	3,800,000
	후원금	48,238,270	44,700,000		재정사업	2,955,000	0
	개인	30,044,270	30,300,000		연대사업비	2,200,000	2,000,000
	이사	12,500,000	12,000,000		[여성과평화] 출판비	3,000,000	3,000,000
	재정모금	3,294,000	0		부설기구 교부금	3,100,000	2,400,000
	부설기관후원	2,400,000	2,400,000		갈등해결센터	1,200,000	1,200,000
	참가수입	0	0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900,000	1,200,000
	자료제공	0	0		인건비	18,921,160	24,000,000
	기타수입	9,771	35,675		업무추진비	4,800,000	6,000,000
	차입금	0	0		인건비	14,121,160	18,000,000
				운영비	13,924,273	12,900,000	
합 계		55,247,726	52,200,000	관리비	7,784,257	8,000,000	
특이사항(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평화> 포럼 : 2023년 연구원 사업에서 2024년 본회 평화통일 사업으로 이월 • 퇴직적립금 : 인건비(업무추진비 제외) 10% 적립 				복리후생비	3,007,240	2,000,000	
				사무비	2,372,256	2,000,000	
				통신비	614,120	700,000	
				기타지출	146,400	200,000	
				미지급금	0	0	
				차입금	0	0	
				연대회의비	0	0	
				적립금(퇴직적립금)	900,000	1,800,000	
				예비비	0	1,000,000	
				차년이월	4,464,325	0	
				합 계		55,247,726	52,200,000

2. 갈등해결센터 예산(안)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목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관	항 목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일반 회계	전년이월	1,802,761	1,757,972	일반 회계	사업비	5,345,300	300,000	
	전입금	1,200,000	1,200,000		회익비	회의비	245,300	300,000
	후원금	460,000	0			강사비	5,100,000	0
	참가수입	4,900,000	0			프로젝트 사업비	0	0
	자료제공	0	0		운영비	1,261,500	1,200,000	
	기타수입	2,011	2,028		인건비	인건비	1,200,000	1,200,000
						사무관리비	0	0
						복리후생비	60,000	0
						기타지출	1,500	0
					예비비	0	0	
			차년이월금	1,757,972	1,460,000			
	합 계	8,364,772	2,960,000		합 계	8,364,772	2,960,000	

특별 안건

■ 특별 안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건

안건 설명

1. 본회는 통일부 등록 사단법인,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운영해 왔음
2. 서로 다른 두 법의 각각의 구속력에 의해 사람은 같으나 두 개의 단체(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해 온 것임
3. 이렇게 다른 이중적 법적 지위로 인해, 매해 행정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됨 (예: 연초 2월 말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 제출', 4월 말까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업보고 제출' 등.
4. 통일부 민간단체 담당자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의 건에 대해 문의하여 이사회 심의, 총회 의결로 안건처리하고 각 회의록을 신청서, 그 외 서류들과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해 준다고 함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해도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단 등의 공모사업 신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함
6.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됨(2024년 1월 26일)
7. 이에 2024년 2월 6일(화) 2024년 정기총회 안건으로 제출함

※ 참고 메일

유선으로 문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정관에 따라 총회/이사회 등을 거치신 후 아래 서류를 등기로 송부해주시면 말소 처리 후 결과를 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1. 단체 공문 1부.
2. 말소신청서 1부(첨부파일).
3. 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대한 사항이 논의된 관련 총회 및 이사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사본(정관상 말소에 대한 내용 의결범위 확인용) 1부.
5. 기존 등록증 원본(반납)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 통일협력기획과 / 서은영 주무관

02-2100-5816 / 이메일 ey11223@unikorea.go.kr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통일협력기획과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도
- 2024년 총선젠더정책
(여성과 평화) 자료 등
- 2023년 성명서 목록
- 회원가입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 2023년 8월 30일, 임시총회(29차)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 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 ①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기 납부한 회비와 기증품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기타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호선하여**,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호선하여**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은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④ 총회의 의결은 원격수단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 포함)
- ② 이사 15인 내외 (공동대표, 부설기구장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인선위원회 숫자는 이사 2인 포함 5인 내외로 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가 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4조(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호선하여**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5조(개최 및 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사회 의결은 원격수단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제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해산)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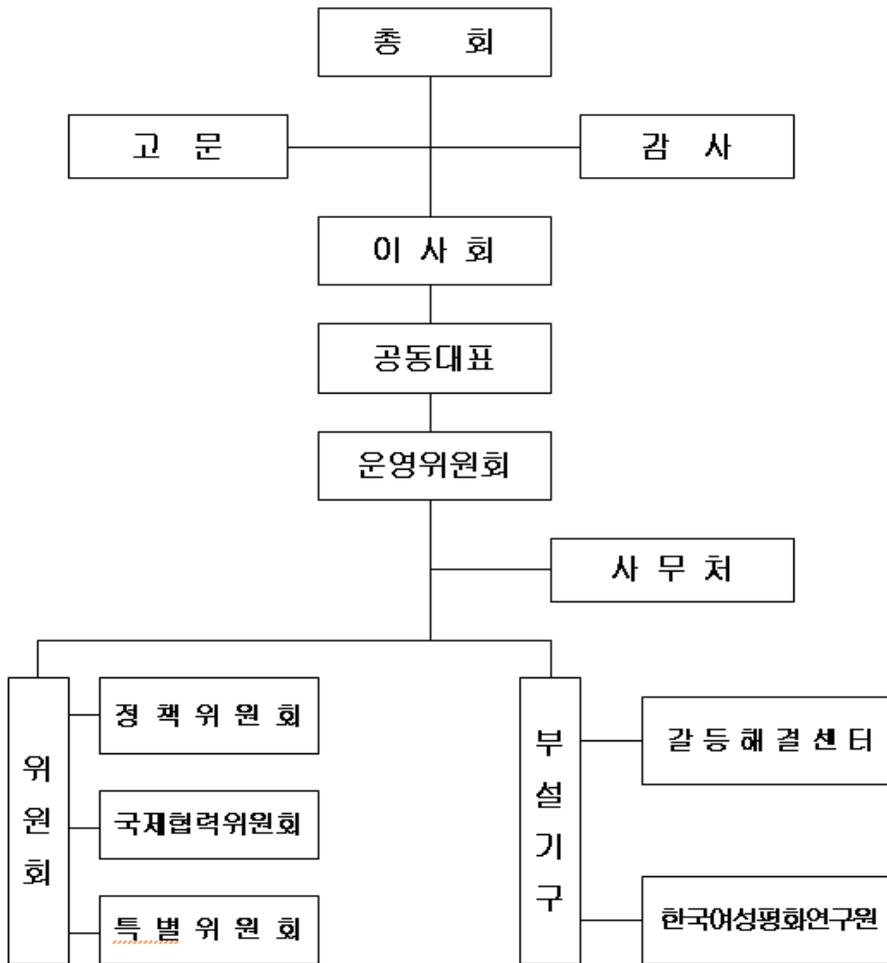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2023. 2. 2. 8차 개정
 2023. 8. 30. 9차 개정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도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NGO Report_여성과 평화 부문

제출 : 2023년 1월 6일

현황

2022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은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SLBM, ICBM 등 100회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NLL(북방한계선) 해상경계선 이남 동해 상 공해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 당국은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지상·해상·육상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였고, 동해에서는 최초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훈련이 실시되었다. 동북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다. 한국,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은 미국(1위)을 비롯하여, 중국(2위), 러시아(3위), 일본(9위), 한국(10위)이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날로 증가 하는 미-중 경쟁, 대만해협과 동해에서 고조되는 군사적 위기, 지역 내 군비 경쟁 심화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분쟁과 재난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미치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소녀들의 피해 또한 가장 클 수밖에 없다.

2022년 5월 취임한 한국의 새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해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국제규범 실현을 통한 성평등 정책 실현의 주요 의제인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3기) 역시, 여성가족부가 기존에 해 오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각 부처의 이행 점검은 서면점검만으로 실시되어 매우 형식적이었다. 동시에 1325 국가행동계획에서 여성가족부의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행 점검 역시 모니터링과 평가(ME) 시스템 부재, 이를 견인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미흡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1325 국가행동계획에 참여하는 10개 부처의 다양한 이행 보고서가 여성의 인간안보 확대라는 임팩트로 수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제안

- 1) 양성평등기본법 41조 3항을 개정,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라.
- 2)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20230508)

정전 70년, 윤석열 정부 1년, 우리에게 평화는 가능한가?
- 윤석열 정권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바라보며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202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윤석열 정부 1년의 정책평가와 제언을 하는 올해 2023년은 정전협정 70년, 동시에 한미동맹 70년이 되는 해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다.

종교시민사회(종교인평화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6.15남측위원회)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자”는 구호로 활동 중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은 윤석열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이른바 보수 언론, 보수?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 발전 중이다. 그러니까, 2023년 우리 사회에서 진보(중도 포함) 측은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전쟁 위기를 해소(전쟁 예방)하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고, 보수 측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전통적인 대북 억제 차원을 넘어 한-미-일 군사협력, 나아가 군사동맹을 지향하면서, 인도-태평양을 포함하여 글로벌로, 그리고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양 진영이 지향하는 평화와 안보는 그 개념부터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군사적)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했고(요새는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란 표현도 쓴다),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를 포함하여 인간안보가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양 진영이 대결 중이다.

윤석열 정부, 평화는 가능한가? 왜 실패라 부르는가?

오늘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에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평가와 제언을 맡았다. 잠깐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어디로 가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 토론회를 위해 발제 제목을 “정전 70년, 윤석열 정부 1년, 우리에게 평화는 가능한가? - 윤석열 정권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바라보며”라고 붙였다. “우리에게 평화는 가능한가”에서 질문하는 평화

는 물론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도 함께 참여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서 지향하는 평화, 적극적 평화, 인간안보가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를 의미한다. 적극적 평화는 여성단체연합의 평화통일운동(통일평화운동)에서 지향한 평화다.(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통일평화운동 분야 글 참조).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여성운동과 연대하며, 성평등 관점의 평화, 성평등한 한반도를 지향하면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평화교육, 평화문화, 여성평화역량 강화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소극적 평화 활동에 집중해 왔다. 그런 평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누가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실패를 바라보며”라는 부제를 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된 상황에서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돌진해 왔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부터 나열해 보자. 그 현상과 현재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 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5월 19일 발표한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문’에서 여성들이 요구한 내용과 그 현재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64개 여성평화단체와 개인 87명이 연명했다.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평화운동단체 기자회견문	
우리는 인간안보를 보장할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라	
여성평화운동의 요구사항 (2022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행 상황 (2023년 5월 1일 현재)
첫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 2022년 남북관계를 다룬 [2023 통일백서] -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 chapter 통째로 빠짐 - 인도적 지원은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고, 특히 남북직접교류는 전무함
둘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보는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인들에 대한) 정신전력 극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 2023년 2월 발간한 [2022년 국방백서]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으로 서술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참고) 문재인정부 백서(2018, 2020):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 기

<p>북한을 '적' 혹은 '주적'으로 명기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대결을, 이를 위한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통일교육원) 통일교육에서 '평화'가 삭제, '안보' 통일교육으로 다시 환원됨.
<p>세째, 윤석열 정부는 7.4 공동성명(1972),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남북공동선언(2000), 10.4 선언(2007),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이상 2018년) 등 지난 50년 동안 남북 사이에 채택된 합의나 정상들의 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 - 남북합의 이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 기존 합의서에서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협력/지원하겠다는 제안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4월 25일 발표된 미국 NBC와의 인터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을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밝힘 - 윤석열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거부할 이유 없지만, 보여주기식은 안돼"(20230101 신년인터뷰) - 최근 미국방문 중 언론인터뷰에서도 같은 발언
<p>네째,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은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취약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반대한다. 전쟁은 마지막 선택의 수단이나 가능성으로도 고려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을 의미하며 그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절멸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남북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뤄온 모든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국방백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한미연합군사훈련 256번 실시=1.5일에 한번 실시한 셈 - 2023년 2월~4월 북한수뇌부 참수작전, 공중, 육상, 해상(잠수함) 작전 + 한미일 해군(잠수함) 훈련 ○ 2022년 한국 국방비 전세계 9위 (21년 10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방산수출 사상 최대 173억 달러 - 2022 -> 2023 4.4% 증가 : 57조 - <2023-2027 국방중기계획> 2023~2027년까지 총 331조 원 국방예산에 투입, 107조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연평균 증가율 약 10.5%) ○ 북한의 위협 증대 & 군사적 긴장 고조됨 - 남한 항구, 비행장, 주요시설에 대한 모의 핵공격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약 70회 이상 미사일 발사 - 2022년 11월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속초 앞 해상에 미사일을 발사, 12월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 침투 - 2023년 3월 21-23일, 남한 항구에 초강력 해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핵무인수중공격정의 기폭실험 실시. 4월 13일 고체연료 로켓엔진 장착 화성-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콜드 런칭 방식으로 발사 등(공격 신속화)
<p>여섯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인도주의적 지원 외 정치·군사적 개입이나 미군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십만발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도됨

<p>통한 무기 지원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질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나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미군을 통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전쟁에 연루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의 평화적 해결, 대화와 외교적 수단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택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통신 인터뷰(20230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인 공격시 군사적 지원 고려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20230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언급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대응(20230420) - 한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전쟁의 당사국이 된 셈 ○ 러시아 내 한국교민과 한국기업(160여개) 위기에 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자동차 판매 1위 현대자동차 철수 예정, 약 1조원 이상 손해 예상
<p>일곱째, 윤석열 정부는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전쟁을 비롯한 무력 분쟁에서 가장 큰 피해와 희생을 겪어 온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여성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통일·외교·안보 영역의 성주류화와 여성들의 평화역량 강화, 평화 과정의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공약 등, 성평등정책 취약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의 이행도 여성가족부의 기존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기반 약화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기간 각 부처의 이행 점검은 서면으로만 실시되어 매우 형식적임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의 경우, 모니터링과 평가(ME) 시스템 부재로 인해, 1325 국가행동계획에 참여하는 10개 부처의 이행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1325 국가행동계획의 근본적 목표인 여성의 인간안보를 확대하는 임팩트로 수렴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p>※ 한일관계 & 한일역사문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2월 발간한 [2022년 국방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로 서술 - (참고) 문재인정부 「2020국방백서」: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로 서술 <p>2021년 6월 29일,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발언 :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나 경제·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p> <p>2021년 9월 11일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방문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를 만나서 한 말 :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p>	

<p>다 해드리겠다."</p> <p>2023년 3.1절 기념사 :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 평가</p> <p>2023년 3월 15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 :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왔다"... "이번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내가 생각한 것" 발언</p> <p>2023년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발언</p> <p>2023년 3월 24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인들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p> <p>2023년 3월 25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 "일본과의 양자관계 개선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지도력에 감사드린다"... "역내에서도 개선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한미일 3자관계 바람과도 부합한다" 발언</p> <p>2023년 4월 29일 윤 대통령 허버스트대 연설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 윤석열 대통령 - 대만 관련 발언으로 한-중 관계 악화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의 중요성 다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대신 전략적 명확성 선택 - 미국과 일본을 선택으로 지정학적 잇점을 포기한 셈 - 2023년 4월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 :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해협에서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 발언 -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20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타 죽는다"(21일 친강 외교부장) 등 비외교적인 표현, 막말에 가까운 비판으로 강하게 반발' - <p>○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대만 관련 입장이 간접적으로 반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용 추가 <p>○ 미-중 경쟁에서 핵심은 경제전쟁-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 한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결과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7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음 - 지난 20년 동안 한국 무역흑자의 90%는 중국과의 교역으로부터 옴(경제평론가들 발언) - 경제적 국익을 포기하는 모양새 - 한국의 핵심 산업, 핵심 이익은 미국(본토)으로 흡수되는 형국, 이후 장기적 결과는??
<p>※ 2023.4.26.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 ※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억지력을 한반도로 확대한 것, 예방(prevention) 성격 보다는 핵무력을 통한 북한의 공격력을 억제/억지한다는, 핵경쟁, 군비경쟁을 수반함
- 바이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 종말” 발언 - 미국대통령 중 최초의 발언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워싱턴 선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 비판
 - “우리는 핵전쟁억제력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 발언(20230428)
 - ※ ‘억제력의 제2의 임무’는 핵무력의 두 번째 사명, 즉 ‘작전적 사명’을 뜻하고 이는 선제타격까지를 포함한 실전 사용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됨(통일뉴스 20230430)
 -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 당일, 워싱턴DC 현지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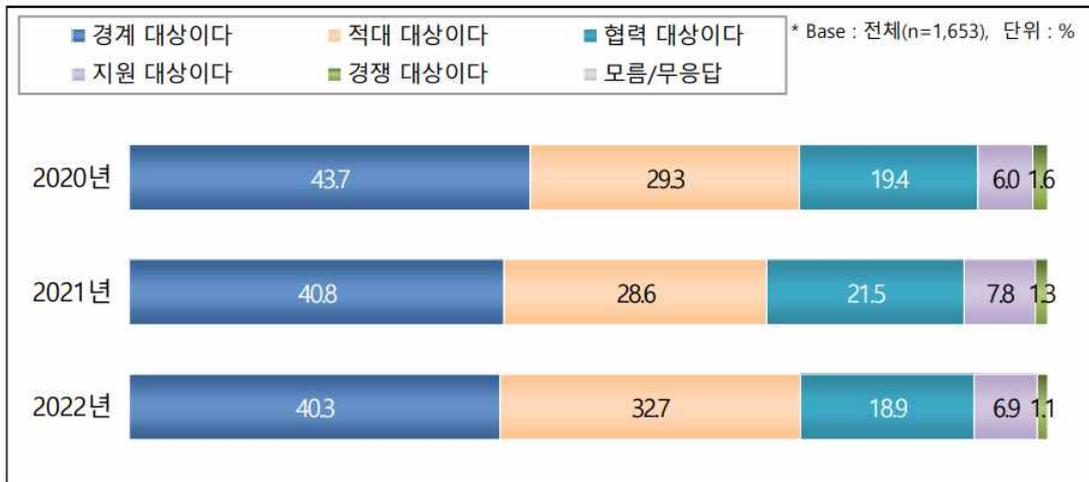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 설명
 -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반박

 - ※ 미국에서 말하는 핵 공유는 ‘핵무기 통제권(control of nuclear weapons)’을 의미, 미국 대통령과 극소수 최고위급 권력층만이 행사하는 독점적, 배타적 통제권을 뜻한다고 함
 - [조선일보] 사설(20230427)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 - 워싱턴 선언을 보면 미국은 북한 핵 무력화보다는 한국 핵 개발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이는 앞으로도 바뀔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지키는 쪽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 [평화재단] <현안진단>(20230430) :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와 한·미 원자력협정의 준수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자체 핵무장론, 핵추진 잠수함 확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우리가 북핵 위협 상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카드를 모두 ‘셀프 봉쇄’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 1년, 우리의 평화는 위태로워졌고, 적(적국)/적대감은 늘어났고, 안보 불안감 역시 증가했다. 인간안보가 축소되었고, 외교/안보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축소되었다.

- 우리의 안전이 너무 불안해졌다. 군사화된 삶의 일상화,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안보인가, 질문이 별로 없다.
 - 너무 많은 군사훈련, 너무 많은 군비지출, 무기수입, 핵무기, 핵 억지력, 확장 억제 등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군사주의 담론이 너무 강화되었다.
 - 시민들의 평화감수성은 여전히 낮고, 군사주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은 둔화되었다.
 - 시민들은 군사화된 삶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가, 에 대한 비판적 질문은 별로 없다.
- 북한에 대한 적대감, 적국 인식이 강화되었다. 대신 우호적 인식은 줄어들고 관심 자체가 없는 편. (KBS [2022 통일의식 조사] 참조)



-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 핵무기 개발 찬성이 늘어났다. 핵의 파괴력, 폭력성, 반평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 2023년 1월 최종현학술원,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에 대한 한국인 1천명 대상 여론조사(갤럽조사)
 - “응답자의 76.6%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을 지지한다”
 - “응답자의 77.6%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로 답변(조선일보 20230130)
- 외교.안보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 전략, 정치가 되는 ‘기이한’ 외교와 안보 -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이유
 -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외교와 안보 정책 이행 현실,
 - 대통령의 발언은 파장을 낳고, 대통령실은 파문을 가라 앉히느라 바쁘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와 조율되는 과정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 대북 정책은 '담대한 구상'으로 명명,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면, 커다란 경제적 협력이라는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4월 25일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하였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과 대통령의 발언이 따로 노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그 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보도가 흘러나오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외교, 안보 정책을 구현하는가?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하고, 기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훼손하는 정책 집행에는 분명 일관성이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세계관, 이른바 '자유'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집착, 흔히 말하는 가치 외교,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훼손하는 과거사, 여기서 다시 국가에 의해 상처 입고 모욕당하는 피해자와 유족, 가족들, 과도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이 있다. 이러한 혼란과 기이함 속에서 시민들은 헤메며, 왜? 그렇게까지 대통령은 말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 속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 답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소셜코리아 운영위원장)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민족을 버린 윤석열 정부와 민족 없는 국익"이란 글에서 '민족을 버린 보수에게 남은 것은 평화가 아닌 대결'이라고 하였다.

보수가 마침내 민족을 버렸다. 권위주의가 1987년 민주화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고, 더 이상 고도성장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한국 보수에 남은 것은 신자유주의와 반공주의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있는 곳이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보수가 민족을 버렸다는 것은 국익이 더 이상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족이 사라졌을 때 보수에 국익은 투자한 만큼, 능력만큼 이윤을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를 위해 일하는 이유이다. 민족은 한국의 보수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국민 모두를 위해 헌신해야 할 마지막 남은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가 민족을 버렸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화 대신 대결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 아닌 것이다. 북한이 힘으로 제압해야 할 적이 될 때,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요구와 행동은 모두 이적행위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이유이다.

분명 윤석열 정부는 민족을 버렸고, 북한을 적으로 삼았고, 대화(평화) 대신 대결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이익은 국익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이익이다. 그러므로 한미일 군사협력, 군사동맹을 통해 그들이 지키려는 이익, 이를 통해 최대의 수혜를 얻는 집단의 실체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 사이 민생은 외면되고, 중산층은 줄어들고, 서민들의 고통은 증가하고, 전쟁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는, 진지한 접근 또한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열망을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완전히 소멸시켰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워싱턴선언이 '핵 족쇄'라 평가하는 이유다. 그렇지만, 미국 핵전력의 전개(방문)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압도적 재래식 무기를 통해 북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사전연습을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일 군사협력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여,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이른바 신냉전의 한 복판이 될 것이다. 하여,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동안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와 불안이 지속되고, 군사비는 증가할 것이며, 핵 억지, 핵 무력, 확장 억지 등등 핵무력에 의한 공포의 균형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 우연적으로 혹은 우연을 가장한 고의적 도발로 국지전이 발발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민주주의와 삶의 기반, 그리고 문명은 회복할 수 없이 소멸될 것이다.

No Women, No Peace!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

보수언론의 대표주자 조선일보는 한미정상이 4월 26일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이 한국인들이 원하는 핵 개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4월 27일 사설에서 “워싱턴 선언을 보면 미국은 북한 핵 무력화보다는 한국 핵 개발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이는 앞으로도 바뀔 수 없다. 다만 우리를 지키는 쪽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미국이 보수적 차원의 안전보장 역시 가능하게 해 줄 수 없다는, 미국 중심주의, 핵 독점주의라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각성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평화, 여성들,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온전성이 보전되고, 북한과 공존하는 평화, 성평등한 한반도,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성이 회복된 역사적 정의를 이루는 것은, 결국 그것을 원하는 우리들이라는 점,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성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No Women, No Peace.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이를 위해 군사주의 폭력, 압도적 힘의 평화에 대한 비판 인식, 그리고 각성된 평화의식과 평화역량을 키울 때다. 분단과 정전 상황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해 말하고, 접경지역 여성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 귀 기울일 때다. 기지촌 여성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배상과 보상을 가능하게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탈북자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군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손으로! 정전과 분단 체제의 폭력성에 대해 여성의 관점,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페미니즘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평화연구-여성평화교육-여성평화운동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여성들과 함께, 또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는 길, 그 외 평화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 관점의 평화, 적극적 평화, 인간안보 확대,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정책적 과제

- 1) 비핵평화주의 담론에 대한 인식을 다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안보 불안, 안보 딜레마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 혹은 미국의 전술핵 무기 도입 찬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무기 의존은 핵무기 경쟁, 공포의 균형 속의 불안한 삶, 그리고 군사주의의 총아인 핵에 대한 맹신, 즉 핵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념을 확장시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핵평화주의에 대한 여성평화운동의 관점, 대안 담론을 발굴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 핵무기의 폭력성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투하의 참혹한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핵 물질, 방사능의 치명적 위험성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 해양투기와도 연결된다. 국가가 방기하는문제에 대한 관심, 이것은 안전한 먹거리와 생태계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2) 핵 시대 평화는 적과 함께 하는 평화, 공동안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요구한다.
 - 핵 전쟁 시대는 적과 아군의 구분이 별 의미없다. 모두가 공멸할 뿐이다. 미국과 구 소련이 핵무기감축협정(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1991.7.31.)에 서명한 근본적 이유는 공멸의 위기에 대한 공감에서 이뤄진 것이다.
 - 핵과 무기, 군사주의,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항하는 공동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실천하고, 정치와 외교에서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 3) 평화 지향적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급하다.
 - 병역제도는 여성의 시민권을 제한해왔다. 또 정치권은 남성 징병제를 젠더 갈라치기에 이용하고 있다. 병역제도의 개선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젠더 문제,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의제와 결부되어 연구되고 또 공론장의 논의를 통해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운동의 주요 의제의 하나

로 채택하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4) 평화과정의 여성참여, 여성의 인간안보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1325 국가행동계획, WPS 의제의 지역화(localizing)에 대한 여성운동계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경기도 여성들의 이니셔티브, 활동의 성과 공유 등)

5)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자.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여성연합, 교회여성연합회, 민화협 여성위원회가 2007~2012년 진행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동북아여성들의 관심을 모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되고,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대만해협에서 한미일-북중러의 대결, 무력 갈등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여성들의 평화연대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연대와 협력을 위한 자원을 집중하여 여성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모으고,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 2024년_22대 총선 : 여성·평화·통일 분야 정책 제안

6-4. 성평등한 평화체제 구축

1.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에 발행된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대화와 협력을 약속한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정상간 공동선언 포함)를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구축했다.
- 2022년 한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256일 진행되었고, 한미일 연합군사훈련(대잠수함훈련 등)도 동해 공해와 제주도 이남 해상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 한국군의 군사력은 세계6위(핵무기 제외), 군사비 지출은 세계 9위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핵전쟁 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24년부터는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정례화·다양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2018년 8월 18일 진행된 한중일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의 위기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
- 정부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담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의 주요목차에서 윤석열 정부는 목차 제목에 ‘평화’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통일교육의 기조가 ‘평화통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¹⁾ 한반도 종전과 평화 실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비폭력적 의사소통을 통한 갈등 해결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이것은 통일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정책과제

- 대북 접촉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서술한 부분 폐기
- 역대 남북정상선언²⁾과 공동선언 및 합의서³⁾ 이행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 추진
- 한미일 협력의 수준이 군사동맹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균형적 국방·외교 정책 실시
- 공교육으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평화 지향적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

1) “윤 정부, 통일교육 방향 틀었다...‘평화’빼고 ‘자유민주주의’강조”.경향신문.2023.03.14.

2)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3)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18년 9.19. 군사분야합의서 등

2. 유엔안보리 1325 결의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기반 ‘여성·평화·안보’ 정책 수립

1) 현안 및 문제점

- 2000년대 6.15 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진행된 남북여성교류 현장에서 남북여성들은 화해와 협력의 주체로 나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 전쟁 방지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당시 잠깐의 교류 이후 현재 남북교류는 중단되었으나, 남북여성들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통일 구축, 남북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의 과제를 안고 있다.
- ‘유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2021-2023)’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성인지적 의제 개입을 통하여 남북여성의 실질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한반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에 ‘132524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1325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관한 국회보고가 의무화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 배정이 ‘의무’가 아닌 ‘노력’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이행 모니터링·평가 체계 및 정부-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제 갖추어지지 않아 민간자문단 참여 부처별 이행점검과 전체 민간자문단 회의가 각 연 1회에 머무르고 있다.
- ‘여성·평화·안보’ 의제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내 명시되어 있으나 ‘한반도 평화 과정에의 여성참여 기반 확대, 남북여성 역량강화와 협력 지원, 국제사회 분쟁 하 여성인권 옹호 활동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한반도 평화 구축 정책의 여성 참여 제도화 및 성주류화
 -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지자체 교류협력기금에 남북여성 경제협력 기금 신설
 - ‘1325 제4기 국가행동계획’의 ‘구호와 회복(Relief&Recovery)’ 영역에 북한 여성 개발협력, 혹은 남북 여성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포함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정책 수립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 : 효과적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 및 국회보고 의무화
 - ‘1325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거버넌스 제도화 : 시민사회 이행 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여성·평화·안보법’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방향 수립
 - 대통령 비서실 내 ‘여성·평화·안보 비서관’ 설치를 통한 관련 정책 조정

【 부록 】 2024년 성명서/기자회견문/의견서 목록

날 짜	제 목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선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자"
2월 21일	[공동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2월 23일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기자회견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3월 7일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 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3월 7일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3월 7일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피해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긴급 시국선언'
3월 22일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3월 24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총회 선언문]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의 입장'
3월 31일	[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4월 21일	[공동성명]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4월 24일	[기자회견문]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5월 4일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5월 8일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던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둘러리에, 한일안보협력을 빙자한 일본 재무장만 키웠다

날 짜	제 목
5월 9일	집권 1년,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5월 10일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5월 16일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5월 19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6월 1일	[기자회견문] 대일역사정의 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7월 22일	[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7월 2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7월 27일	[727 여성평화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7월 27일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8월 9일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6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9월 3일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터 서울시 기습철거에 대한 성명서]-성추행 가해자 임옥상을 핑계 삼아 여성폭력을 한일관계에 이용하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까지 통째로 지우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 철거를 당장 중단하라!
9월 5일	[성명서]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철거 강행 규탄 성명서-기어이 기억의 터를 철거해 일본군'위안부', 반성폭력 운동 역사 통째로 지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10월 22일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11월 4일	[성명]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11월 21일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11월 22일	박민 KBS 사장 규탄.방송법 공포 촉구 공동성명
12월 1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선언문]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12월 1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기자회견

2023년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출범선언문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지금 행동에 나서자

한반도에서 3년간 이어진 참혹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올해로 70년을 맞는다. 지난 70년은 잠정적인 휴전 상태였을 뿐 결코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는 적대와 군사적 긴장, 그리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이용하고 부추기는 내외의 도전들로 인해 한반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은 크나큰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 합의했을 때, 한반도의 주민들은 우리를 짓눌러온 긴장과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가 열릴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 강렬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남북·북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대화는 중단되었고,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며 지금 한반도는 더 큰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지 불확실하다. 우발적인 충돌이 핵 전쟁의 참화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존재들을 옥죄고 있다.

남북·북미 사이의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다. 국제 환경도 우리를 제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가 국제적 수준의 군사적 긴장과 신냉전 대결의 대리전장으로 이용되고 휘둘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하며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고 군사훈련 규모를 대거 확장하여 마치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해왔다.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만 키워왔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미국 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고 한국을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에 종속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왔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핵 군비 경쟁과 핵 전쟁 위험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힘을 통한 압박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 뿐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게 입증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가져올 아무런 현실적인 수단도, 역량도 없다는 것이다.

아직 충돌과 파국을 막을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대화와 협상의 기회도 여전히 남아 있다.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하는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기를 망설였기 때문이지, 무력시위를 덜 한 탓이 결코 아니다. 무력 충돌로 치닫는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보다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향한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으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오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며 우리는 요구한다.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가 합의한대로 관계 개선에 즉각, 신실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평화로 가는 대화의 길을 열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냉전적 대결을 가져올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추고 대신 한반도와 아시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협력의 질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제발, 파괴적인 군비 경쟁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다. 국내 시군구 200곳과 해외 100곳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각계각층 시민들의 평화선언과 연대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추기 위한 행동에 힘쓸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는 올해 7월,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온 겨레, 전 세계 평화 세력들의 목소리가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일제히 울려 퍼지도록 우리의 행동을 집중할 것이다.

-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외치면 평화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
-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함께 나서자.

2023년 2월 14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일동

2023년 2월 21일

**[공동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 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를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무엇인가. 1)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2) 형법 제32장 제 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3)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4)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5)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두 번째 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은 한동훈 장관도 지난 2월 8일 제403 국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라는 것을 인정했다. 세 번째 과제는 19세미만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대한 법률개정에서도 다루지고 있는 필요성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정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앞선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는 강간죄 개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본분으로 둔 이상, 당연히 견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미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던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모두 무시하고, 배척하고,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는 검토하면서, 오랜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검토조차 두려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법무부의 '검토 조차 반대'라는 입장으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에 기반한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법무부의 비논리적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 '모두 반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 과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과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문제적인 입장을 지적한 국회의원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히고 갈라치기와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유죄율 90%는 낙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소한 피해자들에 국한된 것', '비동의 강간죄 개정 논의는 20년 동안 멈춰있었던 논의', '성폭력 판례들이 동의여부를 묻는 것

으로 바뀌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등 성폭력 현실을 적확하게 짚으며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친하냐”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공격을 받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했음에도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현실을 짚으며,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으로 규정지은 한동훈 장관 발언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 전문가한테 예의없다”는 공격을 받는다. 법무부가 쏘아올린 ‘검토 조차 반대’ 라는 입장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기반하고 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갈등에 의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통계 25,13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는 타인 59.1%, 고용관계 1.8%, 친구 등 9.0%, 애인 5.4%, 친족 3.0%, 이웃지인 14.9%으로 분류됐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현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84.2%로 대다수이며(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 시작에 불과한 변화의 요구, 이미 시작된 변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 다시 한번 요구한다.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라
-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라
- ‘성적 수치심’ 용어를 폐기하라
-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

2023년 2월 2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새움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

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덴나무상담지원센터, 로덴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벤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흥성통합상담지원센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

2023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난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사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2023년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여성가족부 폐지안(이하 ‘여가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내외의 개인들과 시민사회는 혐오 편승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힘으로 여가부 폐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철학도 없이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선거용 구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망쳤는지 똑똑히 보았다. 존폐 위기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고, 눈치보기에 급급해 오히려 성평등 정책 실현이라는 존재 이유에 반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따라 지방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또한 그 방향성과 용어에서 ‘여성’, ‘성평등’이 삭제되는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여성과 소수자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과 직결된다.

여가부 폐지안은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기에 아직 우리의 싸움은 남아있다. ‘3+3 정책 협의체’는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안도하지 않고 여가부 폐지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주시하며 싸울 것이다.

정치권의 책무도 더욱 중요해졌다. 야당, 특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안은 폐기된 것임을 천명하고, 조직 구조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여가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 국가의 정부와 여당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채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을 부정하고, 현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시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이제라도 그만둬라.

더 이상의 퇴행은 안 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고 정부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더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2023년 3월 7일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1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은 지난 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4년간의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고,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무인기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대규모 한미 병력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입니다. 술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

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745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남북물류포럼,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사)평화의길, (사)평화통일연대,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전시기획 서울팀, 1004통일포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띠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5.18민족통일학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중부분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체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시민합창단,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례의길 민족광장, 겨례하나, 경계를넘어,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성대민주동맹, 경성대학교 민주동맹회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맹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맹회, 계명대학교민주동맹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맹회, 광복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맹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회와사회연구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 터폐지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회 평화외교포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차길열작은학교,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해진보연합, 곤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사문화교류위원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문제창작단 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여성농민회, 다산인권센터, 다음교회, 다인투플러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기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

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더피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디자인 밝은세상,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지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목포산돌교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문화연대,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미래당, 민들레,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앙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동문회 86동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백두산문인협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별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보험이용자협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꽃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진보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남여성회, 성미산학교, 성주군여성농민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소성리사드철폐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안성여성회,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인권 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열린군대를위함시민연대,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노인복지관, 예벳교회,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여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터와 삶의 예술공동체 마루,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충남연합(준),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

합,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남북한살인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람, 통일바루,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열차 서포터즈,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팩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여성회,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피비두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동일여는사람들,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석단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피스모모, 하남여성회,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근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경기지부, 한국시민연대, 한국아나뎀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거창YMCA, 경주YMCA, 광명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흥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배평화재단, 함께 걷는 길벗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함천군여성농민회, 함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해아라경기지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법문제연구소, 형명재단, 흥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황성군여성농민회,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 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AOK한국, DMZ 평화 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미국 시민사회단체 (48개)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애들란타 행동),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조지아 평화포럼),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뚝돌),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늘푸른연대),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작은자공동체교회 맨하탄),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워싱턴희망나비),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국제 시민사회단체 (총 51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류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1923 한일재일 시민연대),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자유를 위한 여성의 단결),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자유평화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World Beyond War, 福岡県日朝協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千葉県民会議, 日朝友好神奈川県民会議,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する京都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長野県民会議,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北・板橋・豊島の女たちの会,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자료출처-참여연대) 출처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2023년 3월 7일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 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당 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어 노동자를 회사에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3시간이 된다. 24시간 중 나머지 11시간은 연속휴식이라 하지만 식사와 수면, 출퇴근도 모자란 시간이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면 주당 69시간 노동이 완성된다. 더군다나 휴일근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7일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80.5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이다. 과로사에 최적화된 노동시간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정식 장관은 본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심각한 건강에 대한 위협’이며 ‘휴식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악마의 계약이다.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있지만 이 지독한 장시간 노동이 여성들을 얼마나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다. 장시간 노동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전제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봄노동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아래서 장시간 노동 강화는 결국 여성의 돌봄노동을 함께 강화한다. 사회는 여성을 늘 돌봄전담자로 배치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을 가장으로 호명하고 떠받들도록 요구해 왔다. 그래야만 가정 내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자본의 착취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위계는 공고해진다. 남성들은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의 책임이 면제되고 권리가 박탈된다. 모든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 된다. 성별화된 이중구조인 노동시장 내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된다.

이 제도 아래서 여성 역시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늘어난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과 직장의 포기를 합리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결국 여성노동자들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의 더 취약한 일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여성의 독박 돌봄노동은 더욱 강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까지 견뎌야 한다.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회사는 모든 여성이 미래의 돌봄전담자가 될 것을 가정한다. 장시간 노동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여성은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차단당한다. 이렇듯 남성중심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여성의 삶의 주권을 박탈한다.

유연해진 노동시간 정책이 사용자의 뜻에 따라 특정 주, 특정 일에 쏠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할 뜻을 밝히며 “근로자 대표의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조차 없는 미조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철저히 ‘종속관계’인 일터에서,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한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말은 허울뿐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대로 장시간노동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노동자는 인간이다. 인간의 삶은 임금노동과 잠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노동자이자 돌봄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정부는 적정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꾸리고, 서로를 돌보고 돌봄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고민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탠다는 말인가.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자평했다.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인가. 수치를 모르는 자평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과로사와 가부장제 강화를 부르는 제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에 대한 착취와 여성에 대한 수탈이 아니라 임금 하락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간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보장하라!

2023. 3. 7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2023년 3월 7일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피해자,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긴급 시국선언’**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의 기부를 모아 국내 재단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 정부 관계자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강제징용 문제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불거졌다’며 ‘죽어도 배상 못하겠다는 일본 정부와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결단’을 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맞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한다고도 밝혔다.

가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국에게 해법을 가져오라 으박지르던 일본 정부는 의기양양 오만한 태도로 사과나 배상 참여 없이 과거 정권의 담화 계승 의사만 외무상의 입을 통해 표명했다. 피고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도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며 추후에도 나설 뜻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실로 참담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가 있었던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소송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양금덕 할머니는 ‘끓어 죽어도 이런 식으로 안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리셨다.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해 쟁취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고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한 굴욕적 해법이 검찰출신 대통령과 검찰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외치고 자의적 법의 잣대로 무고한 시민들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해법은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는 등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퇴행이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극이다.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내미는 것도 면피용 계책에 불과하다.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조건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반성과 사죄임을 명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인정이나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죄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후 그 추상적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퇴행에 퇴행을 거듭해 왔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자기합리화와 역사지우기를 위한 영혼 없는 면피용 선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해 왔다.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외치며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자행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잊었는가.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한 반성'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러므로 초점은 5여년 간 지속된 '배상 문제 해결,'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이 아니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족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구실로 일제 피해자들을 제물삼아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머리 숙이고 들어가려 했다는 점이다.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1910년 경술국치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자화자찬하고 일왕에게 그 은공을 칭찬받으며 작위를 받던 날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역사를 망치고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 서까지 진행된 '주고받기식' 야합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다. '미래'와 '기회'라는 사탕발림으로 가린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역사를 가해국에 팔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분노를 마중물 삼아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3월 7일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2023년 3월 22일

**조정훈 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탄 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언론에 따르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오늘(22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어제(3/21)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공동발의 의원 일부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루만인 오늘 오전 철회됐다. 우리는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재발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 발의안은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절하하여 월 100만 원이면 된다는 발상에 분노한다. 여성이 무급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절하 당해 왔지만 가사노동은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노동이다. 본 발의안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존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노동은 분명한 임금노동이다. 모든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 임금이다. 이주노동자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같은 물가의 영향권 아래서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본 발의안은 그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률은 현장의 가사노동자들과 여성단체들이 지난 10여년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가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제정한 법률이다.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라는 본 법의 목적을 기억하라. 가사근로자법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수탈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또한 당초 개정안은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 부담을 줄이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다.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은 특히 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장시간 노동과 취약한 공공 돌봄 시스템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이 아닌 초과노동시간을 전제로 한 52시간마저도 부족하다며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여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 돌봄 시스템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번 개정안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국가의 공적 책무는 없고 각자 도생을 주문하며 대신 이주여성에 대한 수탈과 차별을 통해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중층적인 차별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대안은 차별적 구조를 해체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한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총체적인 시스템 작동의 결과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돌봄에 대한 저평가, 이에 따른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무가치화, 여전히 공고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등의 요인은 촘촘하게 맞물려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한다. 여성들이 가사·육아부담이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

으니 외국인 노동력을 ‘값싸게’ 들여와 해결한다는 발상은 여성의 현실을 오독한 것이자, 선주민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이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수탈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 해결하겠다는 ‘저출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경험하는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회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해결의 몫을 여성에게 떠넘길 때 쉽게 붙여지는 꼬리표다. 정치권은 여성의 목소리가 빠진 ‘저출산 문제’라는 납작한 진단에 기반해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의 사회화 요구 등 먼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차별적 구조 해소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성을 취약하고 차별받는 위치로 몰아세우는 구조가 국경의 제한 없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다. 개정안에 담긴 조치들은 남성-선주민 중심의 오만한 인식에 기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여성 가사노동자들이 경험할 권리 박탈의 문제가 선명한 차별적인 구조 아래, 선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근본적으로 해소될 리 만무하다. 본 발의안은 인종·국적 차별을 동시에 기획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정신과 이미 한국이 비준한 ILO 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도 위배된다. 차별의 문제는 또 다른 소외되고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온전히 해소될 수 없다. 진정으로 ‘시대전환’을 바란다면, 정상성 중심의 오만한 인식에 가려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2일

거창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3년 3월 24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총회 선언문]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의 입장’

2023년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전체제 70년 동안 여성들은 전쟁의 불안감, 분단과 정전체제, 그리고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폭력 속에 살아왔습니다. 분단폭력과 성폭력이라는 이중의 폭력을 극복하고, 여성들의 삶의 온전성과 안전을 회복하며,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또 남북여성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오늘 여성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여성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2023년 현재,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한반도의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다른 전쟁을 예방하는 길 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예방하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행동을 2023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체제 하에서 자행된 노동자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일본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국방력 강화를 선언하는 것은 또다시 동북아시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결단입니다.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제 식민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셋째, 여성들은 힘과 군사력에 의지하는 평화를 반대합니다. 무기 수입과 군사비 증액이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고, 경쟁과 힘의 논리를 강조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는 사회, 여성들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난무하는 폭력적 사회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성들은 돌봄과 배려가 존중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소수자의 인권과 정의가 회복되는 평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여성들은 남북여성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만나 대화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공존과 공생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평화롭게 왕래하고 마침내 통일을 이룩할 그 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안의 무관심, 냉소주의, 적대감을 극복하고 평화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으로 채우겠습니다.

다섯째, 여성들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여성들은 전쟁과 폭력적 일상의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과 폭력을 넘어 당당하게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성들이 나서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일상의 평화와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적대적 경쟁과 폭력이 아닌 연대와 새로운 상상력을 가능성으로 또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24일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2023년 3월 31일

**[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지난 3월 28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안은 지난 2020년 발표된 5개년 계획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4차 계획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에 개입하는 해결책으로서 전향적으로 제시되었던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등 목표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라고 평가하면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는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에 국한한 구시대의 정책 관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결혼·출산·양육에 집중하는 관점은, 출산의 주체인 가임기 여성을 문제의 주요 원인이자 정책의 관리대상으로 주목한다는 점에서 해롭다.

이번 발표안의 기본 관점을 살펴보면, 현실 진단과 정책 과제 설정에서 성인지의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음이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4차 계획의 3대 목표 가운데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포함되어 있던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퇴행이다. 세부 정책 과제 전반을 살펴보아도 4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포괄적인 성·재 생산권 보장, 젠더폭력 피해 구제와 예방 등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와 추진 과제가 완전히 소거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언어에서 ‘성평등’, ‘여성’을 끊임없이 삭제하고 있는 기초와 맞물리는 것이다.

이번 발표안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적 돌봄체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고용 지위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돌봄 수요자에게 서비스 이용 수당을 더 지원하더라도, 돌봄노동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당면한 문제를 회피한 채 기술 개발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돌봄 현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 아니라 돌봄의 시장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자녀 가구 직접 지원만을 확대하는 대책은 결국 양육의 책임과 비용을 가정에 전가한다.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사회 인식과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정에 부과된 양육 책임은 여성 노동자를 일과 돌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성별 분업구조에 대한 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출산·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을 단속하고 육아기 단축 근로 및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는 양육 지원 대책은 오히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여 기업이 지금보다 더 완강하게 여성 채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주 69시간제 등 노동자에게 지금보다 더 장시간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정권 아래서 어떤 노동자가 혼자서 단축 근로나 유연 근무를 활용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저출산 대책이 노동 정책과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안은 '성차별 없는 노동권'을 위한 4차 계획의 방향을 전면 부정, 삭제했다. 저출산 대책은 성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해야만 풀어낼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과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형노동에 대한 협소한 대책 역시 문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대 핵심분야 정책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초등늘봄학교에 대한 2023년 국고지원 예산은 0원이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무려 5조 7천억 원이 삭감되었다. 추진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모순적이고 공허한 대책이다. '사각지대·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 역시 기존 4차 계획 이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오히려 기존 계획을 축소하기도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 '임신 준비 남녀'의 사전 건강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부인과 초음파, 난소 기능검사, 정액검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제시됐다. 이는 기존 4차 계획에 있던 생애 전반의 포괄적인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는 사라진 채, 임신·출산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의 신체기능만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한국 사회 노인 빈곤율이 38%가 넘는 가운데 여성 노인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2020년 고령 인구 성비 76.2) 여성 노인의 기대여명이 높다. 그러나 여성 노인의 빈곤과 건강 문제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대책도 전무하다.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지급률은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고(2019년 기준 남성 71.0, 여성 35.9%), 노동 참여율도 남성에 비해 낮으며 고용 지위도 열악하여 계속고용제도 등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 인구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사회가 살만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새로 태어나 살게 하고 싶지 않은 사회라는 절망적 인식'이다. 주 69시간의 과로에 시달리며, 불평등하게 부과된 돌봄 책임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혐오와 폭력이 만연해 아무것도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생존과 다른 모든 가치를 맞바꿀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부정의의 근간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이 있다. 인구 문제는 젠더 문제이며, 해법은 성평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퇴행적이고 모욕적인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계획을 철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을 제시하라.

2023년 3월 31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보건의료노조강동경희대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강동성심병원 지부, 보건의료노조 녹색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국립재활원지회,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서남병원지부, 부산여성회,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사람들(너머서울),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책임녀성노동자모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47개 단체)

2023년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
-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인명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다.
- 한국정부는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인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20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쟁 중인 나라 한쪽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미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추측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미국의 도청한 유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도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합 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 편을 서는 것을 넘어, 전쟁이 지속되는 데,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인명의 희생이 더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 전쟁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에 온 난민을 인정하고 돕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우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처지에 다른 나라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여 전쟁에 개입하고, 그 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또 그 선택으로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관료들은 전쟁하는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 방문 전에 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자세히 읽어보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하는 어느 쪽이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에 대한 인정 등 평화에 더 기여하기 바란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두 나라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사)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평화나비, (사)어린이어깨동무, 우리학교시민모임,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통일맞이, 시민모임 독립,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창작21작가회,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아카데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2023년 4월 21일

**[공동성명]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나토 등이 한국에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점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이 포탄을 미국, 폴란드 등을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 정부가 지원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어떤 것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4/20) 대통령실은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한다는 법률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 해당 법의 시행령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무기 지원 역시 무기의 국외 이전이기 때문에 수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허가의 핵심적 기준은 “해당 물품 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교전 중인 국가 일방에 대한 무기 지원은 해당 무기가 곧바로 살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기에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에 전혀 부합할 수 없다. 우회적 지원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내법을 무력화하는 매우 나쁜 선례만을 남길 뿐이다. 정부는 해당 무기의 ‘최종 사용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 왜 이 시점에 폴란드에 대량의 탄약을 수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우회 지원 보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무기 지원과 같은 군사적 해법으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러시아의 침공과 출구 없는 전쟁은 이미 참혹한 상황을 초래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상자, 천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 고통과 슬픔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진영 대결과 군사주의 강화, 핵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와 식량난, 집약적 군사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까지, 이 전쟁은 온 세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고 무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것은 방산업체뿐이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러시아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속하는 방법으로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인권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각국의 무기 지원 속에 전쟁이 격화된다면 그 끝은 공멸과 폐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군사적 지원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전쟁을 멈추고 끝내기 위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 중재를 위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전쟁 피해자와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무기 지원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무기 지원의 명분을 쌓기 위한 각종 언사도 중단해야 한다. 우크라

이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곳곳이 전쟁과 무력 충돌 위기로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무엇이 진짜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21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 시민모임 독립, (사)어린이어깨동무, (사)통일맞이, 열린군대를위한 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2023년 4월 24일

[기자회견문]

‘1분에 56억, 평화와 지구를 위협하는 군사비 지출 이제 그만!’

“K-방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힘에 의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믿는다.” 지난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방산업체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방산 수출로 사상 최대 금액인 17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낸 방산시장 관련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변화가 한국 같은 신흥 무기 수출국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 2만1천300여 명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 사상자도 10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발생한 난민은 거의 800만 명에 이르며 그중 90%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전쟁이 가져다준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겠다는, 오히려 ‘죽음을 파는 장사’라고 불려도 모자라지 않을 이 발언이야말로 ‘힘에 의한 세계 평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은 언제나 역제를 강조합니다. 언제나 강한 무기에는 상대의 더 강한 무기가 뒤따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북 선제공격과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외쳤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3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은 동평 시리즈 미사일을 내놓으며 미사일 시스템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힘은 강한 힘을, 강한 힘은 더 강한 힘을 부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이처럼 군비 경쟁만 부추길 뿐 결코 어느 쪽도 평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역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과 같은 공존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이상적이라거나 현실을 모른다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꺼내든 ‘주적’ 개념이 보여주는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는 언제나 적을 강조합니다. 적을 이기기 위한 강한 힘과 그 힘이 행사되었을 때 생기는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불가피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달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되자 북한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로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에 한미일은 대북 미사일 방어훈련에 돌입했고 같은 날 러시아와 중국은 대규모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이 발생한다면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그러한 지원을 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강대강의 대치는 위기를 끝없이 고조시킵니다. 언제든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 위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전 지구적 위기 역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세계군축행동의 날 국제 캠페인의 구호인 ‘전쟁의 대가는 모두의 지구(War Costs Us the Earth)’라는 말은 인간이 벌인 전쟁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군사 부문의 탄소발자국을 한 국가로 간주해 계산하면 전 세계 탄소발자국의 약 5.5%로 중국과 미국, 인도에 이은 4위를 차지합니다.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2,400억 달러(약 2,980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절감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

해 모으는 녹색기후기금의 2022년도 모금 약정 총액은 987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전쟁을 먹고 자라는 군사비 지출과 군비 경쟁은 전쟁 위기와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찾아온 물가 폭등과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나라들은 앞다투어 국방비를 큰 폭으로 증액했습니다. 한국의 2022년 군사비 지출도 세계 9위로 10년 만에 한 자릿수 순위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한국의 국방비는 전년보다 4.4% 증가한 57조 원입니다. 전 세계 무기 획득 예산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내놓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은 2023부터 2027년까지 총 331조 원을 국방예산에 투입하고 그중 107조 원을 방위력개선비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10.5%에 달합니다.

이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의 우선순위를 군사비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평화 구축에 두어야 합니다. 군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와중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군은 전국의 공공기관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공공부문 온실가스 절감 목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도 군사 부문은 배출통계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2023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최하위이며, 국내총생산(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4위입니다.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지고 생물다양성 지수도 감소했습니다.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OECD 국가 중 11위, 상대적 빈곤율은 8위이며 계속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산재 사망률도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정전협정 70년인 올해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화해협력이나 신뢰 같은 비군사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 같은 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기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 강한 안보를 핑계로 군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용인되어선 안 됩니다.

2023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요구합니다.

- 우리의 자원을 군사비가 아니라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기 대응에 사용합시다.
- 군사비의 방향을 돌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재난 예방에 사용합시다.
- 위기를 가중시키는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들시다.
- 신뢰를 파괴하는 더 많은 무기와 군사훈련이 아니라 단계적 군축과 대화 재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합시다.

2023년 4월 24일

강정평화네트워크,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청년아카데미,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녹색당, 대안문화연대, 성남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북녹색연합, 전쟁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베평화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총 35개 단체)

2023년 5월 4일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약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약이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 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2.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하라!
3.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518민족통일학교광주전남지부,(사)경기민예총,(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사)대전충남겨레하나,(사)식생활교육제주네트워크,(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성남지회,(사)통일맞이,(사)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13일의지킴이,1923한일제일시민연대,3.1정신계승 한미일전쟁동맹 해체 행진단,4.9통일평화재단,5.18민주부상자회,6.15공동선언실천구로협의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제주본부,6.15공동선언실천중남미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울산본부,6.15인천본부,6.15청학본부,6.15경남본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서울본부,6.15시민합창단,6.15용산본부,6.15충북본부,AOK(actiononekorea)한국,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겨레의길민족광장,경기광주여성회,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대동문공동체,경남민예총,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교민주동문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고령군농민회,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공교통네트워크,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교민주동문회,광주복음교회,광주시농민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추모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구례군농민회,구례군여성농민회,구로교육연대의,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국민주권연대,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군산시농민회,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금강산평화잇기,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의 평화통일위원회,기독여민회,기장생명선교연대,기장전국어교역자회,기지촌여성인권연대,김복동의희망,김제시농민회,김제시여성농민회,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김천시농민회,김포시예총,김포시농민회,김포여성 의전화,김해시농민회,김해진보연합,나라사랑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OB,나주시농민회,나주시여성농민회,나주진보연대,남 녁교회,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원시농민회,남해군농민회,남해군여 성농민회,남해민중연대,남해여성회,노동문제창작단가자,노동희망발전소,노원공동행동,노원도봉교육공동체,노원자주여성 회,논산시농민회,논산시여성농민회,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농오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시는,다음 교회,단양군농민회,담양군농민회,당진시농민회,당진시여성농민회,당진어울림여성회,대경진보연대,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 합,대구경북주권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복음교회,대전민예총,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전지역대 학생공동체'공굴림',대전참교육학부모회,대전청년회,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 합,대전통일의병,대전평화여성회,대전환경운동연합,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민족통일회,동학실천시민연대,동학실천시민행 동,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동학혁명기념관,드림교회,들꽃교회,디자인밝은세상,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모듬이들,목포산돌교회,미내뜰영농조합법인,무안군농민회,무안군여성농민회,무주군농민회,문화공동체원주 더나은,문화사랑새터,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민교협대전세종충남지회,민들레,민문연고 파지부,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고영파주지부,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 회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 전국회의,민주노련 경산지역,민주노련 광성지역,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 지부,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민주노련 김포지역,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민주노련 남 동 이수 지부,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민주노련 남동지역,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민주노련 노량진지역,민주 노련 대구목련지역,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민주노련 동대문중앙 결혼2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농협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1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2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동서3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불로 장생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성바오로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용두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제기2 지부,민주노 련 동대문중앙 제기극장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청량리 지부,민주노련 동대문중앙 청량리역전 지부,민주노련 동대 문중앙노점상연합,민주노련 동대문중앙지역,민주노련 동울산지역,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민주노련 동작지역,민주노련 말바우지역,민주노련 무안지역,민주노련 밀양지역,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민 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 부,민주노련 북동부지역,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민주노련 북부 쌍문 지부,민주노련 북부지역,민주노련 서강지역,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 세로 지부,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 부,민주노련 서부 흥대 지부,민주노련 서부지역,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민주노련 송파 대야 지부,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민주노련 송 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 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 부,민주노련 안산 분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 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 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 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 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 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역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 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역거리 지 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 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 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 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양성5일장 지부,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민주노련 충청 향남 지부,민주노련 충청지역,민주노련 태평백화점 주변(동작 지역),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민주노련 푸른길지역,민주노련 함안지역,민주노련 해남지역,민주노련 화성오산 평택지부,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민주노련점상연합 충청지역연합회,민주노련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점상전국연합 노량진 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민주노련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민주노련점상전국연합동대문중앙지역,민주노련점상전국연

합중부지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동문화 86동기회, 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밀양시농민회, 발
 같이운동본부, 법과인권연구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벽을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 보건의료노조여의도성모병원
 지부,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보훈이용자협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
 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안금암교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청년
 회, 분당여성회,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비폭력평화물결, 사)노동실업광주센터,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사)진주참여연대, 사)청주여성의전화,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사단법인겨레하나,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두꺼비친구들, 사단법인평화철도,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월혁명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천
 시농민회, 사천시민행동,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천택시,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당지역위원회(준), 산청진보연합, 상주시
 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날을향한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 새로하나, 새올교회,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평화교회, 생명
 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서비스연맹 마트노조인부천본부, 서울겨레하나, 서울교육노
 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노동광장, 서울녹색당, 서울대민주동문화, 서울대학생진보연
 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
 동문화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서울환경연합, 서천군농민회, 성남여성회,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
 성농민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송파연대회의,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
 원평화나비,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모임독립, 시민모임즐거움교육상상, 시민
 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나키스트의열단, 아산시농민회, 아스트노동조합, 아시아평화
 와역사교육연대,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산민예총, 안산청년회, 안산희망교회, 안성시농민회, 안성여성
 회, 안양나눔여성회, 알뜰시아리조트노동조합,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산시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
 심과인권 나무, 양심수후원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양양교회, 여성성서연구회, 여성장애인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여주시농민회, 연세민주동문화, 연천군농민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
 대, 열린민주당서포터즈,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영등포시
 민연대피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베헌교회, 예산군농민회,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예천군
 농민회,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용산시민연대,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 노동권찾
 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학교시민모임,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민예총, 울산새생명교
 회,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평화행동, 원주시농민회,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
 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여성회,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천노사모,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새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참여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
 연대, 임실군농민회,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애인부모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장흥군농민회,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저석일보폐간운동본부, 적폐청
 산의열행동,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
 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기간
 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북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까지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발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염창지부, 전
 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우장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강서지역 화곡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구로지역, 전국노점상총연
 합 남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노량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사당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송실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부지역 신대방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남양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논산지역, 전국노점상
 총연합 담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당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대전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마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송인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일요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
 지역 제1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2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3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
 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5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제6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동묘지역 청계삼일지
 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보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부평지역, 전국
 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노원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국노점상
 총연합 북서부지역 미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삼선교지부, 전국노점
 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창동1.2.3.4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상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대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서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성남지역, 전국
 노점상총연합 소래포구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원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수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아산시, 전국노
 점상총연합 안동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양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
 연합 용인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원당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익산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가좌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계양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남동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
 지역 동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북성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인천지역 신도시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종로
 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중부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파주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평택지역, 전국노점상총연합 흥성지역, 전
 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
 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울본부, 전국어민회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 전국회의 강원지부,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의경남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 광주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대전지부, 전국회의 부산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국회의 울산지부, 전국회의 인천지부, 전국회의 전남지부, 전국회의 전북지부, 전국회의 제주지부, 전국회의 직할지부, 전국회의 충남지부, 전국회의 충북지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준), 전여농경북연합, 전주시농민회,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선군농민회,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금천구위원회, 정의당용산구위원회, 정의평화인권유익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천시농민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경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충북연합(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서울연합,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 지역순환사회전국협의회, 직진민주주의연대, 진도군농민회,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성산구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전주시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경상대지회, 진보대학생넷교대지회, 진보대학생넷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제주지부, 진안군농민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천군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진검다리교육공동체, 착한노동불이운동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나주시회, 참교육을위한전국 학부모회 고양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해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동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용인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강원지부,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남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상주지회, 참교육학부모회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의정부지회,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천도교청년회, 천안시농민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철들지않은사람들, 철원군농민회, 청년전태일,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창출, 청송군농민회, 청양군농민회,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시농민회, 청주청년회, 청춘학교,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춘천시농민회, 충남대학교민주동우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시농민회,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터사랑청년회,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토착왜구박멸시민행동,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바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 평택시농민회, 평택여성회, 평화청년네트워크 피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의길,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센터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포천시농민회, 포항시농민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하남청년회, 하남희망연대, 하동군농민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시민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남대학교 민주동우회, 한라아이쿱,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살림 생산자연협회, 한울림교회, 함께걷는길벗회,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함양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합천평화의집, 해남군농민회, 해아라경기지부,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향린교회, 헌법문제연구소, 헌법문제연구소해아라경기지부, 형명재단, 흥천군농민회, 흥천군여성농민회, 화성시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순군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민주청년회, 화순진보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횡성군여성농민회, 흥사단, 합천평화의집교육운동본부/4일추가명단>>시민평화포럼, 울산여성의전화,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문화사랑모임, 청주대학교민주동우회, 사)충북민예총,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예총보령지회풍물분과, 고양파주흥사단,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윤석열 퇴진 충남도민 시국선언 제안자 일동, (사)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

2023년 5월 8일

**[한일역사정의행동 입장문]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던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둘러리에,
한일안보협력을 빙자한 일본 재무장만 키웠다**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말만 무성한 채 기대했던 일본의 ‘화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7일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호응’은 고사하고, 한마디의 사과 표명도 없는 ‘빈 손’ 회담이었다.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하는 소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그러한 철없는 기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이번에 다시 한 번 윤 정권의 깡통외교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 회담의 관건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였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그쳤다.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 내각의 입장 중에는 “전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불법강점과 식민지배 책임,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한 2015년 ‘아베 담화’와 강제동원을 부정한 2021년 스가 정부의 각의결정도 포함돼 있는 점을 볼 때,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계승하겠다는 것인지조차 사실 종잡기 어렵다.

일본이 진정으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가 있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대로 피고 일본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면 될 일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수없이 권고해 온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으로 배상을 실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일본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기존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것의 실체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서울에서 천명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날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교활한 물 타기 발언이다. 기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 자격이 아니라 ‘사견(私見)’이라며 선을 명확히 그었다. 한일 두 정상이 갖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이 총리 자격이 아니라 사견이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웅색한 일이지만, 이런 진정성 없는 태도에서 어떤 사죄와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인가?

또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당시 전쟁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본인들도 많은 고생을 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일삼아왔는데,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것은 당시 일본인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도대체 주어가 누구인지, 누구를 상대로 언급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같은 유감 표명을 과연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일하게 된’ 사람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인지, 단순한 ‘생계형’ 노동자인지, 강제동원의 ‘주체’가 일본정부인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모호한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엄밀히 말해 기시다 총리는 서울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전에 두고 다시 한 번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점을 훈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사태의 원인과 가해의 주체를 가린 채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분들을 향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며, 남의 일처럼 영혼 없는 동정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

기시다 총리 눈에 사지에 내 물려 배고픔과 고통 속에 혹독한 인권 유린을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나 말처럼 취급받다 끝내 불구가 되거나 고향 땅조차 밟지 못한 피해자들의 쓰라린 고통이 한낱 ‘경험’처럼 보이는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에도 멍하니 듣고만 있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더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천박한 역사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 짝도 발걸음을 내디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사죄는 커녕 반성조차 없는데,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도 따질 생각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달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더니, 도대체 어디까지 막갈 셈인가?

피해국이 가해국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반대로 전범국 일본이 한국에 회초리를 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물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당신이 수호해야 할 주권은 어느 나라 주권이며, 당신이 지켜야 할 국익은 어느 나라 국익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지우면 그 끝은 일본의 재무장화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일 정상회담 뒤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전략적 초점을 맞춘 미국이 바라는 목표다. 미 중 대결의 신냉전 시기에 어느 한편에 몰입하다가 결국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를 핑계로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하여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핵심 이유는 일본의 자국의 핵 오염수 기본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조사도 아닌 시찰에만 그친다. 이는 결국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처리에 대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다. 시찰단이 아닌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일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한일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3년 5월 8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023년 5월 9일

집권 1년,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 1년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은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렸으며,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은 쓰러져 갔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그 곳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한 결과 한 노동자를 분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가 과연 이런 것이었습니까.

코로나19 피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경제위기에 전세계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어부친 재벌부자 감세로 축소되는 세수가 5년간 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 형벌'은 108개나 풀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없는 감세는 결국 '서민 쥐어짜기'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102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시름에 겨워하는데도 대책이 없고, 노조법 2, 3조 개정, 노점상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이땅의 농민들과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절박한 외침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 인상률로 지난 4월 기준 물가상승률 5.1%에 비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입니다. 물가상승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물가안정에 뚜렷한 방안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절망스러운데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라며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상한을 두겠다고 뒤늦게 수습하려 나섰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이전과 다름없이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과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의식을 정부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집중 배치해 검사 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높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훼손, 헌법파괴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집단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집중시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휘둘러 현재 투옥 중인 활동가가 현재 40명에 다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는 남북간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압도적 전쟁준비’, ‘확전불사’를 외치며 한미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충돌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전략에 편승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단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지난 1년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적대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항의 한 번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한미동맹 강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미국 정부와 호혜적인 외교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로 한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니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물가폭등으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굴욕적인 졸속해법을 제시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의 책임을 면책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틀간의 시찰단 파견 합의로 국민의 불안을 봉합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면제까지 일본 정부의 뜻대로 이행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반평화, 굴욕적 독주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식량안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보호 국제규범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은 시민과 농민, 노동자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 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명제와 함께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고금의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3. 5. 9.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사)노동희망발전소,(사)겨레하나,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중랑문화연구소, 4.16연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동당, 녹색당, 농민의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발걸이운동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날을향한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울산진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촛불전진, 촛불혁명, 촛불혁명완성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 인권의 후퇴 그 자체였다. 우리는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기에 후퇴된 성평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선언한다.

1.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 장관부터 교체하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라!

성별 갈등 조장과 정쟁의 수단화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며 끊임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여성정책의 퇴행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현존하는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소임’이라는 장관을 임명하여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소수자 혐오가 권력자에 의해 양산되고 확산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을 체감해야 했다. 이제 누구도 ‘여가부 폐지’ 선동에 동요하지 않는다.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라!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하라!

2.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부터 하라!

윤석열 정부는 성범죄는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현 정부가 종합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38.6%)가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여가부) 여성계 등 시민사회가 수년째 요구해 온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 개정도 하지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판례는 여전히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르러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저히 곤란하다는 표현 자체가 자의적일 뿐 아니라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위계 폭력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강간을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의 없는 강간죄는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297조의 2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을 다룬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32장은 성폭력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장의 명칭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이력을 법적 증거로 채택해 재판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성적 이력 조회와 증거채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성폭력처벌법에 추가해야 한다.

3. 젠더폭력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지체 없이 피해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같이 입사한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협박과 스토킹 범죄로 시달리고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 조치만을 취하고 가해자가 기관 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살해하는 것을 방치했다. 피해자가 살해된 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성 당직자를 줄이겠다는 펜스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근로자 안전보호 의무를 여성노동자의 탓으로 돌렸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조사결과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가해자 전주환은 최고 형량인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직장에서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 내 젠더폭력은 직급의 권력을 이용하여 스토킹(21.6%), 강압적 구애, 불법촬영, 고백 거절 보복 등 복합적인 유형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 2022년 9월 '직장 상사 스토킹 제보 및 젠더폭력 신고센터') 그러나 직장 내 젠더폭력의 신고, 보호 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를 보복성 괴롭힘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후 방안을 보고하라, 국가는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4.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윤석열 정부는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결혼·출산·양육에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세웠다. 즉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본 채,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재생산권 보장 등 4차 계획에 담겨 있던 성평등 내용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 공공성 강화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생 정책이라며 이주여성을 월 100만 원에 가사근로자로 사용하자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이주여성과 정주여성을 가를 뿐 아니라 돌봄가사노동의 저평가를 부추길 뿐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쓰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이 휴가 장려 뿐인 정부 대책은 여성 채용을 기피로 이어지게 만든다.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채용, 승진, 임금 그리고 고용단절 등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육아휴직 장려는 성별분업 구조를 강화할 뿐이다. 성평등 없는 고령화 대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취급할 뿐이다. 구조적 성차별 시정, 일터에서의 여성노동권 보장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모욕적인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생 고령사회 정책 계획을 철회하라!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가사근로자 개악 중단하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5. 낙태죄 폐지 판결 4년,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낙태죄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생률 저하를 여권 신장 및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민 의식 변화 탓으로 돌리듯, '가임기 여성의 이성애적 결합 가족 계획 수립'에만 몰두했다. 여성을 국가를 위한 노동 인력 생산 수단으로 여기는 행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은 여전히 '순결'하지 못한 개인의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윤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공백에 가두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유산 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은 여전히 유예되는 반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생학적 접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장애여성도 임신과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이 포함된 성재생산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성재생산권 보장하라!

6.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최저임금 인상하고 산재에 젠더 기준을!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며, 성별 임금격차는 31.1%로 27년째 (OECD)1위다. 여성들은 채용부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종에 관계없이 승

진,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약 36%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으며, 최저임금 미만 여성노동자 비율은 21.1%나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겪는 노동재해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폐암 발발율이 36%나 높은 급식실 노동환경에서 보이듯, 여성이 일하는 직종을 고려한 산재기준과 노동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과 교차적 차별에 대한 접근을 고려한 내용으로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안법 5조 사업주 등의 의무와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예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빨리 의결시켜야 한다.

7.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하고 포괄적인 성교육 없이 개인의 성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성평등교육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은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됐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없이 구조적 성차별과 성평등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교육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윤 정부는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포괄적인 성교육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2007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인권의 확장과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바라는 다수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언제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지만 거대양당은 15년 동안 제정을 방기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차별 해소와는 정반대의 국정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을 '불법'이라며 탄압하고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성소수자 혐오 세력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여성혐오와 장애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최근에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만연한 혐오와 차별은 소수자들에게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마저 빼앗는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8. 대일 역사문제에 대해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 접근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처참한 역사관과 공허한 '미래관', 비굴한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던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지난 3월 6일,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이 빠진 채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안을 강제동원 해법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피땀 흘려 쟁취한 권리를 짓밟으며, 인정도 사죄도 없는 일본 총리 앞에서 구상권마저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피해자 중심원칙에 위배되기에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유발'의 책임을 돌리며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리인이라 자가 가해자의 편을 들어 죄를 면책해 주면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 불법 강점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편을 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들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의 수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

9.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조법은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빼앗는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며 외면하고, 오히려 주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과로사 판정 기준은 주 55시간이다. 한국은 과로사와 산재 사망이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 4일 32시간을 근무하는 선진사례를 뒤로 한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남성 중심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의 강화는 여성의 무급돌봄노동을 강화할 것이며, 유급 여성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10. 재난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세월호참사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까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알지 못하며, 단 한 명의 해경지휘부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언론외압/수사외압/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반인권적 기조에 따른 청와대/정부 차원의 공작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의 부재 상황으로 인해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했고, 반인권적인 2차 가해는 피해자를 향해 가혹하게 쏟아졌다. 이태원 참사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과 지자체 재난대응 관리체계 인수과정에서의 부실, 안전보다 이익을 보다 추구하는 생명경시 기조가 있었다.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아직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맡기고 있다. 왜 매년 있었던 다중인파 밀집 대비가 왜 2022년에만 없었는지, 왜 당일 경찰 인력배치가 실질적으로 없었는지, 왜 당일 희생자를 대상으로 마약수사/검시를 했는지. 희생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응급조치를 받다가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한다.

대형 재난참사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행정부처에 대책을 권고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여당의원 중 단 한명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폭력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라! 근본적인 재난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공무원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하라!

11.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하라!

올해만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에서만 피해가구가 3000곳이 넘는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매입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구제하는 것에는 국가 세금을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반대한다. 건설사 퍼주기 특혜에는 앞장 서면서, 매일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방만으로 야기되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주택정

책의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하라!

12.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연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혈맹'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서슴없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주권이 침해당했음에도 '악의가 없었다'며 미국을 옹호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미국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굴종적인 외교 태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최근 대통령 발언을 통해 심각한 전쟁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평화'를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몰아넣고, 대외수출환경 또한 악화시켜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13.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정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 시민단체 등 한국의 진보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거세어지고 있다. 노조 탄압은 매우 심각하다. 건설산업의 비리에는 손 놓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을 마치 비리인 양 노조 혐오를 왜곡 선동하고 있다. 건설노조 등 노조 탄압을 하며 무리한 수사과 기소가 남용되는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간첩들이 활개 치고 있다'며 선정적인 문구를 언론에 흘리며 다시 권력장악에 나섰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을 지경인 것처럼 여론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차별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포, 강제수사 등 인권유린 또한 난무하고 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이다. 물가 폭등과 민생파탄, 반인권외교에 대한 정권 책임론이 비등하자,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인권기구가 수없이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와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위기 탈출용 간첩몰이 공안탄압,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4. 국제기준에 맞게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정책을 재수립하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3월 발표한 6차 보고서에는, 지구 온도가 이전의 예측보다 더 빨리 1.5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담겼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제1차 계획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향후 5년간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얼마나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탄소배출은 다음 정부가 많이 줄여라"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이전 정부보다 대폭 하향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큰 폭으로 낮췄다. 이미 부울경 지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이지만 핵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리고 탄소감축의 부담은 다음 정부로 대부분 전가해 버렸다.

최소한의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내놓을 수 없는 국가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탄소중

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 해야 한다. 일개 정권의 무능과 몰이해로 떠안게 되기에는 그 후과가 너무나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올 기후재앙에 책임감으로 환경정책을 세워야 한다.

2023. 5. 10.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공동행동 및 시민단체 연명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경기자주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녹색당,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서울여성연대(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화성여성회, 흥성통합상담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학습지노조 대구지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택여성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공동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청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진주여성회, 진보당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이천여성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언니들의병원놀이, 안양나눔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세종여성회, 성북마더센터 맘콩, 성남여성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회), 준(서울여성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사천여성회, 사단법인 행복누리,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성남여성 의전화, 분당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두레방, 당진어울림여성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YWCA대전,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구여성노동자회, 남양주여성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광주여성회, 관악여성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기광주여성회, 창원여성회)사,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2023년 5월 16일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상생’과 ‘공정’,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무색하게 지난 1년 사이 노동, 복지, 외교,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기조가 심각하게 퇴행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축소되었고,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했다. 이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다름 없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했기에 가져온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UPR,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본심의 당시 여가부 답변)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근거나 검토도 없이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 과제를 반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이렇듯 김현숙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절망적인 퇴행 속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와 장관 주도로 여성가족부라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정부에, 국회에 전달하고 부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한 차례 일단락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2022),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2022),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OECD) 등의 국제 통계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봄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023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902개 단체)

2023년 5월 19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한일 시민사회 각계인사 공동선언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우리는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서로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해왔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한일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외교 활동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불행했던 과거를 딛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 두 나라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한일 양국 시민들이 직접 한일 관계 현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관한 제3자 변제방식의 해법에 반대한다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은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다. 이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는 일제 강점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간 이루어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방식을 제안하며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다. 생존 피해자들은 모두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며 재단에 거부 통보를 했다. 한국의 인권위원장은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는 금전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침해 인식과 사과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올해로 100년을 맞는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내각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기시다 총리와 내각 인사들의 발언은 믿을 수 없다.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한일 시민 사이의 이해도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한일 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한일 시민의 상호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한일 정부가 강행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 스스로 식민주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과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해양 투기에 관한 문제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 바다를 공유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다. 역내의 모든 당사자가 그러한 배출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 수단을 통해 확인하고 동의할 때까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다. 그러나 도쿄전력과 기시다 내각은 후쿠시마 주민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봄과 여름 사이에 투기할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 방출이므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전문가가 정보의 신뢰성

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처리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당사자로 구성된 태평양도서포럼(PIF)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도 일본 정부의 해양 오염수 투기 계획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인권과 인간 안보에 직결되는 현안에는 눈 감으면서 한미일이 추구하는 것은 ‘전쟁 연합’의 강화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공격적인 전쟁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힘을 통한 평화’,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 능력 확보’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하는 기시다 내각이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이래 차단 작전 훈련,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방어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11월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새롭게 규정한 나토(NATO) 정상회담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프놈펜 성명에서는 ‘대만해협’ 문제 등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하고 있다. 도리어 한미일의 무력 시위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현실화된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커질수록 핵전쟁의 위험은 커지고, 핵 군비경쟁은 가속화되어 간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핵전쟁 연습에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평화헌법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자

적대는 적대를 부르고, 군비확장과 전쟁 연습은 또 다른 군사 위협과 전쟁 위기를 부른다. 한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갈등 상황은 상호신뢰와 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되어 왔다. 재제와 압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관계 개선이 우선이다. 대화와 협상이 길이다.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도 중단되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산물이며, 결단코 전쟁이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깨달음의 표현이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 정신의 실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않고서 동아시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에 대해 관련국들이 상응 조치를 망설인 결과 더욱 심각한 불신과 위기가 찾아왔다. 더 늦기 전에 적대를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여 불안정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할 때다.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6자회담 합의 정신을 다시금 살려내야 한다.

일본 평화헌법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은 하나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평화협력의 축이며,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길 열쇠다.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동아시아에 전쟁 위기와 군사 대결을 심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단되어

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핵역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버리고 핵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건설적으로 협력하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2023년 5월 18일

한일 시민사회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공동연명 각계인사 및 참여자 385명 / 참여단체 284개)

小野 文班(宗教者九条の和), 高田 健(戦争させない・9条壊すな!総か・か行動), 野平 晋作(ヒ・ースホ・), 光延 一郎(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飯塚 拓也(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東アジア和解と平和委員会), 石川 勇吉(愛知宗教者平和の会), 小田川 興(在韓被爆者問題市民会議), 金性濟(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総幹事), 北村 恵子(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女性委員会), 白石 孝(日韓市民交流を進める希望連帯), 平良 愛香(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 武田 隆雄(平和をつくり出す宗教者ネット), 中井 淳(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比企 敦子(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教育部), 飛田 雄一(神戸青年学生センター), 渡辺 健樹(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 渡辺 美奈(「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金聖泰(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 くし・ゆりのこ(東アジア和解と平和ネットワーク), 佐藤 信行(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 申容燮(在日大韓基督教会在日韓国基督教会館), 潮江亜紀子(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神奈川キリスト者連絡会), 藤守 義光(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昼間 範子(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柳時京(日本聖公会大阪川口キリスト教会), 渡辺多嘉子(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 秋山成子(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事務局), 安次嶺美代子(シ・ェンタ・ーもんだ考はも会 代表), 荒井仁・かおり(日本基督教団紅葉坂教会), 飯本和美(日本基督教団銀座教会), 磯貝治良(作家), 稲正樹(憲法研究者・元国際基督教大学教授・憲法ネット 103 運営委員長・西暦使用を求める会 共同代表), 井上治(日本キリスト教団 信徒), 上野祥子(市民の風北海道), 植村隆(週刊金曜日 発行人兼社長), 植村隆(週刊金曜日 発行人兼社長), 内田雅敏(弁護士), 梅原真理子(スタッフ秘密保護法かなか・わ 江上彰(日本山妙法寺 僧侶), 江島三紀夫, 大川憲政(工学博士), 大倉一美(カトリック司祭), 大河内秀人(見樹院 住職), 岡田仁(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 総主事), 奥村悦夫(えひめ教科書裁判を支える会), 尾澤邦子(ノレの会), 小野信也(沖縄・一坪反戦地主会関東フ・ロップ) 小野政美(許すな!『日の丸・君か代』強制, 止めよう! 改憲・教育破壊 全国ネットワーク 代表世話人), 折口晴夫(現代を問う会), 小畑太作(日本基督教団 宇部緑橋教会/宇部教会), 加賀谷義治(野党共闘を求める札幌1区の会・平和をつくろう札幌南区実行委員会 事務局長), 梶野宏(反安保実行委員会), 鍛野保雄(日本とコリアを結ぶ会・下関 代表), 勝守真(秋田大学 元教員), 亀永能布子(安保法制違憲訴訟・女の会), 河内理恵(ハ・フ・テ固執ヶ丘教会 会員), 菊池進(全日本建設運輸連帯労働組合 委員長), 岸田静枝(日本聖公会東京教区清瀬聖母教会), 木下海龍(日本福音ルーテル教会 定年教師), 楠正昭, 栗原茂(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日本福音ルーテル教会 引退牧師), 鴻巣美知子(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事務局長), 小久保浩(絆準備会), 小林久公, 今野耕太(日朝協会 事務局長), 坂本照子(伊勢市), 桜井大子, 笹川俊春(NPO 法人共生フォーラムひろしま 理事), 佐藤大介(ノーニユクス・アジアフォーラム・シ・ャ事務局), 佐野通夫(東京純心大学 教授), 島京子, 清水和恵(日本基督教団新発寒教会), 鈴木和枝(カトリック三島教会), 瀬川均(海老名解放研 代表), 鈴木千津子(たんぼ・僊・共同代表), 瀬川均(海老名解放研 代表), 宋世一, 高瀬つき・(福島大学), 高塚恵里子, 高柳俊哉(市民フォーラム・よの), 田口昭典(日本ハ・フ・テ速盟福岡へ・タニ村教会 牧師), 竹腰 英樹(平和の物販担当), 竹岡健治(記憶の継承を進める神奈川の会 実行委員), 谷森櫻子(にいさ・シ・ェン等ネットワーク 代表), 田場祥子(VAWW RAC 運営委員会), 田場洋和(練馬・文化の会), 津村順一(平和といのち・イク・ナチ9条の会), 寺尾光身(名古屋工業大学 名誉教授), 土井桂子(日本基督教団西中国教区 常置委員/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ひろしまネットワーク 共同代表), 土井登美江(許すな!憲法改悪・市民連絡会), 東地裕子(カトリック静岡教会), 中西綾子(スタッフ秘密保護法かなか・わ 中野晃一(上智大学 教授), 中村明美, 中村証二(オルカ・ニス) 中村知明(郵政ユニオン), 名出真一(Act Now!! Kagawa 代表), 成澤宗男(独立言論フォーラム(ISF)副編集長), 丹羽雅代(アシ・女性資料センター, wam, 一票で変える女たちの会), 根津公子, 橋本泰幸, 畠山照子, 番場明子(ひ〜す・め〜る), 原田光雄(日本聖公会大阪教区 司祭), 菱山南帆子(許すな!憲法改悪・市民連絡会 事務局長), 飛田雄一(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理事長), 平田賢一, 淵田芳孝, 古澤秀利(日本聖公会大阪教区 司祭), 星川まり(緑の党ク・リーンス・シ・ャ運営委員), 増井潤一郎, 松浦悟郎(カトリック司教), 松元保昭(ハ・レスチ連帯・札幌), 森下一彦(日本キリスト教会大会人権委員会 委員長), 森本孝子(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共同代表), 山口菊子(元豊島区議会議員), 山田恒久, 安井正和(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事務局長), 柳田真(たんぼ・僊共同代表), 矢野秀喜(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事務局), 山田貴夫(川崎・富川(フ・チョ)市民交流会 共同代表), 山本直好(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事務局長), 山本義彦(静岡大学 名誉教授), 李勝熙, 李俊一, 李省展(惠泉女学園大学 名誉教授), 강수돌, 강종철(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주석 신부(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희동(성북나눔의집), 고나경,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태식(청년한의사회), 김경민(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철, 김광열(1923제노사이드연구소장), 김귀옥(金貴玉), 김기성, 김남훈, 김도희(이스크라21(다큐멘터리 차별)), 김명섭, 김명준(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김명철(도토리공작소협동조합), 김미선(예산흥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협력국), 김병혁(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운영위원), 김삼석(수원시민신문사 대표), 김상균(새언론포럼), 김서진(비상시국추진위원회 기획위원),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성은, 김성진, 김성현(한길성결교회 목사), 김성호, 김성훈(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김승균(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승무(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김승연, 김영균(신부), 김영모, 김영선(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영애, 김영호(동북아 평화센터 이사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용천(소외된 기억과 역사교육 모임), 김윤자(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경(신부), 김은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은혜(민청학련동지회), 김인호, 김정덕, 김정수(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김종수(1923한일제일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지민, 김지운(이스크라21(다큐멘터리 차별) 대표), 김창록(경북대학교 교수), 김창직(걷는교회), 김창현,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학준(대한성공회 성북나눔의 집), 김현철(선사교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지, 김혜란, 나인재, 나핵집(목사), 남궁수진, 류순권, 류진아, 李永松, 李元重(新島學園短期大学准教授), 맹수용, 문경환, 민만기(녹색교동운동 대표), 민병래, 박관석(목포대 명예교수), 박근영, 박나현, 박덕진(시민모임 독립 대표), 박미혜, 박상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성덕, 박성희, 박수길, 박순진, 박승규, 박승호, 박영석(여성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외순(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박용, 박재화, 박정순, 박준기, 박준성(금속노조), 박진석(목사), 박찬희(경인신학교 교수), 박창일(평화3000 공동대표), 박홍섭(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반미영, 배령, 배시온, 백무현, 백미순(참여연대 공동대표), 백희선(평화나비 전국대표), 선광전(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선광전(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성경원, 성백경, 성소은, 성진영, 손기배, 손동주, 손미희(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대표), 손병주(한터역사문화연구회 회장), 손서정, 손석영(소외된 기억과 역사교육 모임 역사교사), 손석현,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송성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재근, 송한별, 송한음, 신명자(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이사장), 신명훈, 신승민, 신태영, 심희준, 안아영, 안재영, 안준, 안중선, 安炯烈, 양선호, 양다은(한국YMCA전국연맹), 양이현영(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인이,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오영환, 오은선, 오은정, 오미경, 우복남, 우삼열(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우현선, 유영희, 유미희(대안문화연대 운영위원장), 유은옥(경기여성연대회원), 유재현 劉載鉉, 유현석(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윤경효, 윤광호, 윤도현(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윤성미, 윤성집, 윤춘철, 윤일순, 이갑준(홍사단 국장), 이경완,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동욱,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원, 이명재(덕천성결교회), 이문상(사월혁명회 이사장), 이민건, 이미경(전 국회의원), 이상현, 이성호, 이수호, 이숙,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영일(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 이용구, 이용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윤아(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이윤희, 이정만, 이정희(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정희(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주영(미국성공회 사제), 이충모, 이충재, 이태호(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한옥(행복수업), 이해정, 이홍정(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효삼, 임창욱, 임현미(여수YMCA), 장순순, 장영달(민청학련동지회), 장임원,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전기호, 전덕용(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전미경(사남하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전소현(성공회대 국제문화연구학과), 鄭 淑子(Chung, Sook Ja), 정갑숙, 정경모,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정대일(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정미영(도서출판 품), 정삼덕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영산사무소장),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인성 교무(원불교 평양교구장/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정일용(성공회수원나눔의집), 정종배, 정종훈(연세대학교 교수),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태효(성수삼일교회 목사), 정현우, 정혜열(사월혁명회 이사장), 조경희, 조문, 조미수, 조세열, 조영미(수원에너지협동조합), 조인영, 조정현, 조진경(기억의서가 대표), 지유석, 진대철(일본 기후대학 비상근 강사), 진영중(참여연대 공동대표),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최권행(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규훈, 최동순, 최상구(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 최성모,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최은기, 최은영(동화작가), 최은예,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최진숙, 치수철(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변준희(평화바람), 하상욱(민족문제연구소), 한기양(울산새생명교회 담임목사), 한덕훈,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슬기,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한찬옥(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희수(한국YMCA전국연맹), 함인숙(1923 학살당한 재일한인추도모임 대표), 홍순관(춤추는평화), 홍정완(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황건원, 황명채, 황선건(6.10만세운동유족회 상임대표), 황선엽, 황필규, Daebin Im, Doo Hyung Kang, EUN HAN, Jiseok Jung, Jung Bichwi(KFEM YEOSU), Kang-nam Oh, Lee Choongsik, Yang, Hyun Seung

단체 명단(284개) 愛知宗教者平和の会,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 アジェンダ・プロジェクト, 海老名解放教育研究協議会, 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神奈川キリスト者連絡会(神奈川外キ連), 外国人住民基本法の制定を求める全国キリスト教連絡協議会(外キ協), 外国人住民との共生を実現する広島キリスト者連絡協議会, 過去と現在を考えるネットワーク北海道, カトリック大阪大司教区 社会活動センター・シナビス, カトリック東京正義と平和の会, かながわ平和憲法を守る会, 韓日反核平和連帯, 韓統連中央本部, 韓統連東京本部, 基地のない沖縄をめざす宗教者の集い, 強制動員問題解決と過去清算のための共同行動, 「憲法」を愛する女性ネット, 憲法を生かす会, 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RAIK), 在日韓国聖公会出身教役者会, 在日韓国青年同盟,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愛知本部,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大阪本部,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神奈川本部,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兵庫本部,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広島本部, 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三重本部, 在日大韓基督教会社会委員会, 札幌キリスト教連合会在日韓国・朝鮮人との共生をめざす委員会, STOP 改憲・北区の会, 宗教者平和の会・今治, 自由空間創業団, 女性と天皇制研究会, 全

国キリスト教学校人権教育研究協議会, 戦争をさせない 1000 人委員会あいち, たんぽぽ舎,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徴用工問題を考える市民の会, 天皇制問題情報交換会, 東学農民運動の歴史から学ぶ会, 日韓民衆連帯全国ネットワーク, 日本カトリック正義と平和協議会,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教育部,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委員会, 日本基督教団神奈川教区社会委員会, 日本基督教団北海教区平和部門委員会, 日本山妙法寺, 日本聖公会正義と平和委員会, 日本聖公会中部教区宣教局社会宣教部, 日本聖公会日韓協働委員会, 日本バプテスト連盟日韓・在日連帯特別委員会, 日本平和委員会, 反安保実行委員会, 『反天ジャーナル』編集委員会, 東アジア市民連帯, 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ネットワーク, フィリピン元「慰安婦」支援ネット・三多摩, ふえみん婦人民主クラブ フォーラム, 平和・人権・環境, 部落問題に取り組むキリスト教連帯会議, 平和といのち・イグナチオ 9 条の会, 平和を考え行動する会, 平和を実現するキリスト者ネット, 平和をつくり出す宗教者ネット, ベルリン女の会, 放射能汚染水放出に反対する北区の会, 緑の党グリーンズジャパン, 許すな!憲法改悪・市民連絡会, (사)저스피스, (사)당진환경운동연합, (사)어린이깨갓동무, (사)흥사단, 1923 학살당한 재일한인 추도모임,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시민합창단, AOK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KYC한국청년연합,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제국제제국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걷는교회, 겨례의길 민족광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진보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공론넷, 광주대민주동문회, 광명YWCA,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민주권연대, 금강산평화하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억과평화, 기억과평화를위한1923역사관, 기억의서가, 기장생명선교연대, 김복동의 희망,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녹색교동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움교회, 대경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안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한성공회, 포천나눔의집, 도서출판 품, 도토리공작소협동조합, 동학실천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산돌교회,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들레, 민문연구파지부,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동문회 86동기회, 민주연론시민연합,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청학련동지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벽을문으로!평화통일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불교환경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사남하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새언론포럼, 사월혁명회,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포럼,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환경연합,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성북나눔의집, 성북지역자활센터, 성수삼일교회, 소외된 기억과 역사교육 모임, 수원YWCA, 수원시민신문사, 시민모임 독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양심수후원회,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예벳교회,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진보연대, 워싱턴 함석헌 사상연구회,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이스크라21,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정의평화인권위헌양심수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착한노동불이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한인사회,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촛추는평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바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시민연대, 플랫폼C, 한강하구평화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전쟁전후기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반도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터역사문화연구원, 함께 걷는 길벗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해아라경기지부, 행복수업, 헌법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황성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21

(자료 제공 -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23년 6월 1일

[기자회견문]

대일역사정의 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저야할 배상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국제인권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 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역사적 진실을 팔아 전범국의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 준 자들이 오랫동안 역사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시민단체에 오물을 끼얹는다.

헌법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형틀에 올려 주리를 틀려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요구해 온 피해자들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폭탄’, ‘돌덩이’, ‘걸림돌’, ‘브로커’, 온갖 프레임을 씌워 제거해야 할 대상, 치우거나 밟고 넘어가야 할 존재 취급하더니, 마침내 어둠의 수인으로 영영 가두려 한다.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저지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눈감고, 한반도 불법강점,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영토주권과 국민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로 작정한 ‘친일 브로커’들이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칼날을 준비한다.

상식도 염치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미일한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욕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부산항 입항을 당연시하고, ‘욕일기가 맞다’고 강변하는 일본 정부의 앞에 서서 ‘심정적 욕일기’론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실효성도 없는 ‘관광성 시찰단’을 앞세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희대의 ‘핵 테러’를 용인해 주려고 안달하는 자들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 강제동원의 피와 땀부터 ‘깨끗이’ 씻어주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가득한 이들도 있다. ‘한반도 합법 강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자발적 위안부’라는 가면으로 역사를 모두 가리고, 침략전쟁의 가해자에서 피폭의 피해자로 자리바꿈하고자 하는 일본의 오랜 숙원 모두를 단박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반민족적 공모를 완성해서라도 큰형님과 작은형님 모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왜곡된 인정욕구로 뒤틀린 자들이다. 가히 ‘냉전회귀 역주행 정권’의 ‘신내선일체파들’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하다.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찌다 ‘친일브로커’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는가. 대변인 노릇도 모자라 ‘행동대장’처럼 앞장 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고도 뻔뻔하게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게 되었는가. 어찌다 역사정의를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과거사 비즈니스’의 주역,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보다 일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친일 비즈니스’의 주역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단 말인가.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연이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투쟁의 길을 피해자와 함께 곳곳이 걸어온 이들도 바로 시민단체들이다. 한국 정부도 외면해 온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

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일본 정부와 싸워 온 주체 또한 시민단체들이었다. 국내외 시민들과 연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의 수많은 권고안과 결의안을 이끌어내며 국제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온 주체도 시민단체들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누가 평생을 바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동굴을 자처해 걸어 들어가겠는가. 돈이 우선이라면, 누가 그 오랜 세월 희미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길을 등불 하나 밝히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험난한 시간에 정부여당의 관계자들, 극우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대법원 판결 방해, 판결 집행 방해, 피해자 모욕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다 말인가.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일제의 압제에 분연히 일어나 언제 올지 모를 해방의 그날을 위해 목숨 바쳐 저항했던 순국선열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민주열사들의 용기와 꿈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분노와 냉소,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한 쇠사슬 연대로 한발한발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신이 우리를 향해 활짝 미소 지을 그날까지 지지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것이다.

-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30년 투쟁의미 훼손말라!
-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당장 철회하라!
- 가해자에게는 '면죄부', 시민단체에는 '채찍질',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역사정의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적반하장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2023년 6월 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7개 참가단체 및 연명 대표자 일동

<연명(116명)>

(사)나라사랑예술단 여술감독, 구동욱 광주전남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상임대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김미령 자립지공동체 대표, 김선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김세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 김연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소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김효경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남진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제열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박덕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 박미경 광주사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박정규, 박정순 실천불교승가회 사무국장, 박종학 불교환경연대 감사, 박진도, 박현선 고려대 초빙교수, 백미현, 백선기 재)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공동대표,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공동대표, 백희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명옥 부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서연우 (사)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성해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전위원장, 송근창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간사,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신철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안한진 경남지부장, 오현희 변호사, 유금순 전교조 강원지부 평창지회장, 유세종,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대표, 윤준하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동호, 이범석 전교조 보령지회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수호, 이순화,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은래 신대승네트워크 대표, 이종훈, 이창현 국민대 교수, 이현숙, 이흥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일일 자비돈소회 지도법사, 임동화 (사)광주시민센터 대표,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상은 광주여성센터 사무국장, 장유식, 장현권 광주전남민중화동지회상임대표, 장희익 서울대 명예교수, 전민용 6월민주포럼 대표, 정미영, 조영건 구축노동자후원회 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현정 목사,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권오양 촛불연대 대협실장, 김재원 촛불연대 대표,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최형록 통일단체 Action for One Korea 고문, 한도숙,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황윤정,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임상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한

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김광석 전국빈민연합 대표,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장남수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회장,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남영아 국민주 권연대 운영위원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이혜진 민들레 대표, 김준기 민족자주평화통 일중앙회의 의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박교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류만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표, 김채 희 (사)광주여성영화제 대표, 오남준,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승균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박홍섭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용위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혜열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이문상 사월혁명회 이사장,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23년 7월 22일

[결의문]

정전 70년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지금 평화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에 모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이 땅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갈수록 짙어져만 가는 전쟁의 먹구름, 버섯구름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행진했다. 한반도로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목 놓아 함께 외쳤다.

1953년 7월 27일, 3년간 300만 명의 희생을 낳은 참혹한 전투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려던 정전협정의 목적조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 끝나지 않는 적대와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옥죄어 왔다.

70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제 이 적대와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적대와 불신을 끝 모를 군비경쟁과 군사적 위협의 악순환만을 불러왔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땅 한반도를 다시금 참혹한 전장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불사한다고 선언할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사라져야 한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모든 관련국들은 핵무기와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서로를 위협하지 않을 것, 전 세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협상이 멈춘 사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핵에 기반한 새로운 동맹’을, 북한은 ‘핵무력의 고도화’를 주장한다. 주변국까지 합세하여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았다.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재개되어야 한다.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열쇠이다. 남·북·미 정상이 2018년에 합의한 것도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이었다. 우리는 이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상응 조치에 관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해법이 아니다. 이 방법으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일방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위기로 이어졌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 핵 위기가 바로 그 증거이다. 모든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제재는 완화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시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다. 압도적인 핵 억지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총을 내리고 비핵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닫힌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한미일이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며 다른 주변국과 대결하는 군사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정전 상태의 불안정한 한반도를 지역 분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과거 전쟁범죄에 눈감고,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용인하며, 아시아 평화의 축인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협상의 재개를 주장하는 것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협박을 당장 멈춰라. 전쟁 불사에 동조하지 않으면 비국민으로 낙인찍으려는 폭력을 멈춰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가두고 배제하려는 국가폭력과 혐오 선동을 중단하라.

평화를 주장하기 어려운 순간이 평화가 가장 절실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쟁 위기가 일상화된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하자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아시아를 만들자
- 군비 경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자

2023년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참여자 일동

2023년 7월 2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다. 3년 간의 전투를 잠정적으로 멈춘 이후 3개월 이내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정치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던 전쟁 당사국 간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와 군비 경쟁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전쟁은 20세기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다.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일상이 되어왔다. 적대와 불신에서 시작된 군비 경쟁과 무력 시위가 또 다른 불신과 군사적 위협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한반도 핵 문제도 이 악순환의 일부이다. 분단된 전쟁체제 곳곳에 뿌리내린 적개심과 불안이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키워왔으며,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대결과 제재의 장벽은 남북 사이의 인도적 협력이나 기후 위기 공동 대응조차 가로막아왔다.

적대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킬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의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18년 남,북,미 정상 모두가 관계 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로 나아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기대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서로가 취해야 할 단계적 조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깨진 후 상황은 그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상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핵-ICBM 실험 유예 조치를 철회하고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대북 무력시위의 강도와 빈도를 대폭 늘리면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동맹’으로 개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주도 아래 북한 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지역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당사국들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70년간 불안정하게 이어져 온 휴전 상태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관련국들 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치 속에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핵 전쟁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인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8천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다. 우리는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전쟁은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오직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70년이면 충분하다. 불안정한 휴전상태로 지속되어온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통해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은 하루 속히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반도는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의 일부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핵무기는 물론 다른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위협하지 않을 것을 서로에게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 핵무기 금지와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은 한반도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켰다.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인정한 남북, 북미 정상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협상 당사자들은 적대적 정책과 언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격적인 군사행동의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닫힌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군비 경쟁과 상호 위협의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한국전쟁 당사국과 관련국들은 진영 대결과 군사 협력 대신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모든 생명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며,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과 한국전쟁에 관련된 모든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온 인류가 지구와 더불어 지속 가능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70년 이상 이어진 긴 전쟁을 끝내고, 온 인류와 함께,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열어가자.

202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2023년 7월 27일

[727 여성평화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 체결 70년, 1950년 6월 25년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중단되었지만,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반도는 70년간 정전상태이다. 이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며,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대비하며, 군비경쟁과 적대정책의 강화를 불러온다.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사람들의 안전과 인간안보는 등한시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연시킨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 여성들은 분단체제를 끝내고 남북이 평화와 상생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바란다.

대북적대 정책을 중단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서로에 대한 적대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반도 남쪽에서 해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군사훈련)이 벌어지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도 수시로 전쟁위기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쟁을 불사하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정책 또한 독자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길을 버리고 패권적으로 흘러가는 국제정세에 발맞추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일 간의 과거사문제는 '대승적 결단'이란 이름으로 묻혀버리고,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미 신냉전 전력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무리한 군사적 팽창과 군비경쟁을 멈추는 것이 남북 사이에, 그리고 북미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이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정전 70년간 남북의 관계는 교류와 긴장을 반복해 왔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정상들의 선언들이 '평화 협정'으로 귀결되지 못한 이유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을 선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여성들은 하루속히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평화협정과 군비축소로 안보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전쟁의 구조적 원인 자체를 없애 나가는 적극적 평화를 원한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의 종식에 함께 나서길 촉구한다.

우리는 종전을 원한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

선언자 명단 : 34 단체, 개인 727명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교장로회여성대회, 남양주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복음교단여전도회전국연합회, 부산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성가소비녀회,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성남여성회, 성심수녀회, 수원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이천여성회, (사)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의기억연대, 진보당 여성-엄마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YWCA, 화성여성회(가나다 순)

강경란, 강경아, 강경애, 강명승, 강미경, 강미라, 강미애, 강민주, 강석분, 강선희, 강설화, 강수진, 강순옥, 강영희, 강은정, 강정숙, 강
 정희, 강진희, 강현미, 강현아, 강혜경, 강효경, 고민희, 고유경, 고은미, 고은채, 고정애, 공소연, 공지영, 곽은정, 구본경, 구수현, 구아
 림, 구정화, 구지혜, 구지혜, 국정선, 권경애, 권동숙, 권명숙, 권미경, 권은성, 권은숙, 권지은, 김 영, 김 진, 김경령, 김경민, 김경아, 김
 경아, 김경애, 김경하,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2, 김광태, 김귀옥, 김귀옥, 김규빈, 김금희, 김난희, 김다미, 김달애, 김도화, 김
 동금, 김리안, 김명숙, 김명순, 김명환서울대, 김목순, 김미라, 김미란, 김미성, 김미순,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미진, 김미현, 김민
 문정, 김민정, 김봉선, 김봉하, 김분경, 김삼열, 김상미, 김상미, 김상희, 김서영, 김서영2, 김선미, 김선희, 김선희2, 김성옥, 김성자, 김
 성지, 김성희, 김성희2, 김세영, 김소연, 김소영, 김소희, 김수란, 김수산나, 김수정, 김수희, 김순애, 김순영, 김승교, 김승숙, 김승숙2,
 김승희, 김신애, 김애자, 김애진, 김연경, 김연정, 김영란, 김영미, 김영숙, 김영신, 김영실, 김영주, 김영희, 김옥임, 김용미, 김용은, 김
 원일, 김원주, 김유정, 김유진, 김윤자, 김윤정, 김윤종, 김은경, 김은경2, 김은선, 김은선2, 김은영, 김은영(울산), 김은옥, 김은정, 김은
 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하, 김인순, 김재순, 김정란, 김정수, 김정아, 김정아2, 김정현, 김정화, 김정희, 김정희2, 김종점, 김주목, 김주
 연, 김주영, 김지선, 김지애, 김지영, 김지영72, 김지원, 김지은, 김지은(안성), 김지현, 김지현2, 김진실, 김찬아, 김태경, 김태경, 김하
 윤,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희, 김형규, 김혜령, 김혜선, 김혜숙, 김혜숙, 김혜정, 김화숙, 김화숙2, 김황수진, 김효정, 김효정2, 김
 희경, 김희숙, 김희정, 김희진, 나미숙, 나영숙, 나은선, 남연주, 남은순, 남정희, 남효지, 노경신, 노경아, 노성희, 노진선, 노희영, 류성
 릉, 류소정, 류영미, 류춘남, 류혜경, 마소현, 명은영, 문선주, 문소희, 문정은, 문혜윤, 미나코, 박경미, 박경순, 박경영, 박경현, 박경희,
 박나래, 박내정, 박덕제, 박득순, 박명숙, 박명자, 박미숙, 박미숙, 박미자, 박미향, 박미화, 박민선, 박민하, 박새롬, 박서영, 박선미, 박
 선영, 박선주, 박성자, 박성희, 박소영, 박승미, 박아름, 박애심, 박양미, 박연주, 박영란, 박영란, 박영애, 박영애2, 박영옥, 박오숙, 박
 옥분, 박용희, 박윤희, 박은경, 박은경, 박은숙, 박은주, 박은주, 박은혜, 박은희, 박은희, 박인숙, 박인숙, 박인혜, 박정은, 박정인, 박정
 하, 박정희, 박정희, 박주하, 박지민, 박진영, 박진희, 박현순, 박현이, 박혜란, 박혜명, 박혜원, 박혜인, 박혜정, 박혜정2, 박효양, 박희
 영, 박희인, 방선자, 배수경, 배영미, 배영미2, 배정희, 배향숙, 배현영, 배현주, 백경화, 백소영, 백은주, 백지은, 서경화, 서두석, 서미
 연, 서애란, 서영옥, 서옥희, 서은정, 서은주, 서은화, 서향수, 석경희, 석선미, 선수연, 선지현, 손명희, 손보경, 손서정, 손선영, 손혜연,
 손효정, 손희정, 송경림, 송경림(부산), 송경진, 송기춘, 송숙자, 송순자, 송용기, 송은아, 송은희, 송지현, 송혜영, 송효순, 송순희, 신경
 아, 신나경, 신보경, 신희정, 신혜진, 심문희, 심미숙, 심유리, 심지영, 심해연, 안경미, 안김정애, 안선영, 안성원, 안수원, 안수
 경, 안수경, 안연순, 안정필, 안지성, 안진희, 양정, 양덕은, 양연정, 양옥희, 양이현경, 양정은, 엄경희, 엄진희, 여명자, 여미경, 여혜숙,
 엄혜근, 영실, 오경진, 오민성, 오선미, 오세자, 오수진, 오순이, 오순희, 오승임, 오예원, 오윤희, 오하나, 오혜원, 옥순주, 우미숙, 우상
 규, 우정년, 원선옥, 원정연, 유동준, 유미란, 유민영, 유수정, 유연희, 유옥화, 유지훈, 유한나, 유현진, 유화영, 윤금순, 윤두림, 윤미경,
 윤보영, 윤소영, 윤소정, 윤소진, 윤여령, 윤은주, 윤진영, 윤진영, 윤현아, 윤혜란, 윤혜진, 이가연, 이강미, 이강숙, 이강실, 이경남, 이
 경숙, 이경진, 이경희, 이광래, 이권명희, 이길순, 이나영, 이난희, 이덕경, 이도영, 이동하, 이매실, 이명경, 이명선, 이명숙, 이명숙, 이
 문우, 이미경, 이미경2, 이미라, 이미봉, 이미숙, 이미숙, 이미정, 이미주, 이미화, 이민경, 이보라, 이보람, 이보현, 이뿐이, 이상규, 이
 새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우, 이선이, 이선일, 이선주, 이선화, 이선화2, 이선희, 이성아, 이소민, 이수연, 이수연2, 이수정, 이수찬, 이
 수현, 이숙련, 이숙미, 이숙영, 이순덕, 이순덕, 이순복, 이순희, 이애덕, 이연주, 이연희, 이영남, 이영록, 이영미, 이예정, 이옥진, 이원
 경, 이유미, 이유미, 이윤애, 이윤주, 이윤주, 이은미, 이은복, 이은선, 이은실,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2, 이은혜, 이인
 경, 이정숙, 이정미, 이정미, 이정수, 이정심, 이정아, 이정윤, 이정혜, 이정화, 이주현, 이주희,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원, 이지원
 2, 이진옥, 이진희, 이필숙, 이필숙, 이하영, 이하진, 이현선, 이현아, 이현주, 이현주, 이현희, 이형주, 이혜경, 이혜선, 이혜영, 이혜진,
 이호순, 이화수, 임미진, 임삼희, 임상호, 임선희, 임성미, 임은주, 임은주, 임은희, 임정란, 임진미, 임채숙, 임현숙, 임현숙, 임현진, 임
 현희, 임효명, 장기정, 장선화, 장선화, 장윤기, 장은진, 장재선, 장정수, 장지영, 장춘미, 장현주, 장혜경, 장혜정, 장혜진, 장희경, 전경
 숙, 전미영, 전선옥, 전옥희, 전은결, 전은미, 전지원, 전현정, 전해령, 정갑숙, 정경두, 정경란, 정경숙, 정경애, 정경애2, 정경훈, 정경
 희, 정귀윤, 정다운, 정돌선, 정명승, 정명희, 정미옥, 정민순, 정민정, 정선영, 정선영2, 정수진, 정순란, 정여임, 정영수, 정영순, 정영
 주, 정옥희, 정옥경, 정윤숙, 정은실, 정은정, 정은주, 정재분, 정정임, 정주희, 정진숙, 정태효, 정혜연, 정혜원, 정혜진, 정혜진2, 정희
 주, 정희성, 조미나, 조미라, 조미애, 조선아, 조선희, 조선희, 조성희, 조소영, 조수연, 조숙영, 조연주, 조영미, 조영숙, 조영은, 조유정,
 조윤희, 조은정, 조은하, 조익현, 조인영, 조인정, 조지윤, 조해영, 조현경, 주경숙, 주민숙, 주애영, 주진영, 지선영, 미경, 진미리, 진민
 경, 진보영, 진지애, 차해정, 채미라, 채송희, 채수지, 채은하, 천경애, 천미선, 천성희, 최경옥, 최경자, 최명혜, 최민경, 최민정, 최서정,
 최선미, 최선옥, 최선자, 최성은, 최성희, 최소영, 최수산나, 최순양, 최순옥, 최영애, 최영옥, 최원옥, 최은경, 최은아, 최은영, 최은영,
 최은오, 최은주, 최정옥, 최정임, 최진미, 최진협, 최현덕, 최현숙, 최희규, 최희연, 추순미, 하연경, 하연주, 하태정, 한국염, 한미경, 한
 미경, 한선영, 한순옥, 한신희, 한옥화, 한옥희, 한정경, 한정숙, 한정숙, 한정옥, 한지연, 한지영, 한지유, 한효주, 함인숙, 허지영, 현정
 록, 호은규, 홍미애, 홍석희, 홍선미, 홍슬아, 홍양임, 홍영래, 홍은경, 홍지영, 홍향임, 홍희진, 황미라, 황미영, 황선영, 황수정, 황원희,
 황정순, 황혜은, 황효정(가나다순)

2023년 7월 27일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숭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7. 27.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도민여성의회,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관악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WCA, 광양YWCA,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YWCA,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난민안전연구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양주YWCA, 남원YWCA,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해송아동복지연구소, 대전YWCA,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YWCA, 마산YWCA어린이집, 목포여성의전화, 목포YW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WCA, 불꽃페미액션,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청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행복누리,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사람과평화, 사람사이관계교육센터, 사천YWCA,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산티젠더폭력예방교육센터, 서귀포YWCA,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서폐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WCA,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세상의 절반, 세종YWCA, 속초YW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YWCA, 아우르니, 안동YWCA,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YWCA,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안양시청소년문화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교회,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평등공동체숨, 여성환경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여수ywca,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YWCA, 유쾌한젠더로, 의정부YWCA,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음연구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제주여민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천YWCA,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회, 진주YWCA,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시성평등재정연구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YWCA, 천안서북여성의용소방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YWCA,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충남여성포럼,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실턴트단,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YWCA,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폭력예방교육아카데미, 하남YWCA,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충남아카데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맹 광주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사)강릉YWCA, (사)군산YWCA, (사)논산YWCA,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YWCA,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수원YWCA, (사)시흥여성의전화, (사)씨알여성회, (사)익산YWCA, (사)인천여성회, (사)인천YWCA, (사)전주YWCA, (사)제주YWCA, (사)춘천YWCA, (사)충주YWCA, (사)파주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흥천군지회

2023년 8월 9일

**제11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맞이 세계연대집회,
제160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32년 전 8월 14일, 김학순은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에 맞서 당당히 피해자임을 밝히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을 요구했다. 덕분에 오랫동안 침묵해야만 했던 국내외 피해자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또 다른 김학순이 되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망각과 외면의 늪에서 깨어난 전 세계 시민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에게 책임인정과 진상규명,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과 기억·기림의 필요성을 외쳐 왔다. 덕분에 전시성폭력은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가 되었으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진실과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라는 국제법적 원칙이 세워졌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초국적 기억 공동체를 형성하며, 여성인권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써왔다.

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012년 11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로 정하고,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실천하자고 결의했다. 오는 8월 14일은 열한 번째 기림일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 한일합의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강제동원과 성노예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 왔다. 전 세계 시민들이 자국의 전시성폭력과 여성차별, 인종차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건립한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설치방해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압박해 왔다. 고노담화를 통해 스스로 인정했던 역사를 부정하거나 약속했던 최소한의 재발방지책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폄훼하고, 가해 역사를 지우는 데 혈안이 되어 왔다.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관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를 외치더니 마침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안’을 내놓고,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를 모두 부정하는 일본 우익의 숙원을 앞장서 해결해 주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위해 역사를 망각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 속에 몰아넣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본 우익과 한국의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이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1905년 을사늑약의 시간으로 되돌리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을 다시 되새긴다. 피해생존자들의 고통과 염원을 듣고 느끼고 함께해온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범죄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할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의 진실을 역사의 법정엔 깊이 새겨 어떠한 공격에도 지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부인과 부정의 정치가 진실과 정의 앞에 무릎 꿇을 그날까지 사랑과 희망의 연대로 가열 차게 싸울 것이다. 혐오와 차별, 갈등과 폭력, 분쟁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날을 위해, 더욱 단단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이 되는 해이며, 정전협정 70년, 일본이 고노담화를 발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어두웠던 과거에 대한 성찰과 극복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은커녕, 전례 없는 핵전쟁의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구도 앞에 흔들리는 국제평화와 동아시아 민중의 안녕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일본 정부는 한반도 불법강점, 식민지, 민간인 학살,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 하나,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세력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을 당장 멈추고 사죄하라.
- 하나, 한국 정부는 자국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 하나, 한국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약속이행을 당당히 요구하라.
- 하나, 한일 양국 정부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사주의와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

2023년 8월 9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9개국(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97개 공동주관단체

대한민국 (84)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2023 인천평화축제기획단, 6.15공동선언실천안산본부, JCI장성청년회의소, KIN(지구총동포연대), 강동구 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겨레하나, 겹겹프로젝트,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광산구평화의소녀상시민모임,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구로여성회, 구로평화나비,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대학교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극단고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복동의희망, 김포평화나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안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천시민연합,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부평광장,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강서양천여성전화, 서울국제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우나,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골롬반의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나비, 시민모임 독립, 시사사진 소모임 찰각, 식민지역사박물관, 신대승네트워크, 울산여성연대, 울산여성회, 원주시민연대, 이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이화민주동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제11차 세계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 추진위원회,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주평화소녀시민모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KNGB),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전화,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함께여는광주연대, 함께평화, 햇살사회복지회,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 특별위원회 미대의 외침,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대학생 원정

일본 (3) 일본군'위안부'문제간사이네트워크 (日本軍「慰安婦」問題・関西ネットワーク),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들과함께걸어가는오사카고베한신연락회(日本軍「慰安婦」被害女性と共に歩む大阪・神戸・阪神連絡会)

필리핀 (1) 릴라 필리피나 (Lila-Pilipina)

미국 (2) 시카고여성학라이프/KAN-WIN, 워싱턴희망나비

캐나다 (2) 비씨알파 (BC ALPHA,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피스필로소피센터 (Peace Philosophy Center)

영국 (1) 아트 파워 (Art Power)

호주 (1) 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독일 (2) 코리아협회 (Korea Verband), Art5예술협회 (Art5 e.V.)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한인회

▣ 세계공동행동 참여 단체: 5개국(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26개 도시 42개 단체

2023년 9월 3일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서울시 기습철거에 대한 성명서]
-성추행 가해자 임옥상을 핑계 삼아 여성폭력을 한일관계에 이용하고 일본군 '위안부' 역사까지 통째로 지우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 철거를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되어 있는 임옥상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9월 4일 철거할 계획이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는 민족반역자 이완용과 테라우찌 통감이 한일강제합병조약을 체결한 통감관저 터에 반인도적 전쟁범죄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나아가 당당히 평화 인권활동가로 활약하신 피해생존자들의 메시지를 계승하자는 다짐으로, 사회단체, 정계, 여성계, 학계, 문화계,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국민모금을 시작하여, 총 19,754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2016년 조성된 공간이다.

그런데 2023년 8월 17일, 기억의 터 조성에 참여한 임옥상 작가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시는 임옥상이 참여한 작품에 대한 철거 조치를, 문체부는 임옥상 작가의 공공지원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전태일 재단은 임옥상 작가가 제작 참여한 전태일 동상에 대해 '전태일 동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철거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성추행 가해자 임옥상 작가의 작품 철거 및 공공지원 배제 검토에 대해 환영한다. 기억의 터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와 여성인권을 염원하는 피해자 및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작업에 성추행 범죄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감히 참여한 임옥상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임옥상 작가는 성추행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울시가 임옥상의 작품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기억의 터 조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에 반대한다. 성추행 가해자의 작품을 철거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서울시가 철거하겠다고 밝힌 2개의 작품은 임옥상 개인만의 작품이 아니다. 이는 조형물 제작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추진 위원과 여성작가들 및 모금에 참여한 19,754명의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존경과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만들어낸 집단 창작물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수많은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 다짐, 정성과 노고로 완성된 집단 창작물이 임옥상 개인의 것으로 폄하되고 의미가 훼손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서울시가 철거한다는 "세상의 배꼽"에는 윤석남작가의 그림이 새겨져 있고, "대지의 눈"에는 왜 기억의 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단, 김순덕 할머니의 '끌려가는 소녀' 그림이 새겨져 있다. 서울시가 철거하겠다는 2개의 작품은 기억의 터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이것들이 철거되는 순간 기억의 터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다급하게 기억의 터 작품들을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진정 지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 이 사안과 관련된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충분한 정보가 배제된 채 진행한 여론조사만 가지고 철거를 집행하겠다고 한다. 철거 후 재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말뿐인 대책도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서울시가 성추행 가해자의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반

대하기 때문에 기억의 터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일과 현재도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여성인권에 대한 다짐을 담아 기억의 터 공간을 어떻게 재조성할 것인지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임옥상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두와 연대한다.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위안부' 운동에 참여한 민중예술가가 다시금 여성폭력을 행한 이 사태에서 선명한 전선은 '반성폭력'이다. 우리는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임옥상의 성추행 사건, 문화계 안의 성차별적인 남성문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윤석열 정권의 일본 정부에 대한 아첨의 일환으로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지우기 모두에 저항한다. 임옥상의 성추행 사건과 기억의 터 공간의 향방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는 진정으로 임옥상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자 한다면 임옥상의 성추행 사건을 이용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연대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서울시는 기억의 터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임옥상에 대한 준엄한 평가와 심판과 더불어 기억의 터의 장소성과 역사성, 시민 참여, 반성폭력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라.

2023년 9월 3일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가 정의와 평화의 배움의 장이자 사색과 저항의 터가 되길 바라는 건립추진위원회와 단체 및 개인 1,532명 일동(9월 3일(토) 오후 5시 기준)

(사)강동노동인권센터 이사 김영호, (사)대구여성회,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인천여성회, (사)정농회 이성호, (사)평화어머니회 고은광순, (사)포항여성회, (사)한국청소년문화원, (사)단법인'사람과평화, 13일의 지킴이, 5.3합창단, Byung Hee Lee, ENDO KEISUKE, Goo Lee, Jeon Insook, KIN (지구노동포연대), kt민주동지회, KYC(한국청년연합), Mijin Kim, YAJIMA TSUKASA, 가재울녹색교회, 감리교여성지도력서울개발원, 강경란, 강경주, 강금자, 강나라, 강나래, 강남식, 강다현, 강덕임, 강동민, 강동주, 강두호, 강명지, 강명진, 강문선, 강미, 강미연, 강미영, 강민영, 강민지, 강병조, 강서경, 강수빈, 강순자, 강시현, 강연실, 강연주, 강영길, 강은비, 강이수, 강전구, 강정원, 강종철, 강지수, 강진경, 강진례, 강철, 강초룡, 강춘심, 강태희, 강현숙, 강형구, 강혜정, 강호숙, 강호원, 강홍란, 강희주,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남상혁, 검찰새기들, 겨레하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영애, 경주여성노동자회, 고경희, 고경리, 고나경, 고봉찬, 고양여성민우회, 고영희, 고요, 고을선, 고혁진, 공공연대 노동조합 김여주, 공현정, 광노진, 광수진, 광은희, 광혜영,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교용, 구분선, 구순례, 구예린, 구은순, 국현, 군포여성민우회, 권금상, 권길자, 권말선, 권명진, 권미강, 권미경, 권민영, 권민주, 권수현, 권영인, 권영진, 권요규, 권춘택, 권혁주, 권현정, 권희자, 금박은주, 금속노조 울산지부 두울지회,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길승재, 김 수복, 김0안, 김가현, 김강수, 김경남, 김경내, 김경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순, 김경애, 김경윤, 김경환, 김경희, 김관표, 김교신, 김귀옥, 김규리, 김금옥, 김기영, 김나경, 김나혜, 김다미, 김다혜, 김대숙, 김대용, 김덕수, 김도연, 김도현, 김동규, 김동식, 김동우, 김동욱, 김동희, 김동희, 김란희, 김륜형, 김명선, 김명숙, 김명진, 김명희, 김명희, 김미라, 김미란 성공회대학교, 김미선, 김미선, 김미연, 김미주, 김미희, 김민경, 김민문정, 김민서, 김민아, 김민정, 김민혜, 김방희, 김배영, 김범석, 김병경, 김병숙, 김병희, 김보람, 김보령, 김보민, 김보현, 김삼숙, 김삼태, 김삼균, 김상균, 김서영, 김서영, 김서현, 김서희, 김석종, 김선경, 김선미, 김선실, 김선영, 김선이, 김선주, 김선진, 김성경, 김성금, 김성미, 김성미, 김성민, 김성숙, 김성은, 김성이, 김성제, 김성진, 김성호,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훈, 김성희, 김세우, 김세진, 김세홍, 김소연, 김소원, 김소진, 김소현, 김소희, 김솔이, 김송겸, 김송이, 김수민, 김수민, 김수밋, 김수정, 김수진, 김숙희, 김숙희, 김순두, 김순진, 김순희, 김승은, 김승재, 김신아, 김아무개, 김아영, 김안나, 김애라, 김애영, 김연순, 김연빈, 김연수, 김연주, 김영, 김영균, 김영기, 김영랑, 김영림, 김영미, 김영석, 김영선,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현,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예나, 김예민, 김예빈, 김예숙, 김예진, 김옥수, 김왕훈, 김용규, 김용석, 김용찬, 김유경, 김유미, 김유미, 김유민, 김유승, 김윤선, 김윤자, 김윤주, 김은미, 김은별,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종, 김은주, 김은지, 김은채, 김은희, 김을수, 김응규, 김인수, 김인숙, 김인희, 김일형, 김장현, 김재승, 김재이, 김재진, 김재천, 김재현, 김재현, 김정미, 김정민, 김정아, 김정하, 김정혜, 김정희, 김정희, 김종례, 김종성, 김종욱, 김종철, 김주연, 김준홍, 김지미, 김지민, 김지민, 김지선, 김지애, 김지애,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원, 김지윤,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희, 김진광, 김진숙, 김진아, 김진영, 김진철, 김진현, 김진희, 김창호, 김춘화, 김태연, 김태영, 김태일, 김태훈, 김하나, 김하늘, 김학수, 김한기령, 김한주, 김

해숙, 김해여성외전화, 김해정, 김현선, 김현ㅇ, 김현주, 김현지, 김현지, 김현진, 김현철, 김현하, 김현희, 김현희, 김형준, 김혜경,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은, 김호신, 김홍업, 김화숙, 김활란, 김효경, 김효식, 김효정, 김효정, 김훈, 김휘진, 김희경, 김희국, 김희명, 김희수, 김희식, 김희연, 김희정, 김희정, 김희진, 김희진, 김영경, 나상훈, 나승인, 나영기, 남궁미, 남궁수진, 남궁희수, 남기환, 남돈희, 남성아, 남소영, 남승완, 남승희, 남영란, 남영숙, 남예원, 남윤주, 남제성, 너나들이, 너나들이, 너나들이, 너나들이, 너나들이, 너나들이, 노경신, 노선희, 노슬미, 노승미, 노예진,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노재민, 노재은, 노정실, 노조명, 노현무, 노혜령, 노희정, 늘푸른,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더좋은 세상 만들기 뉴질랜드 한인동포,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 도영인, 독일Art5예술협회, 두레방 17명/3개(단체), 라종신, 류감석, 류복희, 류지형, 류후남, 마경희, 마경희, 마리아의 딸 수도회 김은미,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서연, 모니카김, 문경란, 문민구, 문서은, 문선경여성문화예술기획, 문승호, 문영봉, 문영숙, 문영희, 문예린, 문은경, 문현준, 문화예술네트워크, 민경은, 민경자, 민병창, 민생경제연구소, 민서현, 민은영, 민족문제연구소, 민지희, 바다, 박00, 박ㄱ, 박갑철, 박경득, 박경애, 박계희, 박구용, 박동욱, 박명숙, 박명희, 박무, 박미경, 박미경, 박미숙, 박미옥, 박미진, 박미해, 박미현, 박미희, 박민서, 박민아, 박민주, 박삼현, 박상규, 박선우, 박선희, 박성민, 박소진, 박수선, 박수연, 박수호, 박순진, 박순천, 박승렬, 박시연, 박시영, 박시원, 박애린, 박에스더, 박연복, 박연숙, 박영란, 박영미, 박영숙, 박영희, 박예슬, 박예슬, 박오순, 박우식, 박윤정, 박은경, 박은수, 박인영, 박인혜, 박인혜, 박일서, 박재경, 박재성, 박재완, 박재우, 박재우, 박저잔, 박정순, 박정연, 박정윤, 박정하, 박정화, 박종길, 박종면, 박종윤, 박종화, 박종훈, 박주미, 박주희, 박준수, 박준영, 박진선, 박진영, 박진희, 박찬영, 박창현, 박채연, 박채원, 박철우, 박대신, 박향근, 박현선, 박현심, 박혜경, 박혜경, 박화자, 박희영, 박희정, 반지민, 방경숙, 방성옥, 배기남, 배성분, 배소혜, 배영미, 배장렬, 배진경, 백경복, 백남현, 백동준, 백미순, 백선기, 백선기, 백선영, 백세희, 백승희, 백승오, 백영경, 백영제, 백운성, 백은희, 변명기, 변보경, 변성자, 변정희, 복용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한국여성연구소 강정숙,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삭정은, 살레시오수녀회, 상문밖교회, 새길교회 이광표, 서관호, 서광석, 서대문교육복지센터, 서덕석, 서문영, 서민경, 서민경, 서민석, 서봉분, 서선희, 서승재, 서연경, 서오현, 서우석, 서울시립십대여성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이세철,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제일교회, 서윤진, 서윤하, 서은주, 서은희, 서은희, 서정경, 서지울, 석원종, 석은미, 석희진, 선경희, 설영진,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근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옥, 성문밖교회, 성미화, 성상경, 성정림, 성지은, 성치화, 성해용, 성희령, 세브란스 병원 노동조합, 소문수, 소정, 손경숙, 손민성, 손서은, 손서정, 손석현, 손승민, 손연진, 손영현 수녀(성심수녀회), 손윤희, 손은정, 손인숙, 손지아, 손해연, 손희정, 송경숙, 송다영, 송다윗, 송시훈, 송영경, 송영애, 송오식, 송은우, 송인자, 송지현, 송지훈, 송혜연, 수빈, 수원평화나비, 순천현대YMCA, 송일, 시골감리교회,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시은, 신경아, 신동완, 신동주, 신만덕, 신면섭, 신미란, 신미숙, 신미숙, 신상아, 신선미, 신선화, 신선희, 신성민, 신성연이, 신수진, 신순영, 신순영, 신순영, 신승화, 신영민, 신옥자, 신윤희, 신진영, 신필식, 신혜원, 신호성, 신호국, 신희수, 실천불교승가회, 심여진, 심해연,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잇다 손유라, 아시아평화시미레트워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광희, 안김정애, 안명숙, 안명옥, 안무늬, 안성호, 안소연, 안수영, 안양여성외전화, 안외순, 안용자, 안원탁, 안정숙, 안정호, 안주성, 안태현, 안혜경, 안혜경, 안혜민, 안홍택, 양경원, 양덕춘, 양만승, 양미경, 양민화, 양선규, 양성필, 양소영, 양승주, 양승훈, 양시모, 양은희, 양정, 양지영, 양진오, 양창권, 양해경, 양해택, 양희영, 양희중, 어연선, 엄석민, 엄영랑, 여백,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평등공동체 숨, 여순주, 여주연, 여준성, 여혜숙, 연정희, 연지혜,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예수살기 김기원, 오경진, 오경훈, 오기진, 오동현, 오름, 오미령, 오미순, 오설, 오세진, 오세향, 오소정, 오솔잎, 오재일, 오재찬, 오주현, 오진규, 오진숙, 오판진, 오현근, 오현주, 왕인순, 우생규, 우순덕, 우순열, 우영주, 우정희, 윤영탁,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회, 울산웰다잉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숙희, 원준희, 원지연, 원지우, 원진섭, 유경희, 유기정, 유남희, 유리제, 유문근, 유병제, 유선용, 유성민, 유성희, 유소희, 유승희, 유연희, 유영란, 유옥순, 유이정, 유재룡, 유재선, 유점례, 유정애, 유정옥, 유준현, 유철환, 유한옥, 윤경미, 윤기홍, 윤남식, 윤문신, 윤미경, 윤별이, 윤병민, 윤병일, 윤삼성, 윤소영, 윤순덕, 윤애경, 윤영희, 윤용숙, 윤재동, 윤종삼, 윤준하, 윤지우, 윤지희라, 윤진하, 윤채린, 윤혁, 윤현주, 윤희정, 의성서문교회 / 이혁, 이강원, 이강원, 이건정, 이경미, 이경서, 이경수, 이경숙, 이경숙, 이경숙, 이경순, 이경애, 이경옥, 이경은, 이경혜, 이경화, 이경화, 이교성, 이근국, 이근자, 이기순, 이기연, 이기화, 이나경, 이나영, 이다경, 이다은, 이담비, 이동은, 이동주, 이래형, 이만재, 이명규, 이명선, 이명숙, 이명숙, 이명옥, 이명익, 이명희, 이명희, 이미경,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애, 이미화, 이민준, 이민지, 이민지, 이병문, 이병욱, 이보라, 이복선, 이비아, 이산하, 이상경, 이상귀, 이상길, 이상덕, 이상민, 이상은, 이상이, 이상진, 이상호, 이상호, 이상화, 이석주,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정,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설, 이성준, 이성준, 이성준, 이세영, 이소영, 이소영, 이수미, 이수미, 이수빈,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숙인, 이숙진, 이순영, 이순무, 이순미, 이승용, 이승원, 이승주, 이승현, 이승희, 이시영, 이시재, 이신영, 이신우, 이아람, 이안나, 이안나, 이애덕, 이연수, 이연주, 이영근, 이영란, 이영은, 이영주, 이영진, 이영학, 이영희, 이예리, 이옥경, 이용식, 이우혁, 이옥중, 이월석, 이월애, 이원준, 이유라, 이유진, 이유진, 이윤선, 이윤지, 이윤진, 이윤하, 이은경, 이은경, 이은미, 이은빈, 이은숙, 이은영,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목사, 이은혜, 이의진, 이인규, 이인석, 이인숙, 이재근, 이재숙, 이재용, 이재욱, 이재현, 이정덕, 이정득, 이정미, 이정미, 이정미, 이정민, 이정섭, 이정숙, 이정연, 이정연, 이정원, 이정자, 이정현, 이정현, 이정환, 이정희, 이정희, 이종경, 이종숙, 이종현, 이종휘, 이주연, 이주열, 이주영, 이주원, 이주현, 이준, 이준용, 이지양, 이지연, 이지우, 이지웅, 이지원, 이지은, 이진구, 이진석, 이진아, 이진영, 이진호, 이진희, 이진희, 이창현, 이천식, 이천여성회, 이춘, 이충민,

이태숙, 이태준, 이태희, 이판도, 이하나, 이하연, 이하영, 이하이, 이해령, 이해연, 이현수, 이현경, 이현경,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현영, 이현주, 이현희, 이해건, 이해경, 이해경, 이해성, 이해수, 이해연, 이해영, 이해인, 이호섭, 이화규, 이화나비, 이화민주동우회, 이화민주동우회 김천근, 이화영, 이화인, 이효경, 이훈, 이희량, 이희석, 이희아, 이희정,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임동빈, 임두리, 임무성, 임미심, 임민정, 임복환, 임서연, 임선정, 임선희, 임소영, 임송, 임수아, 임수정, 임용식, 임윤옥, 임은주, 임의수, 임인출, 임정빈, 임정희, 임지영, 임태환, 임해광, 임현준, 임효정, 자활지원센터 닝쿨, 장갑기, 장경우, 장달리, 장민서, 장보윤, 장새환, 장선희, 장성옥, 장숙경, 장순현, 장시현, 장영선, 장영옥, 장영진, 장예빈, 장유진, 장윤경, 장윤영, 장은아, 장이정수, 장종수, 장주경, 장지원, 장창섭, 장필화, 장하진, 장현숙, 전경민, 전규자,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미주, 전민경, 전민용 6월민주포럼 대표, 전반석, 전병섭, 전병성, 전부선,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상철, 전소정, 전소현, 전영희, 전은숙, 전은주, 전지영, 전진교, 전태영, 전해정, 전향이, 전현정, 전해영, 정갑숙, 정경식, 정경아, 정경화, 정경훈, 정광진, 정금순, 정나겸, 정나연, 정덕환, 정례베카, 정리연, 정문자, 정미경, 정미경, 정미례, 정미숙, 정미옥, 정미현, 정민형, 정백근, 정서영, 정선, 정선엽, 정선영, 정성조, 정세학, 정소영, 정수진, 정숙영, 정숙자, 정슬기, 정승희, 정영숙, 정영은, 정영훈, 정옥진, 정용림, 정원진, 정유경, 정유정, 정유진, 정윤정, 정윤희, 정은영, 정은이, 정은정, 정은주, 정은희, 정익화, 정인숙, 정인용, 정재원, 정주경, 정지윤, 정지은, 정진, 정진아, 정진영, 정춘숙, 정하연, 정하영, 정하풍, 정해정, 정현경, 정현수, 정현태, 정혜경, 정혜영, 정혜옥, 정혜원, 정혜윤, 정호상, 정호영, 정호정, 정희성, 정희진,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조가람, 조경원, 조교은, 조규애, 조금선, 조금숙, 조남민, 조덕남, 조명자, 조미영, 조미영, 조미정, 조민주, 조서원, 조서윤숙, 조성호, 조세열, 조소연, 조예진, 조옥라, 조용원, 조용현, 조윤령, 조은, 조은상, 조은선, 조은숙, 조은우, 조은혜, 조인영, 조재현, 조진희, 조학선, 조해정, 조현정, 조현숙, 조현옥, 조혜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좌경옥, 주광희, 주부, 주선미, 주순용, 주영선, 주진근, 주현규, 지경필, 지미정, 지은희, 지정남, 지형미, 진보당, 진보당울산시당 이하진,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창원대넷, 진보대학생넷 경상대지회, 진보대학생넷 진주교대지회, 진성미, 진완식, 진주영, 차다희, 차미정, 차보겸, 차예지, 차현수, 채강목, 천미혜, 천석우, 천성문화원, 천승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연대, 최 병순, 최낙성, 최만자, 최미랑, 최미옥, 최미희, 최민규, 최민규, 최병구, 최병국, 최병남, 최성희, 최소리, 최수정, 최슬기, 최승아, 최승옥, 최열은, 최영숙, 최영애, 최영애, 최영애, 최예나, 최우혁, 최유숙, 최유진, 최윤영, 최윤오, 최윤철, 최은경, 최은아, 최은영, 최은주, 최은희, 최인모, 최인미, 최일훤, 최재숙(부천시민연합), 최재연, 최재혁, 최정, 최정수, 최주영, 최준규, 최지연, 최진규, 최진영, 최진희, 최학도, 최한나, 최혁, 최형미, 최혜숙, 최홍대, 최홍식, 최희경, 추경미, 추광태, 추은정, 춘천사북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탁원석, 택배노조 서인성, 토마스케네디, 토지+자유연구소, 편영범, 편일란, 평택안성흥사단, 평통사 조수현, 평화교회 이수기,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다해, 하보이, 하승모, 하유미, 하준태, 하해성, 한경아, 한경옥, 한경희, 한광호, 한국 여신학자협의회 .정순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베트남시민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염, 한국-베트남시민연대, 한기양, 한동철, 한명희, 한미경, 한미정, 한병학, 한복환, 한산석, 한상근, 한상순의2명, 한상호, 한선경, 한선미, 한성민, 한성원, 한솔지, 한송이, 한송이, 한순희, 한승우, 한영란, 한윤희, 한은정, 한정숙, 한종동, 한지연, 한진선, 한진희, 한중우, 한현실, 한혜원, 함께 맞는비, 함께평화, 함종봉, 햇살사회복지회, 향린교회, 향목스님, 허명숙, 허선희, 허성우, 허연화, 허이삭, 허정미, 허훈, 현슬기, 현용숙, 흥 일, 흥경희, 흥덕진, 흥보연, 흥성민, 흥성실, 흥성희, 흥소혜, 흥순향, 흥영, 흥정혜, 흥죽희, 흥진숙, 흥찬숙, 흥현정, 흥효정, 화물연대, 황경란, 황경선, 황권렬, 황대연, 황미라, 황보반, 황성기, 황소연, 황수정, 황수자, 황순민, 황영미, 황영철, 황완, 황윤경, 황윤희, 황종옥, 황준연, 황준의, 황진서, 황지빈, 황혜경, 황혜성, 휴먼케어센터 이정옥

2023년 9월 5일

[성명서]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철거 강행 규탄 성명서
-기어이 기억의 터를 철거해 일본군'위안부',
반성폭력 운동 역사 통째로 지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어이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를 철거했다.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으로 19,754명의 시민들이 마음 모아 서울 남산자락 옛 통감 관저 터에 조성한 여성인권·평화의 터를 짓밟고 깨부수었다.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를 비롯 2천명이 넘는 시민과 단체가 성급한 철거 전에 임옥상의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의 장을 통해 먼저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결국 철거로 답했다. 수차례의 면담 요청 거부, 새벽부터 모인 100여 명의 시민들의 절절한 제안에 대한 답이 반성폭력 역사 지우기라는 것이 참담하다.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독단을 규탄한다.

우리는 임옥상 성추행 사건을 통해 만연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드러내고, 범죄 이후 그의 파렴치한 행보까지 모두 기록하는 방안을 찾자고 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철거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철거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은 임옥상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대지의 눈'에는故 김순덕 할머니가 그리신 '끌려감' 작품과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생애와 말들이 새겨져 있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에 의해 그 기록이 지워지고 부숴졌다. 피해자들의 말과 이름이 지워지면 일본의 과오 또한 지워진다. 동시에 임옥상의 성폭력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워진다.

서울시의 기억의 터 철거는 임옥상 지우기가 아닌 일본군'위안부' 역사 지우기, 여성폭력 저항의 역사 지우기다. 여성폭력의 역사를 공적 공간에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노력까지 지워버렸다. 기억하고 성찰하여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기억의 터가 서울시에 의해 임옥상 개인의 것으로 전락했다. 기억의 터 철거로 일본군'위안부', 반성폭력 운동 역사 통째로 지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기억의 터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와 여성인권을 염원하는 피해자 및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작업에 성추행 범죄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감히 참여한 임옥상의 행보로 인해 더욱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 임옥상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임옥상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평가와 기록 기억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기억의 터를 철거한 오세훈 시장의 잘못에 대해 낱알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기억의 터 공간을 어떻게 재조성할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일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똑똑히 지켜보고 말하고 개입할 것이다.

2023년 9월 5일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추진위원장 최영희 포함 추진위원 모금 참여자 총 98명

(강덕제, 강순원, 강현욱, 고영민, 고원선, 권미경, 구술기, 김경안, 김경애, 김귀균, 김금옥, 김덕주, 김미령, 김법열, 김삼열, 김상은, 김선영, 김순진, 김연순, 김은혜, 김은희, 김지선, 김지영, 김학민, 김화영, 노혜경, 류문수, 박명은, 박화영, 배외숙, 서도명, 서지원, 선미라, 소연선, 소종현, 소현정, 소홍선, 송가람, 송정심, 송찬길, 신낙균, 신순애, 신호석, 안경덕, 안성오, 양성덕, 엄규숙, 윤현봉, 오상

석, 이경서, 이공현, 이길연, 이명아, 이미경, 이상경, 이선종, 이성심, 이숙진, 이순자, 이영희, 이운숙, 이은혜, 이제원, 이종화, 이청숙, 이한매, 이해경, 이현숙, 이호연, 임광제, 임규완, 임진은, 장상환, 장하진, 정강자, 정명선1, 정명선2, 정상덕, 정영숙, 정은선, 정춘생, 조명자, 조정하, 주혜은, 지은희, 차경애, 차옥송, 최규선, 최금례, 최도윤, 최영희, 한은경, 허석, 홍은용, 황도묵, 황순하, 황주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61개 단체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 부산여성행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23년 10월 22일

[성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만 가자지구 전역에 6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주민 1,417명을 살해했다. 인구 절반이 아동인 230만 가자 주민에게 이집트를 향한 국경을 통해 도망가라 한 뒤 국경을 폭격했다. 피난처로 도망가라면서 피난처로 사용되는 UN 학교를 폭격했다. 폭격 현장에 시신과 부상자를 수습하러 들어가는 구급대에 진입 허가를 낸 후 구급차를 폭격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언했듯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지상군으로 포위하고 10월 13일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떠나라”며 24시간 내 소개령을 내렸다. 지상전을 예고한 것이다. UN 전문가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세계보건기구는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에 다름없다고 소개령 철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이스라엘은 시한만 연장했다.

소개령을 받은 22개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살해됐다. 10월 17일 알 아흘리 병원 폭격으로만 피난민과 환자, 의료진 등 500명이 살해됐다. 이스라엘은 소개령으로 지정한 도로를 통해 남부로 피난 가던 행렬도 폭격했다. 피난민 70명이 살해됐다. 피난처로 제시된 남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동 7명을 포함한 13명의 피난민 일가족이 몰살당했다. 남부에 도착한 주민들은 피난민을 맞아준 이슬람 사원이, UN 학교가, 병원이, 환대해 준 가정집이 폭격돼 다시 북으로 향하고 있다. 어차피 살해당할 거라면 집에서 죽겠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폭격 때문만이 아니다. 가자 주민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야외 감옥’에 갇힌 채 이스라엘로부터 집단 처벌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 육해공을 봉쇄한 뒤 생필품과 의료물품 등의 반입을 최소한에도 못 미치게 제한했고, 대규모 침공을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학살을 자행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긴 봉쇄에 더해 이제는 “완벽히” 가자를 봉쇄한다며 전기, 수도, 연료, 식량 반입을 차단했고 이것이 “인간 동물”인 가자 주민에 걸맞은 대응이라 발표했다. 이보다 노골적일 수 없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의 의도를 선명히 드러냈다. 한 인구 집단을 비인간화해 인간 이하 존재로 격하한 뒤 고의로 절멸시키는 것. 유대인 강제수용소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대사에서 봐 온 가장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간 서방 사회는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불법행위를 지원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서방의 정부와 언론은 이스라엘의 프로파간다를 검증 없이 퍼뜨리며 팔레스타인 민중을 비인간화하는 작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을 주장해 온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모든 위선을 거침없이 벗어던진 채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의, 집단학살의 공범이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은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청하는 첫 번째 UN 안보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길을 트기 위해 잠시 교전을 멈추라는 두 번째 결의안도 미국이 부결시켰다. 미국은 또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고 항공모함 두 척을 파견하고 매년 해운 무기 지원에 더해 초당적인 합의로 조건 없는 추가 무기 지원을 결의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을 집단학살하고 있는 바로 지금, 한국 무기전시회(ADEX)에는 이스라엘 전쟁기업 12곳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이스라엘이 50일간 가자 주민 2,251명을 학살한 뒤 무기 거래량을 오히려 늘려 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 전쟁범죄의 공범이다.

이들은 역사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어떤 서사를 따라가도 폭력은 2023년 10월 7일에 시작하지 않는다. 하마스가 창립한 1987년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1967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골란 고원,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군사점령했다. 애초 1948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건국했다. 모든 폭력은, 학살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에서 비롯한다.

가자지구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군사점령지인 동예루살렘·서안지구에서 군사 작전 강도를 높이며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 전쟁범죄에 상응하는 불법 정착촌을 끊임없이 건설,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장한 불법 유대인 정착민들은 점령군의 보호를 받으며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고 공격한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들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고, 이스라엘 인구의 20%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시민권자를 차별하는 65개 법을 제정하고, 800만 난민이 고향에 돌아올 권리를 철저히 부정한다. 진실을 전하는 기자들을 살해하고, 언론 등록을 취소한다. 레바논과 시리아 등 주변 국가를 주기적으로 폭격해 민간인을 살해한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전쟁범죄 목록은 끝이 없다.

이스라엘이 “쓸어버리”고 있는 가자지구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협의 하에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 한다. 필요한 건 집단학살 사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10월 19일 기준 이스라엘은 이미 아동 1,524명을 포함한 가자 주민 3,785명을 학살했고 “완벽한” 봉쇄를 해제할 생각도 없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당장 멈추도록 국제 사회가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 지배하는 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언제든 집단학살을 다시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 즉각 휴전과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보장을 촉구한다.
-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2023. 10. 22.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시민사회 단체 일동

2023년 11월 4일

[성명]

이스라엘은 즉각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학살을 중단하라

이스라엘 점령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방위적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10월 7일 이후 단 27일간 점령군이 학살한 가자지구 주민은 9,061명으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 실종된 2천여 명을 더하면 1만 명이 넘는다. 학살된 주민의 75%가 아동과 여성, 노인이고 가족 단위로 몰살당한 이들은 73%에 달한다. 폭격에 더해 전면적인 전력과 연료 공급 차단으로 가자지구 병원의 절반이, 1차 의료시설의 3분의 2가 폐쇄됐다. 물려드는 부상자로 남은 병원들 역시 붕괴 직전이다. 신생아와 환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지금의 상황은 10월 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작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학살하고 추방할 때 시작된 것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던 땅에 ‘유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인종 청소는 현재 800만에 달하는 난민을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끊임없이 저항했지만 서구 열강의 지지 속에 75년간 이스라엘의 식민지배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리고 점령군이 전례 없는 폭격을 쏟아붓는 지금, 서구 열강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서구 상업 미디어들은 이 전쟁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침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전’으로 포장한다. 이러한 규정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대한 무제한적 긍정과 묵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과 학교를 가리지 않는 대공습으로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전역을 파괴하는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방문하여 전쟁 수행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이스라엘 방어 보장”을 천명했다. 점령군의 ‘방어권’이란 가자지구 주택의 절반을 파괴하고 140만 주민을 홈리스로 만드는 것이다. 자발리아 난민촌 하나에 폭탄 6톤을 쏟아붓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자발리아 난민촌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27일 유엔 총회는 ‘민간인 보호와 법적·인도적 의무 준수’(A/ES-10/L.25)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대 행위 중단으로 이어지는 즉각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에 기권했다. 10월 30일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지와 UN 총회에서의 일에도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제노사이드에 침묵해 준 남한 정부에 고마움을 표한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카이로에서 테헤란까지, 이스탄불에서 바그다드까지 중동 전역의 시민들이 연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런던에서는 10월 22일 50만 시민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에 참여하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글래스고, 파리, 바르셀로나 등 유럽에서도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직접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홀로코스트가 재현되어선 안 된다고 “네버 어게인”, “지금 당장 휴전”을 외쳤다. 뭄바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케이프타운, 멜버른, 온타리오, 오사카, 타이페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끊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휴전을 외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민중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식민 지배를 규탄하는 하나 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주의 종식을 위해 투쟁하는 목소리와 함께하고자 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것의 가장 절박한 실천은 즉각적인 휴전과 학살 중단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존엄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에 함께할 것이다. 평화를 열망하는 세계 민중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휴전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봉쇄를 즉각 해제하라!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포함한 모든 군사 점령지에서 당장 철수하라!
-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포괄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가자지구 공격 중단을 요구하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총 90개 단체)

2023년 11월 21일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올라온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정부의 말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 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이다. 젠더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 없다.

1991년 9살 때 자신을 강간 한 이웃집 남성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당방위 사건이 연달아 있었다. 1992년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3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의 기나긴 민사소송 끝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분노와 고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연대로 젠더폭력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 시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외면하고, 젠더폭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한다.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의 답변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임금이 체불되고, 차별과 폭력 피해가 있을 때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삭제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라!

2023. 11. 2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외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 759명/단체 일동

2023년 11월 22일

[박민 KBS 사장 규탄·방송법 공포 촉구 공동성명]
성평등을 퇴행시키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파괴하는 박민 KBS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공영방송 정치 독립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11월 13일 박민 KBS 사장이 취임했다. 박민 사장은 법조언론인클럽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공영방송 사장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박민 KBS 사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민 사장의 임명이 재가되자마자 KBS에는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KBS 메인뉴스 <뉴스9>의 이소정 앵커는 12일 저녁 하차 통보를 받았다. KBS는 2019년 11월 지상파 평일 메인뉴스의 메인앵커로 이소정 앵커를 발탁했다. 최초로 지상파에서 여성이 평일 메인뉴스 메인앵커를 맡은 것으로 당시 시민들은 KBS의 성평등한 변화를 응원했다. 박민 사장은 이런 변화를 지워버렸고, 이소정 앵커는 시청자에게는 마지막 인사를 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개편된 '뉴스9'의 메인앵커는 4050 남성 일색이다. 뉴스룸의 성평등이 사라진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진우 라이브>, <최강시사> 진행자도 하차를 통보받았고, KBS 2TV의 <더 라이브>는 4주 대체 편성 후 폐지를 결정했다. KBS 시청자 청원에는 <더 라이브>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지만 KBS는 아직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폐지를 확정했다.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경우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박민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청자와 노동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재확인될 수 없다.

박민 사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KBS가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었다”며 사과했다. 불공정 보도 사례 중 하나로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윤지오 씨가 9시 뉴스에 출연했던 것을 언급했다.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은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이고,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민 사장은 관련 보도를 불공정 보도로 꼽으며 진상규명과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폄하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박민 사장 자신이다.

11월 17일 MBC·SBS·TV조선·JTBC·MBN·채널A가 메인뉴스에서 첫 번째 리포트로 ‘정부24 마비’를 다룰 때, KBS만 APEC 정상회담을 첫 번째 리포트로 다뤘다. KBS는 정부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시민이 아닌 권력자를 향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박민 사장이 말하는 공정성인가. 공영방송의 위기를 내세우며 오히려 공영방송을 더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 박민 사장은 자격이 없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후 성평등은 퇴행했고,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시청자 주권을 훼손하며 공영방송의 시스템 전반을 망치는 박민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부적격자인 박민이 KBS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방송법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을 정치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9일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노총 장악법'이라는 허위선동을 하며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정치권과 자본에 독립적이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읽어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대통령은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2023년 11월 22일

경남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23년 12월 1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선언문]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2023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18.9%p,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0%로 남성(30.6%)에 비해 15.4%p 많고(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돌봄, 가사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며,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도록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부터 정치는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여성을 정치와 정책에서 지우고,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그 결과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전략을 또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어 총선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수년간 기존의 남성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라고 꾸준히 외쳐왔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_내_성폭력_사건, 2018년 미투 운동,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 여성들은 일상에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의식하고 본인의 경험을 용기 내어 말했으며 개인의 경험 말하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어떻게 답을 하였나.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 공천 30%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양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평균 11.81%에 그쳤으며, 그 결과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고학력·고소득·이성애·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21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21대 국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2020년 총선뿐인가.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여성·성평등 지우기는 심화되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후보자들의 정책 중 성평등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선거 후 정치권은 성평등에 투표한 여성의 투표행태가 아닌, 20대 남성의 투표행태에만 주목하였다. 그리고 소위 ‘이대남’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에 반하는 군가산점제 부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러 번의 주요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과 혐오를 택하는 행태는 한국 남성 기득권 정치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외침을 무시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제 역할을 방기한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성 폭력과 피해자 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방기를 선언하였다. 한편,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조·시민사회·언론 탄압 등 다방면에서 퇴행과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실종되었으며 여성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남성 기득권 정치가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으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하며,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퇴행과 암흑의 시대를 우리의 연대가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투표장에 가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22대 총선에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후순위에 두거나 삭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 우리의 요구를 갈등이나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 정치, 우리를 여의도 셈법에 의한 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대할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후퇴하는 여성·성평등 정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 자본주의·군사주의·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 주권자의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정당이 젠더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공천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후보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감시하며 심판할 것이다. 남성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도록 전국 곳곳에서 힘을 모아낼 것이다. 국회가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2024년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UPPER)>는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퇴행을 거듭하며 밑바닥으로 치닫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묻혀있던 여성·성평등 정책을 정치의 수면 위로 띄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허물고 그 위에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세울 것이다!

2023년 12월 12일

참여단체 명단(전국 1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외전화, 강화여성외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 결혼,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한부모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인권동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우리더불어이웃,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워티, 청주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함께크는여성올림,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년 12월 13일

[기자회견문]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북도 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고자 했던 평화의 안전핀이 사라지고 있다.

2018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끝에 모든 남북, 북미대화가 단절되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제 급기야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장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되었던 GP의 복원과 재무장은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신원식 국방장관은 충돌시 '즉각적인 응징'을 주문하며,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보다 오히려 확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지난 70여년간 쌍방 2km씩의 비무장지대, 너무나 좁은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력 밀집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우발적 충돌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경험도 적지 않다.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할 첫걸음이다.

이미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군사훈련은 올해 더욱 빈번해졌고, 날로 그 규모를 확대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서해 5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3월, 대규모 전단살포와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되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군사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우선 멈춰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군사 합의서 1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과 북은 9.19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북미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 채널 복원에 힘써야 한다.

-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한반도를 원한다.
- 우리는 우리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완

전한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사)겨레하나, (사)경기민예총, (사)경기민예총 과천시지부, (사)경기민예총 남양주시지부, (사)경기민예총 부천시지부, (사)경기민예총 성남지부, (사)경기민예총 수원지부, (사)경기민예총 시흥지부, (사)경기민예총 안산지부, (사)경기민예총 안산지부, (사)경기민예총 양평지부, (사)경기민예총 여주시지부, (사)경기민예총 용인지부, (사)경기민예총 음악위원회, (사)경기민예총 의정부지부, (사)경기민예총 이천지부, (사)경기민예총 평택지부, (사)경기민예총 하남지부, (사)경기민예총 화성지부, (사)경기민족국연합, (사)양심수후원회, (사)인천여성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짐깃다리 교육공동체,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철도, (사)평화통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구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안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용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총남본부, AOK한국, 가톨릭농민회, 강동연대회의,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파주지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민족미술인협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양시민회, 광주진보연대, 국경선평화학교, 국민주권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김포농민회, 남북교육연구소,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대경진보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미군세균실험실 추방과 미군기지문제 해결 부산대책위,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 서울연합, 벽을 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 부산민중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생명평화포럼, 서울겨레하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안성농민회,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여주농민회, 연천군농민회, 연천농민회, 연천희망네트워크, 영토문화관 독도, 예수살기,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울산진보연대, 원주시군농민회, 이천농민회,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통일평화변명운동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민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선군농민회,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김포시지역위원회, 진보당 동두천연천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강화분회, 진보당 파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 포천가평(양주)지역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서울지부, 진보대학생넷,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천도교청년회, 철원군농민회, 춘천농민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나무(고양), 통일로, 통일로가는평화의소녀상(파주), 통일맞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염원시민회의, 통일의길, 평택농민회,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박람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농민회, 포천시민사회연대, 한강하구평화센터, 한국DMZ평화생명동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흥천군농민회, 흥천군여성농민회, 황성군여성농민회 (203개 단체)

강현희, 권용근, 김금성, 김승균, 김운수, 김윤희, 문영미, 민병무, 박승렬, 박홍섭, 송병일, 안재웅, 오은미, 유용균, 윤용식, 이근준, 이덕규, 이문상, 이삼열, 이용수, 이용위, 이홍정, 임구호, 장희숙, 전덕용, 정동익, 정만기, 정세일, 정혜열, 조영건, 조찬형, 채수근, 최병남, 한기양, 한찬욱, 황진도(36명)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 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민번호 제출)

회 원 가 입 서

이 름		주민번호	
이동전화		전자메일	
집 주소			
거래은행		예금주	약정금액
계좌번호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회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 회 원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님 <input type="checkbox"/>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하는 회원		
가입 일자			

- 388-810005-03104 (하나은행)
 ● 후원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계좌 064-157851-13-101 (우리은행)

2024년 제28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 2024년 2월 6일

발행인 : 김정수

발행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0722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_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02-929-4847 / 팩스 02-929-4843 / 이메일 wmpeace@naver.com

홈페이지 www.peacewomen.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wmp

후원계좌: 388-810005-03104(하나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